

생명 · 협동운동의 이론과 실천

모심과 실림

10호



2017 가을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 · 협동운동에 대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모심과살림 10호 2017 가을

등록번호 서초, 사00065

발행인 황도근

편집위원 구현지 김동숙 김이경 박지은 오단이 전유미 홍덕화

편집 김현 string@hansalim.or.kr

디자인 한송(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designstudio.dadarm@gmail.com

인쇄 세진인쇄

퍼낸날 2017년 10월 14일

퍼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3층

www.mosim.or.kr mosim@hansalim.or.kr 02-6931-3604

책값은 8천원입니다.

목차

퍼내는 글 나와 우리가 되는 공간 ●편집부	4
특별좌담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유기농을 다시 생각한다 ●윤병선, 김영규, 박용준, 유병덕, 정은정	7
기획 환대와 돌봄의 공간	
살아 있는 공간, 살리는 공간 ●이영범	37
마을의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들 ●박내현	49
독일 마더센터를 통해 본 돌봄과 환대의 공간 ●유현실	59
사회의 부역과 거실을 만드는 일본의 어린이식당 ●윤영희	70
이슈 운동의 관점으로 사회적응을 바라보다 ●주세운	84
노동 위기의 시대, 협동조합에서 노동과 한살림의 과제 ●정규호	97
밀레니얼 세대의 일과 삶 - 밀레니얼 세대, 나의 이야기 ●김민경	114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기 ●서동재	120
연구자의 시선 IMF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의 성찰 ●김정원	132
생태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국 협동조합운동 ●원테진	145
기고 이웃나라 대만이 궁금하다 - 대만 사회, 농업과 먹거리운동 ●허남혁	160
책 생태주의 시선에서 역사를 다시 쓴다면 ●강태원	178
변화하는 지역, 변화를 만드는 지역 ●임경수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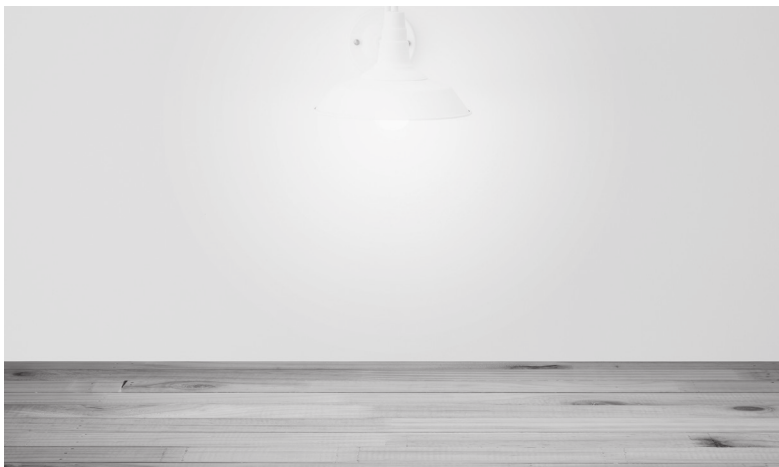
나와 우리가 되는 공간

편집부

공간空間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비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는 의미가 새삼 새롭게 다가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기능과 모습을 한 공공·공유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공의 기획으로 기존 공간들이 새롭게 재탄생되는가 하면, 시민들이 공동의 필요와 열망을 담아 자발적으로 만들고 협동하며 운영하는 공간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고 동시에 만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들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고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합니다.

『모심과 살림』에서는 농촌을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바라볼 것을 제안한 지난 호 기획에 이어, 자본과 소비, 단절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도시 속에서 틈새를 확장하고 삶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가능성을 탐색해보았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과 관계의 의미를 ‘환대’와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살리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가득 들어선 상업 시설과 소비 공간, 배제와 분리의 공간들 틈에서, 열린 환대와 돌봄을 주고받는 공간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필자 이영범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다양한 방식을 담아주는 공간’으로서 비어 있는 공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드나들이 있기 위해서는 여백이 있어야 하고,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 무엇을 채울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비어 있는 채로,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보기를 권합니다.

빈 자리가 있는 공간은 또한 환대와 섬과 돌봄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공간입니다.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도 않는 공간. 서울 이문동의 작은 마을카페 ‘도꼬마리’에서 머물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래서 조금 특별합니다. “뜰썩썩, 한남썩, 맘썩 같은 혐오가 쏟아지는 시대에” 나와 다른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공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사회 속에서 자리와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자리를 얻

고 서로 이름을 불러주며 비로소 환대하고 환대받는 존재가 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마더센터와 일본의 어린이식당처럼 사회의 거실과 부엌을 넓혀나가는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공간은 무수한 관계들이 탄생하고 확장해가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간에서는 밥 먹기와 수다 같은 소소한 일상적 행위들 속에서 돌봄의 정서와 관계망이 형성되고, 때로는 어떤 ‘작당’이 즉흥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 중에 상당수는 그 토대가 되어준 공간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온라인 공간이 관계망과 소통의 중심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공간’에 목말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들이 가진 재능, 시간, 선한 의지 같은 유무형의 자원들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음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는 곳, 가능성의 터전을 만드는 일이 앞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열려 있고 드러나들이 자유로운 공간, 낯선 이웃들과 만남이 일어나고 섬과 돌봄이 가능한 공간들이 살림운동의 새로운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밖에도 농업·먹거리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사회 변화 흐름을 잘 살피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그 내용들이 실천의 현장과 일상에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알려내고자 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 흐름을 탐구하며 만들어가고 있는 원테전 교수의 이야기처럼 “실질적인 실천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의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좌담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유기농을 다시 생각한다

진행

윤병선 | 건국대 교수,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

참석

김영규 |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박용준 |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회장

유병덕 |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정은정 | 농촌사회학자, 『대한민국 치킨전』 저자

유기농

우리나라는 관행농이 지배하던 매우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유기농'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찍이 자각한 농민들이 앞장서 '유기농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뜻을 함께한 도시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직거래를 통해 '생협운동'을 시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운동에 담고자 했던 본질적 가치들에 대해 다시 짚어봐야 할 때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유기농의 관행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기농3.0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생협운동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태'는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만큼 커다란 고민과 성찰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의 농업과 먹거리 영역의 정책과 운동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피고,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개선을 위해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때다.

〈모심과 살림〉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시 유기농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했다. 농산물의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 환경과 과정,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나아가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유기농운동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살충제 달걀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

윤병선 몇 해 전 가수 이효리가 ‘소길택 유기농 콩’이라는 라벨을 붙여 지역 장터에서 판매했다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표기했다는 이유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계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유기농’이라는 것이 제도에 의해 일괄 재단되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인증 마크가 아닌 본질적인 유기농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기농운동과 농업살림의 확장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아닌가 한다. 최근 불거진 살충제 달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과 논의가 ‘안전’이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보다 산업화된 먹거리와 농업, 공장식 축산의 현 지점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좌담이 그런 부분을 다시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은정 연초부터 조류독감 때문에 바빴다. 달걀은 2차 가공까지 더해져 소비의 여파가 확실히 더 큰 것 같다.

우선 이번에 살충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두 가지가 검출됐는데, 통계를 보면 허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온다. 허용 기준치보다 더 많이 썼다는 것인데 그만큼 살충이 안 되었다는 뜻이다. 약재저항성이 생겼다는 문제를 더 들여다봐야 했다. 쓰면 안 되는 것을 썼다는 데 대해 범죄화했는데, 실제로 비펜트린 성분이 더



많이 적발됐다는 것은 현장에서는 나름 허용된 약품 내에서 애를 썼다는 거다. 그게 농가가 가졌던 근본적인 한계가 아니었을까. 민변에서 살충제를 판매한 기업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려 해도 당사자 농민이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생산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직접 나서서 의견을 피력해본 경험도 적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달걀 산업은 공식적으로는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번에 피프로닐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키트가 있다고 먼저 발표한 게 CJ와 SPC였다. 당국이 사기업을 못 쫓아간 거다. 산란계의 기업계열화에 또 하나의 물꼬가 트인 것 같다.

수입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조류독감 당시 달걀을 수입하고 유통해 봄으로써 패킹, 운송, 검역, 소비자 반응까지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번에도 바로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완벽한 기시감이 든다.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에서 물량만 조금 달린다 싶으면 이런 카드를 꺼내왔다. 생란 자체로는 수입을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2차 가공 형태로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소비자들의 저항 심리도 많이 낮아진 것 같다. 농가에서도 농업 진출을 목표로 하던 기업들에게 달걀 산업마저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윤병선 국산 달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심리도 낮아지고, 대기업에서는 또 하나의 안전마케팅으로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사태가 달걀 생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층적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박용준 한살림에 유정란을 공급하는 36개 유정란 농가 가운데 31곳은 야마기시 계사 형태, 3곳이 동물복지농장, 2곳이 전통

(재래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DDT 성분이 검출된 재래닭 유정란의 경우 토양 잔류로 인한 문제로 밝혀지면서 조합원들의 실망이 컸으나 정직한 소통과 대응 노력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다시 믿어 주셨다. 하지만 해당 달걀을 많이 이용한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살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에 의한 검출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하지만 토양 등 다른 요인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점검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 최근 한우, 돼지, 우유, 오리, 닭고기에 대해서 320가지 성분을 조사하고 불검출로 나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등 대응이 어려운 조건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토양과 기후 환경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잔류농약과 같은 문제는 피할 도리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있다.

윤병선 말씀하신 대로 농업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반면 검출·측정 키트는 더욱 정밀해지는 상황이다. 안전 기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용준 한살림 유정란 농가 대부분이 아마기시 방식의 계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란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유정란 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가사료를 급여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자가사료를 먹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된다. 원료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될지 알 수 없어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규

일반적인 달

걔 생산 과정에서 살충제를 뿌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언젠가 터질 거라는 예측 또한 하고 있었다. 일부 기업 등 가능한 단위에서는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 중심의 인증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결과를 누가 만들어냈는가 하는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결국 다시 농민의 문제로 귀결되고 말 거다. 제일 큰 문제는 케이지 사육 문제지만, 토양에서 검출되어선 안 될 것들이 검출됐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가 주도해왔던 경쟁력과 효율성 중심의 농축산업 정책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농민들에게 농약과 제초제와 비료를 팔며 돈을 벌어 왔던 기업의 문제도 같이 있다. 그런 문제를 배제시키고 농민들만 잡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는다.

조류독감이든 구제역이든 사회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 결국 소농들이 죽어나가고 기업들이 돈벌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농업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또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 측면이 다시 강화되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해썬HACCP 농가 중 59%에서 살충제가 나왔다. 초기에 살충제 검사를 물량이 많은 대농장 중심으로 했는데, 언론 보도는 ‘여기보다 더 관리가 안 되는 작은 농가들은 얼마나 더 심각할 것인가’라는 태도였다. 식약처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만 강화하고 근본 처방을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윤병선 이번 일을 통해서 소규모 생산 농가들이 더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인증 시스템 자체가 본래 규모화된 농가들의 이익이 훨씬 더 쉽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공장식 축산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보다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강화로 가고

있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표준화이기 때문에 공장식 농업이 정당화되는 과정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유병덕님은 최근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유병덕 우선 이번 사태를 두 가지 사건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던 사건, 그리고 DDT가 검출되었던 사건이다. 둘은 같은 시기에 있었을 뿐 다른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두 사건을 동일시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게 가장 큰 오류다.

전자의 경우 우리 축산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동물복지형으로 가자는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사건이고, 인증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생산자들의 양심의 문제, 인증 시스템의 결함 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위반자들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하면 된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DDT가 검출됐지만 생산자

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해당 생산자에 피해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껏 공개되지 않아 왔지만 방사성 물질이나 잔류농약은 계속 나오고 있다. 당연히 터질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태도는 어땠어야 하는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축산업을 선구적으로 해온 분들과 건강한 닭들은 보호해야 할 상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식품안전의 관점으로 본 거다. 정확히 말하면, 식품안전 차원에서 보았을 때 법으로 정한 식품안전 기준으로는 결함이 없는 제품이었다. 그에 더해서 건강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사육 방식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달걀보다 건강한 달걀이었고 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닭과 달걀을 살처분한 사건, 이것은 유기농업의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단순히 인증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과 음식을 바라보는 근본 철학에 닿아 있는 문제다. 식품안전 개념이 확대되고 정착된 배경을 다시 보면, 1960년대 미국에서 제조업을 확대·강화시키기 위해 노동력 관리가 필요했고, 그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시대, 우리 친환경농산물이나 동물복지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안전을 넘어선 건강이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품을 먹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과 식물이 건강해야 하고, 흙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유기농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먹을거리에 대한 철학 문제다.

윤병선 안전이 정치적 접근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미국 사회에서 먹거리 문제의 심각함이 분명히 드러났던 시기에 나온 정책적 대응이었다고 본다. 산업적 농업이 피할 수 없는 먹거리 안전이라는 문제를 근본 지점에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체제로 들어갔고, 유기농산물 인증의 도입도 이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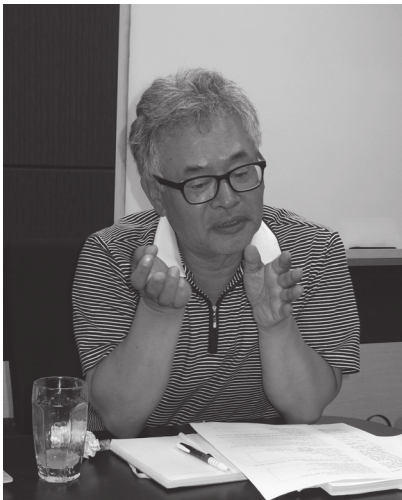
서 이루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먹거리 불안이 미국식 발전모델, 녹색혁명형 농업, 산업적 농업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재 중심의 인증이 이루어지다 보니 녹색혁명을 내세우면서 농자재를 팔아먹던 기업들이 유기농자재를 팔아먹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인증제도가 농을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농자재 업체 등의 시장 창출 기능이 더 컸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국가가 하든 민간기관이 하든 제3자 인증은 기본적으로 속임수에 강하다. 이는 인증제도를 통한 유기농의 확산을 주도해 왔던 아이팜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조차 유기농 3.0을 제창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신뢰 관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1970년-80년대 유기농업 하셨던 분들의 신뢰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정부가 이른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인증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 결과중심 체계가 되어 버렸다. 어떤 농자재를 썼는지가 중요하고, 순환에 대한 고민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버린 측면이 있다.

김영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 국가가 만든 제도이자 더 큰 농가들 중심으로 왔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가가 하는 얘기도 믿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한 번도 공정하거나 투명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었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가 인증을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인증을 한들 바뀔 것인가. 인증의 처벌을 더 강화하고 검사 항목을 늘림으로써 신뢰가 쌓일 것인가. 거꾸로 현재 있는 불신 이유

들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 될 거다. 또 하나는 국가가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자기 과제를 놓치고 있다. 안 되면 수입하면 된다는 정도의 인식 수준에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

이런 속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수 이효리의 얘기를 제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수첩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이 뭐가. 진짜 한 건가, 턱걸이라도 합격점을 받은 것인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시험 커트라인만 넘기면 80점이나 100점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금 인증 농가들이 느끼는 것도 그 지점에 있다. 3년에 걸쳐서 인증 받았으면 되지, 30년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보상한다거나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국가인증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항상 그 틀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용준

인증기관 인증을 계속 받아오면서 드는 의문은 국가가 민간에 이양한 인증 권한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뭘까 하는 것이다. 현재 모든 평가는 검사 결과물이 안전한가, 안전치 않은가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인증 방식에 대해 친환경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공공연히 문제라고 얘기한다. 그럼에도 실

제 내용은 계속 안전을 강조하며 검사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살림 내에서도 물품에 대한 인식이 바로 안전한 먹거리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농약 검사와 안전성 검사가 강조되고, 기계는 점점 더 정교해지며 검사항목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토양 검사까지 시행됐다. 전에는 중금속 검사 외에 토양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 인증제도 자체가 검사결과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농민들로서는 당혹스러운 게 현실이다. 한살림 생산자들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유기농을 해온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농약 검출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긴다. 인증 취소라는 황당한 결과를 받게 되는 거다. 생산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환경과 땅을 살리고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지만 주어진 현실은 생산자들의 노력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자들도 안전성을 의식한 관리에 방점을 두게 된다. 생산자조직 차원에서도 관리를 체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쉽다. 유병덕 님 말씀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조합원의 당연한 관심이 검사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참 안타깝다. 그래서 한살림의 경우 정부 인증 제도와는 별개로 검사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한살림 자주인증제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가 숙제다. 이미 문제의식은 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한살림 생산자로서 고민이다.

윤병선

2014년 전국 한살림 생산자회원 의식조사에서, 정부 인증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생산자-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도 높게 나왔지만 더 높게 나온 건 ‘한살림 자체의 자주인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정부 인증제도로 인해 농자재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있고, 사용하는 농자재를 기준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다 보니 진정한 유기적인 순환의 체계를 갖고 농사를 짓는 그 자체는 인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 결국 유기인증시스템이 유기농업을 저해하는 아이러니,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유기농산물이 단지 그저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정보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제3자 인증시스템이 갖고 있는 허상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은정 20~30년 생협 역사에서 혼입사건 등 비슷한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다. 생협에서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 한계선 안에서 먹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공감대와 교육이 있었어야 하는데, 생산자만 압박해왔다는 느낌이다. 그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다시 소비자에게 온 측면이 있다.

현장에서는 기후 환경 문제도 있고 고령화가 심화되어가는데 해썹 같은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결국 서류와 시설 싸움이다. 인증을 받더라도 유지가 훨씬 어렵다. 인증의 종류가 많아진다고 해서 먹거리가 더 안전해지거나 소비자 신뢰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다. 어쩌면 이번 살충제 달걀이 이 점을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썹의 취약성과 인증제도의 허약성에 대해 인정하고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학교급식에서도 달걀 대체품을 찾느라 영양사 분들이 골치를 앓았다. 축종이동 가능성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우유에 대해 요청해서 우유에서 걸리면 감당하시겠냐고 했더니 우유까지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다. 소비자들

에게 토양전수조사를 원하시냐고도 물어봤다. 그걸 감당할 정도로 우리는 훈련이 돼 있는가. 다들 침묵하셨다. 모든 것이 100% 투명하게 밝혀진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박용준 우리가 농사짓는 땅이 근대화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로 오염된 역사를 인정하고 한살림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토양검사를 해서 협박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태도는 없어져야 한다. 함께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인증제도의 명과 암

윤병선 현재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3년 동안 무농약을 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단체를 만났는데, 이들은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이라는 용어 대신 생태농업(agroecology, ecological agricultu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종자를 이용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안 쓰는 것은 유기농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신들은 인증을 거부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기(organic)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증이라는 제도는 농민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에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인증을 받지 않고 시장에 팔 땐 어떠냐고 했더니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믿고 자신들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값을 특별히 비싸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다. 투입물을 시장에 의존하지 않다보니 생산비가 적게 들고, 그

것이 생태농업의 장점이라고 했다. 앞서 아이폼의 유기농3.0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이폼 스스로가 인증 중심 체제를 유기농2.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거리 유통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지역에 바탕을 둔 순환 체제를 고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일종의 진입장벽이 되었다는 점과 결과 중심의 사고로 인해 과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정착이 유기농업 운동의 확산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지만, 아이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루돌프 슈타이너가 얘기한 유기농의 가치, 유기농1.0에서 추구했던 가치와는 대단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유기농3.0의 등장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폼도 제3자 인증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제도를 고민하면서 PGS참여자인증제도 등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친농연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김영규 친농연은 전체 농민들의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국가 제도를 개선해내고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자주인증이나 참여형 인증도 필요하고, 다양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90년대 말에 국가가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해 지원하기 시작했고 인증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의 단계를 우리로 치면 유기농1.0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자각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왔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성장해온, 아주 느리고 더뎠지만 가치를 소중히 알아줬던 소비자와 생협이 있었다.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법·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내면서 급성장을 맞는다.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약 0.1%에서 2009년에는 12.2%로 증가한다. 0.1%까지 오는 데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불과 10년 정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다. 이걸 국가와 자본이 가진 힘이다.

물론 여기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양적인 성장은 만들어냈지만 농사 방식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결과 중심적이 되고 관행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생산 과잉이 나타났고, 농민들이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유기농1.0이라고 전제한 그 무렵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관계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것을 감안한 가격 결정을 공히 같이 했다. 생산이 과잉되고 대량생산·대량소비되는 구조에서, 더구나 물건이 넘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가격결정방식 또한 관행화돼온 것이다. 제가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건 소비자 의식의 관행화 현상이다. 생협들도 날카롭게 자기 비판 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보는데, 과거에 소비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나. 농민들과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썼고, 교육을 했다. 그런데 규모화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서로 경쟁해서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여 놓으니까 소비자들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별레 먹으면 당연히 반품인 거다. 한 번 더 생각하지 않는다. 유통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과 거의 유사해져버렸다. 생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낮아졌다. 실제로 인증제도를 포함해 국가가 개입해서 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갖는 명암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 3.0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2.0의 꼬트머리에서 벼랑 밑으로 떨어질 건가 말 건가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윤병선 그래서 3자 인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가 2013년 무렵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현실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 중심의 인증 체계가 신뢰와 안전을 담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증 받은 농산물은 안전한 것이니 믿고 먹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국가가 책임 지지 않고, 오히려 인증을 강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공포장이나 클린룸에서 안전을 찾는 방식이 되어버리면 우리 먹거리뿐만 아니라 농업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용준 가령 과거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를 망칠 지경이 되면 조합원들이 먼저 나서서 약을 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안전성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선 그럴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다.

김영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과잉으로 넘쳐나다 보니 소비자의 양해와 합의하에 병충해에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소비가 보장되던 시대가 끝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사먹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유병덕

인증의 긍정

적 역할도 있다고 본다. 국가 인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에서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였다. 그걸 되돌리자고 할 순 없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한편에서는 깨끗한 산이나 아마존 밀림을 개발해서 유기농을 하면 좋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도 있다. 예컨대 가장



결정적인 예가 물 기준이다. 우리나라 기준은 물(농업용수)을 검사해서 어느 기준 이상이어야 유기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의 유기농 기준에서 물과 관련된 내용은 농사지으면서 수자원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 정도다. 우리의 경우 높은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물 검사를 유기농 기준에 넣었다. 깨끗한 물로 유기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다. 그래서 유기농 농가들이 지하수를 폈다. 지금 지하수에서 농약이 나온다.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됐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됐다.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벌이 없어지는 데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수입해 쓰는 문제, 유박 등 온갖 자재들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고 순환고리가 다 깨어지고 있다. 옛날 일반 농가에도 있던 퇴비장이 다 없어졌다. 순환이 원래 있었다. 유기농이 아니어도, 지금 추구하는 것은 농약 불검출이다. 어떻게든 농약 안 나오는 데 초점 맞춰서 하고 있는 거다.

이번에 살충제나 DDT가 안 나온 농가들은 면죄부를 얻었다. 똑같

은 생산방식을 취했지만, 다만 안 나온 거다. 지금 결과가 과정을 다 장악해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과정이 결과를 만들지 그 반대 일 수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과정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 인증제도로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다. 토양의 잔류농약 검사는 한국에만 있는 유기농 기준이다.

김영규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유기농업을 하면 과거에 오염돼 있던 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화된다. 토양도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으면 오염이 계속 줄어들 것 아닌가.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수질이 1년에 1미터씩 오염돼 내려간다고 한다. 그건 국가가 인정해야 된다. 농민들은 국가 정책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왔던 거다. 지금 하는 검사와 분석은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토양과 수질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본다. 유기농업 쪽에는 워낙 많은 기준들이 있다 보니 마치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우려스러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고구마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관행농가에서는 점착제 기능을 하는 식용유에 미원을 타서 뿌린다고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구마에서 미원 맛이 난다. 몇십 년째 미원에 입이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맛있게 느끼는 거다. 지금처럼 식품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식품을 내버려둔다면 농민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달지 않으면 먹지 않는데 도리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농민들은 기술적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달지 않은 게 없다. 유럽에선 아이 머리만 한 이런 사과를 볼 수가 없다. 이걸 만들게 하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지울 수 있나. 그렇다고 소비자들에게만 얘기할 수도 없다. 국가가 먹을거리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짜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자기 의무로 하면서 소비자-국민들을 계속 바꿔내야 한다.

윤병선 한살림의 경우 2009년의 경험이 있다. 아산에서 용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증이 취소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사실을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약정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평상시보다 더 많은 약정계약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먹거리 안전 문제도 신뢰에 의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살충제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방식은 그야말로 식약처의 권한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사후적 형태이다 보니 생산 농가를 범죄집단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짙다. 그동안 인증제도를 주도해온 정부가 취할 책임 있는 자세라면, 예를 들어 그동안 인증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고 그 한계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우리 먹거리, 농업의 체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은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빠져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유병덕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과정을 놓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사례인데, 2002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그 이전 10년간 유기농과 관행농을 포함해 총 94,000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잔류농약 검출 결과를 발표했다. 유기농 가운데 23%에서 농약이 검출됐고 비유기농에서 73%가 검출됐다. 이 결과를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했다. 발표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놀랍다. 유기농이 관행농보다 농약에 노출될 확률이 1/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3대 73%의 결과는 정성검사, 즉 OX의 결과이고, 농도까지 같이 따지면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통상 유기농에서 검출되는 비율을 5% 정도로 본다. 이

를 감안하면 농약에 노출되어서 건강을 해칠 확률이 1/60 정도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0은 아니다. 매우 현저하게 낮지만 0이 될 수 없다는 거다.

이번에 DDT가 검출된 달걀을 이용한 분들 가운데 가족 중 환자나 아기들을 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검사해서 안 나온 것을 공급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유기농 으로서는 감수해야 할 수치라는 거다. 대신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걸 보고 20~30%의 돈을 더 내고 소비하면, 10번 중 2번은 나온 걸 사더라도 8번은 안 나온 걸 사게 될 확률이 정해져 있다는 거다. 그런데 라벨이 안 붙은 걸 사면, 으레 7번은 농약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먹으면 된다는 거다. 이게 바로 그 결과이고, 이것을 과감하게 발표했다.

김영규 그 사회의 상식선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병덕 미국은 유기농 인증 절차에 농약 검사가 없다. 생산 과정만 확인되면 결과가 개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닭의 비펜트린 성분을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나? 공장식축산 방식을 보면 뻔히 개연적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정만 보고 나간다. 전 세계가 그렇다. 한국만 예외다. 다른 나라들은 사후 관리 할 때도 농약검사를 안 하는데, 미국은 특히 하게 사후관리 할 때는 전체의 5%를 검사한다. 거기서도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 검출이 되는 경우 일정 수치 이하이고 생산 과정이 타당하다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철저하게 과정 중심이다.

윤병선 한국만 예외적으로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미국의 인증제도에서도 투입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유기농시장은 대규모 산업화된 유기농이 주도하는 시장과 지역의 가족농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이분화되고 있다. 어쨌든 인증 기준에서 투입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요소로 되면서 유기농업도 관행농업과 비슷한 과정을 걷게 되었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투입재 중심의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농약 검사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규 미국은 평균 경작면적이 90만 평 정도 된다. 우리는 4,500평 정도다. 유기농업 경작면적은 그보다 더 낮다. 그 농지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연히 농약 성분이 날아 들어올 수 있다. 무슨 수로 막겠나. 그러면 우리는 더 넓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다.

친환경농업 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윤병선 그동안 정부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생산농가의 양적 확산에 중심을 두었고, 그 주요한 수단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었다. 여기에서 ‘농피야’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김영규 사실 친환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주변

부 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왔다. 식품기업을 살렸고 한쪽으로는 자재와 농기업들을 살려온 게 우리 농업이었다. 그 한 부분으로 친환경이 들어갈 때도 인증시스템을 컨설팅하고 교육해주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었다.

윤병선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가치는 외부 투입재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순환 체계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는데 정부의 유기농업 정책이 인증에서부터 관행농업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투입되는 것만 달라진 셈이 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영규 개인적인 판단에서, 국가가 개입해 얻어낸 성과들이 있었다고 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0.1%에서 10여 년 만에 12.2%가 되었듯이. 그런데 2009년에 정점을 찍고 2015년에는 농가 수가 19만 8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어든다.

윤병선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친환경농가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국가 인증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부분도 있다. 그 이후에는 2016년 저농약인증의 폐지에 따라 저농약인증 농가가 무농약, 나아가 유기농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관행의 길로 들어서면서 친환경농가가 급감했다. 또한 2000년대 초 중반 생협 조합원수의 급격한 증가나 친환경 급식시장의 확대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김영규 오히려 그건 부분적이라고 본다. 농산물이 부족해서 매장에 가도 없으니까 소비자 조합원을 늘릴 수가 없다. 이후에 생산

과잉이 되고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조합원 늘리는 건 아주 쉬운 일이 된다. 2004~2005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생산과잉이 되면서 첫 파동이 일어난다. 2012년경에는 무려 8천억 원어치의 농산물이 갈 데가 없어서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로 경매되기도 했다.

차라리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뒀으면 아주 더디지만 즐거운 성장이었을 수 있겠다고 상상해본다. 그때는 인증제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농민들이 많았다. 저항하기도 했다. 실제로 필요를 못 느낀 거다. 내 농산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인증 마크를 붙이고 검사하고 분석하고 비용을 들이는 게 고비용 생산과 비싼 농산물을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윤병선 그러면서 인증과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묶이다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획일화된 측면이 있다.

김영규 비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동일한 인증기관에 대해서 3년 연속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한다. 농가와 인증기관이 유착했을 것이라는 불신을 해소해주겠다는 거다. 이게 우리 농정 방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3회 연속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과 관계된 지원보조뿐 아니라 농민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농민 자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겠다는 거다.

유병덕 앞서 미국의 경우와 비슷한 확률이라면 10명 중 2명은 다시 농약 치는 농법으로 돌아가라는 정책인 거다. 토양에서 혹

은 농산물에서 농약이 나오면 유기농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원래는 토양과 농산물에서 농약이 나왔기 때문에 유기농을 했던 거다. 완전히 잘못된 접근인데 이걸 문제제기할 경로가 없다. 결국 선각적으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 되었고, 몰래 와서 시료를 채취해가기도 한다. 그 정도로 예비범죄자, 예비위반자로 설정하고 특별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몬태나 정부를 만났을 때 소비자들이 농약 나온 걸 알아도 괜찮다고 물었다. 놀랍게도 대답은, 일단 농약 검사도 안 하지만 그걸 왜 소비자에게 알려주느냐고 되물었다. 합법적으로 기준을 지켜서 농사를 잘 짓고 있다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은정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도 친환경법에 따르면 소명의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나. 의도적 혼입이다 아니다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 소명 기회도 안 주고 식약처에서 발표해버렸다. 불법이고 일종의 국가폭력인데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농민의 인권이나 복지는 깡그리 무시된 과정이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전반적으로 커져 있어서 농가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다소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윤병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그동안 유기농업운동을 해왔던 농민들이 이른바 잠재적 범죄자들 처럼 다루어지는 상황인데, 뜻과 의지를 갖고 농사를 지어온 유기생산농민들의 의욕마저 앓아갈까 걱정이다. 지난 2016년에 저농약인증이 완전 폐지되면서 친환경 농가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데, 유기와 무농약 농가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비의도적 오염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농민 개인이 지게 되다보니 친환경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영규 그런 사례는 정말 많다. 20년 이상 유기농업을 한 분이고 고립된 지역에 약을 칠 만한 환경도 아닌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왔다. 그럼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인증 취소다.

유병덕 알 수 없는 경우는 대개 분석의 오류, 과학의 역설이다. 과학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기농민들을 다시 관행농으로 되돌리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그 매커니즘을 알고 있는 일부 비양심적인 농업인들은 오히려 이용한다. 양심적인 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비양심적 농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건 분석을 하지 않고 유기농 인증을 하고 있는 거다. 개인적으로 잔류농약 검사 폐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김영규 200% 동의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싶기도 하다. 사회 전체에 불신구조가 워낙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다.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고 본다.

패러다임 변화와 신뢰의 재구축

윤병선 그렇다면 친농연 입장에서는 신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김영규 작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다. 친환경농업 비중이 0.1% 수준의 시절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래된 얘기가 아니다. 그때 농가들은 나름 철학적으로 접근해 시작했다. 그 농가들이 자기 기준들을 만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다. 유럽 같은 방식으로 한 나라의 농민들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그룹으로 만들어지면서 자기 기준을 갖추고 그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면 된다. 그것이 곧 브랜드이기도 할 거다. 국가는 큰 틀에서 도울 수 있는 걸 찾으면 된다. 가령 환경보전직불금, 유기농직불금 등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다시 그런 방식으로 가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는 농민들을 결집해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그걸 바깥으로 알려내고 동의하는 소비자들을 다시 조직하는 방안이다.

지금 그나마 선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곳이 생협 쪽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사한 것 같지만 저마다 자기 정체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따로 움직이고 있다. 생산자들을 때로는 ‘갈라놓는’ 경향도 있다. 획기적으로 자기반성을 한다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농민들이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점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방편을 도출해낼 수 있게끔 소비자들과 같이 해나갔으면 한다.

윤병선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공감 확보가 먼저 필요하다. 한살림에서도 자주인증 제도를 고민해왔는데, 특히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사실 잔류농약, 용수 검사 등을 하지 않고 관계와 과정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안전이라는 측면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어려운 지금의 생태적 객관적 여건에 대한 소비자

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증제도가 필요하겠다. 인증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인증으로 표현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주도로 진행된 결과중심의 인증 시스템의 결과가 만들어낸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 좀 더 큰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박용준 한살림의 자주인증 제도는 저농약 과실류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것의 확대로 잔류농약 검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쉽지는 않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조합원들에게 현재의 방안에 대해 인정과 동의를 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안전성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당장 모든 검사를 안 한다고 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병덕 우리가 촛불을 그렇게 어렵게 들었듯이, 결국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소비자 의식도 10년 전에 무농약만 찾던 것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본다. 소비자들은 농약검사성적서에 관심 없을 수도 있다.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믿고, 예를 들어 추석 때 농사짓는 어머니 집에 가서 쌀도 받아오고 배추도 받아오는데 검사하자고 한 적 없다. 농약 치는 것을 알지만, 그게 더 건강한 거라고 믿고 맛있게 먹고 있다. 아는 친구가 귀농해서 농사지은 포도라고 보냈는데 DDT 검사 하자는 사람 없을 거다. 식품과학자나 식품안전 전문가들이 과학을 잘못 활용한 거라고 생각된다. 관계를 믿지 않고 과학을 먼저 믿었던 오류를 지금 되돌려야 한다. 한살림에서 시작하는 자주인증의 PGS 방식은 관계 중심의 보증 시스템이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지역에

서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2곳에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된 거고, 거기에서부터 만들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지금 놀란 가슴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원인을 제공했던 그 원인에 다시 빠져들고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시작이 중요하고, 이 먹을거리에 대한 철학,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혹은 어딘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윤병선 미국의 한 조사 내용을 보면, 유기농 인증과 지역산 표기가 된 물품 중에 어느 것을 구입하겠냐고 물었을 때 지역산, 즉 얼굴 있는 먹거리가 더 높게 나왔다. 인증이라는 게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이 기회에 모두가 먹거리와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사후관리 강화가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영규 최근 생리대 사태와 그 이전 가슴기 문제 등 연거푸 엄청난 무능력을 반복적으로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버린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상황으로 갈까봐 두렵다.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문제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 결과 실천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작지만 그에 동의하는 조직들, 생산과 소비와 인증, 많은 영역들이 공조하면서 새롭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박용준 안전성이나 비의도적 검출 등과 관련해서 한살림 생

산자들 또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과정이 있었고, 비의도적 검출의 경우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데까지 왔지만 그 과정 또한 지난했다. 현재 환경 속에서 조합원들의 인식이 확장되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산자들도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함께하며 변화를 꾀해봐야겠다.

정은정 언론의 문제도 있다. 특히 식품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소위 ‘달력기사’ 수준이다. 가령 배추 한 포기만 만 원 해도 된다. 더 큰 문제는 학원비와 부동산이다. 먹을거리, 특히 농산물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생협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조합원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지금은 다 잠재적 피해자다. 특히 생협들끼리 이런 사태로도 만날 수 없으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 가장 개명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들이 어깨를 결고 허심탄회하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 같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또한 가속화될 부분이고 생협도 직면해야 할 문제다. 한계 안에서 먹을 뿐이다. 따라서 소비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논리들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윤병선 살충제 달걀 문제는 단순히 달걀의 문제, 친환경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먹거리와 농업 전체의 문제이고, 날로 악화되는 농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먹거리 환경의 급변을 모두가 인식하고, 농업과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의 변화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환대와 돌봄의 공간

살아 있는 공간, 살리는 공간 이영범

마을의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들 박내현

독일 마더센터를 통해 본 돌봄과 환대의 공간 유현실

사회의 부엌과 거실을 만드는 일본의 어린이식당 윤영희

살아 있는 공간, 살리는 공간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사)도시와삶 이사장.

도시재생, 공공성, 커뮤니티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현장과 이론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ybreigh@hanmail.net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20세기 도시의 거대함은 개발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증폭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개발시대의 도시들은 ‘체질개선’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부수며 새로 짓는 양적 팽창의 패러다임이 도시 성장의 방향타가 되지 못하고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 도시는 쇠퇴의 국면에 들어섰다. 그 결과 부풀려졌던 자본의 공간은 잉여공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투기적 개발과 소유의 욕망으로 인해 한순간도 시간의 역사가 쌓이는 것을 용

납하지 않았던 도시들이 도처에서 성장시대의 후유증을 드러낸다. 쇠퇴도시를 살리고 지역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다. 게다가 짧은 시간 내에 지역재생의 효과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은 성공 사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조바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다시 살려서 쓰는 재생의 가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요즘 들어 부쩍 눈에 띈다.

지역재생의 성공사례처럼 회자된 서촌이나 연남동, 가로수길, 성수동과 같이 특정지역 소비공간은 지나친 자본의 경쟁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지역을 일군 임대세입자 상인이나 동네 터줏대감격인 가게들이 쫓겨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 한편에서는 임대료가 치솟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는 빈집이 속출하는 공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진다. 이런 도시 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저출산·노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이주민들이 도시의 특정지역



서울 익선동 골목길의 상업화

에 몰려 살면서 생기는 다문화의 게토Ghetto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태원의 개방적 다문화 양상과 다르게 폭력과 범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가리봉동의 이국적 풍경은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분명 자본주의라는 단일 가치가 지배했던 기계Machine로서의 도시가 아닌 복합적인 양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가 재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도시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도시에서의 삶을 둘러싼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도시에서의 삶, 그 삶은 과연 무엇을 꿈꾸며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이 주인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숙명적으로 도시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벗어나길 꿈꾸지만 어쩔 수 없이 도시란 정글에 갇혀 버린 삶의 진정한 해방구는 무엇일까? 탈출할 수 없는 도시가 어찌면 해방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갇혀 버린 그 도시를 우리가 살기를 꿈꾸는 곳으로 바꿔 봐도 좋지 않을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스스로에게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과연 우리가 살기를 꿈꾸는 도시인지 물어야만 한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가 꿈꾸는 도시인가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란 쉽지 않다. 마음속에 담긴 희망의 도시는 어찌면 평생 그곳에서 살고 싶은 도시, 살면서 사람이 주인 되는 도시, 그런 도시일 것이다. 사람이 주인인 도시는 결국 ‘삶’의 문제이고, 정주定住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죽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도시는 ‘터’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우리가 꿈꾸는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결

국 삶과 터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삶과 함께 사는 삶의 문제, 그리고 그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삶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개인 삶의 만족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터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동시에 터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와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 함께 사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장소와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 둘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한 몸이 되어 삶과 터의 관계망을 잘 엮어 낸다면 삶이 터를, 동시에 터가 삶을 서로 보듬어 도시가 공유와 공존의 더불어 숲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도시, 공공성의 가치로 재구성하자

도시와 삶이 이어져 살고 싶은 도시를 일구어내고, 그 도시 안에서 사람이 주인인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가치가 바로 공공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성은 사유와 사유의 사이, 사유와 공공의 사이, 공공과 공공의 사이 등과 같은 중간 영역에 존재함으로써, 삶의 다양성이 공존하며 이를 기반으로 함께 사는 삶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공공성은 세대와 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이기도 하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가치의 양면성을 갖는 공공성은 개인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사적 권리이기도 하고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공적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시건축 영역에서의 공공성은 후자의 성격이 매우 강해 흔히 공권력의 상징으로 치부되어왔다. 그래서 공공성의 역할이 개별적인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와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안에 내재된 사적 이해관계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무엇으로 도시건축 영역에 내재된 다양한 삶의 공존과 가치의 공유를 꿈꿀 것인가? 예측 불가능한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도시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의 기본가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적 활동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적 가치로 작동하는 공공성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삶 속에서, 그리고 삶과 삶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가치로 만들 수 있을까? 공공성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면 불편해진다. 또한 공공성은 공동의 생활 방식과 공용의 공간에 개입된 사회적 윤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공공성에 주목하고 이를 도시공간에 구현하는 방식은 법규나 제도에 근거하기보다는 생활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제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유의 영역에 맡길 수도 없는 딜레마로 인해서, 법과 제도에서 출발한 최소한의 공공성이 어떻게 생활문화를 담고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법규적 공공성의 최소한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의 공공성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제도와 사업을 통한 강제보다는 공공성이 자율적으로 진작될 수 있는 공간환경의 토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일상공간에서의 공공성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지는 곧 사회 속에서 삶을 매개로 공동체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가꾸어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같다. 따라서 공공성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공간을 통해 재생산되는 지배적인 가치나 사회가 추구하는 거대담론



연남동 경의선공원과 도시공공성을 통한 시민들의 일상의 재구성

으로 인해 억압되고 불편해진 삶의 영역을 개인의 생활공간을 통해 보다 풍요롭게 열어나가기 위한 디자인의 사회적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은 완성된 가치로 제공되기보다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에 의해 체험되고 재창조되는 가치로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담는 공간언어 역시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과정형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공간의 여지를 가져서 사용자가 창의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공공성의 내적 강도(Intensity)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처럼 형식보다는 내용에서의 공공성의 밀도를 높여 공공공간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재생될 때 공공성은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된다.

미래도시의 과제는 도시 회복력^{Resilience}의 향상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로 인해 전국의 도시는 향후 지금까지 겪지 못한 새롭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시는 사회 변화를 껴안 수 있는 내적 관용^{Tolerance}을 지니고 있을까?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구축소와 같은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의 충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인 도시 회복력^{Resilience}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 재생의 가치가 정주성의 향상에 있다면, 정주의 주체인 주민, 그리고 좀 더 넓게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파트너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과 공동체,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등장하면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단면이 변화하고 있다.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경의선 폐선부지에 들어선 놀장, 해방촌의 빈집공동체 등과 같이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시민공동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다양한 시도가 오히려 거대재정을 앞세운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보다 훨씬 더 높은 설득력과 가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해준다.

다양성의 가치가 설 땅을 잃고 도시개발의 획일화된 가치만이 도시를 지탱한 데 대한 성찰이 서울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성찰만으로 도시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손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구를, 다른 한 손에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들고 몸부림쳐보지만 도시가 지금 이 순간 직면한 과제들은 결코 한순간에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회복력’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뉴

육, 도쿄, 런던 등 세계도시를 중심으로 한 버블경제의 몰락은, 내재된 도시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도시 창조성을 유지하는 작은 도시들의 교훈을 세계가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태리의 볼로냐, 일본의 가나자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이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모델로 급부상하였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표현이 있다. 공간에 에너지가 넘친다는 표현은 그 공간에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삶이 북적대고 있음을 증거한다. 삶이 있는 한 공간에는 저마다의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의 성격이나 크기가 다를 뿐이다. 도시가 살아서 생명을 키우는 텃밭이 되려면 에너지의 총합이 큰 공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입주된 상점의 매출이 크다고 에너지의 크기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신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자신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큰 공간, 즉 사용된 에너지의 크기보다 유효한 사회적 잉여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공간이 에너지가 큰 공간이다. 자본에 의한 공간에너지보다는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삶에 의한 사회적 에너지가 많이 분출되는 공간이 바로 공간에너지가 큰 공간이다. 여기에서 도시의 회복력이 나온다.

우리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쫓아다니며 돌아보는 세계의 문화도시나 환경생태도시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회적 에너지가 자생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회복력으로서의 도시환경을 갖고 있다. 사회적 에너지는 자본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부가가치를 양산해내는 힘으로 작동한다. 자본에 의한 공간에너지가 큰 대표적인 공간이 쇼핑몰이다. 쇼핑몰의 경우 그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 쇼핑몰에서의 소비적 삶을 통해 자기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모되는 간접적인 공간 에너지의 소비량 역시 엄청나다. 반면 인

간에 의한 공간에너지가 큰 공간인 광장이나 공원은 상생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이다.

공동체적 일상의 광장이야말로 살리는 공간이다

도시는 늘 일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일상을 만들어내는 주연배우로서 도시 시민들의 삶은, 그 삶을 연출해내는 주체의 다양성과 삶이 드러내는 역동성을 통해 도시를 살아 숨 쉬게 만든다. 살아 숨 쉬는 도시 속의 일상은 연출된 수많은 장소와 장면을 통해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묘사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도시를 가득 메운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태도를 되짚어 보고 깊이 생각하게 한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듯이, 도시의 여정 역시 늘 희망적이진 않다. 구성원 개개인의 삶과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의 지나친 집착은, 도시를 우리 모두에게 열려 함께 공유하는 광장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갇힌 공간으로 만든다. 스스로가 타인들에게 문을 닫은 결과가 결국 도시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아니 스스로가 자기가 꿈꾸는 영역 밖으로 나가길 거부하는 자폐성 공간으로 만든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두운 골방에 처박혀 숨을 헐떡이는 도시를 세상 밖으로 인도해 낼 수 있을까? 인간에겐 누구나 자기 고유의 밀실이 필요하며, 동시에 타인과 교섭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살 광장이 필요한 법이다. 개성적인 삶을 담아주는 밀실과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광장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서로의 상호 관계와 작용 속에서 균형을 이룰 때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형성되며, 그럴 때 비로소 개개인의 삶의 과정은 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공공공간의 사적 전용을 통한 일상의 광장화

있다. 밀실로서의 개인의 삶과 광장으로서의 사회의 열망이, 그리고 개인의 열망과 사회의 삶이 하나 될 때 도시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밀실과 광장을 모두 겨안는 도시의 희망은 도시적 일상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네 삶이 서로 희망을 나눌 때 도시도 희망을 갖는다.

작은 공간과 작은 공동체에 주목하자

공간을 통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치밀하게 묘사하는 도시. 이념적 방황에서 자유롭고 자본의 억압에서 해방된 도시. 이런 도시에는 삶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작은 공간들이 가득 차 있다. 작은 디자인을 통해 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처럼 작은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공유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은 사적이나 공적으로 전용되는 공간의 중간 틈새에 존재하는 비워진 공간이고 순간의 필요에 따라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전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적으로도 공유되고 공적으로도 공유되는 공간. 사적인 공간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공유의 장치를 갖는 공간들이다. 공간의 공유는 도시의 숨구멍이다. 숨구멍이 호흡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세가지다. 사적 공간의 공적 공유 가능성을 높이는 일, 공적 공간의 사적 전용 가능성을 높이는 일, 그리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교류할 수 있는 중간 영역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다양한 방식을 담아주는 공간은 오히려 비어 있는 공간이다.

공간 공유를 통해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자

공간의 사회적 공유는 개인적 체험의 극화(劇化)를 보장한다. 절제된 공간의 언어 속에서 개인적 체험이 극화되는 장소를 대저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유럽으로 향한 배낭여행의 발걸음에서 간혹 여행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은 이런 장소들을 발견하고는 ‘아’ 하는 짧은 감탄을 내뱉는다. 골목길 안에 살짝 들어앉은 ‘ㄱ’자형 건물의 마당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머리 위로 열린 파란 하늘을 만끽하고 있노라면 눈앞에 보이는 낮선 풍경도 살갑게 보이고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도 잊고 오래 머물고 싶은 편안함을 맛본다. 공간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생활이 다르지만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

에는 사회적 공유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건축학자인 얀 겔Jan Gehl은 그의 저서『건물 사이의 공공 공간에 담긴 삶life between buildings using public space』에서 외부공간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외부공간의 활동은 외부공간의 질에 좌우된다고 말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외부공간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때 도시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본 것이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질의 문제는 외부공간의 물리적 질보다는 그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의 사회적 질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때 민주적 공공성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사회적 공유가 가능하다. 진정한 공간의 사회적 공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공간체험은 극히 개인적인 극화를 보장하는 사적인 공유의 성격을 갖는다. 즉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사유화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극화되는 체험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양방향의 소통을 가질 때 공간은 사회적으로 공유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공간의 사회적 공유는 공간의 물리적 공유뿐만 아니라 공간 안에 담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다양한 가치와 관계가 공유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공간의 사회적 공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고, 내발적 재생의 잠재력이자 도시의 회복력으로 기능한다. 

마을의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들

박내현

도꼬마리를 운영하는 회원들 중 한 명. 여성, 노동, 건강이라는 주제로 마을에서 활동해보고자 자꾸 일을 벌려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naebari@daum.net

“여기 뭐하는 데예요?”

도꼬마리를 처음 방문한 주민 분들은 대개 이렇게 질문하며 문을 뚫뚫히 열고 들어온다. 마을 한편에 자리 잡은 정체불명의 공간에 대한 호기심. “주민들이 차도 마시고, 책도 빌려보고, 모임도 하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들어오세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니 주절주절 길어지는 설명이 끝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아... 다음에 올게요.” 하고 결국 뭘 하는 곳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냥 가시는 분, 혹은 “여긴 어떻게 운영돼요? 차도 팔아요?” 등등 질문을 확장시키며 문턱을 넘어 들어오시는 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도꼬마리는 4년째 같은 질문을 받고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문동은 주변에 대학들이 위치해 있는데다 워낙 집값이 싸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 동네이다. 청년들의 경우 한 동네에 오래 살아도 그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우선 학교나 직장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잠만 자는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그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얼마간 살다가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직장이 먼 곳으로 옮겨지거나 하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동네를 떠나게 되고, 실제 그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자리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다. 이사를 왔다고 환영하는 사람도, 이사를 간다고 작별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없다. 그런 청년들과 함께 마을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졌다. 꼭 오래 살지 않더라도, 사는 동안만이라도 서로 열

굴을 알고 관계를 맺고 그 동네의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곳이 마을 카페 도꼬마리다.

공간을 만들기 전, 근처에 살고 있는 지인들과 만나서 만약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뭘 해보고 싶은지 얘기를 나눠봤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갔지만, 혼자 사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밥’이었다. 혼자 살다보니 밥을 해먹는 것도 귀찮고, 같이 먹을 사람 없이 혼자 식사하는 것도 외롭고, 그러다보니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음식으로 때우거나 술집에 가서 안주로 때우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 밥상모임이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 하루만이라도 혼자 밥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둘러 앉아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얘기하며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도꼬마리라는 공간의 첫 필요였다.

모두를 위한 공간은 가능한가

도꼬마리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대체 뭘 하는 곳’인지를 궁금해하는 이유, 그리고 이 공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대해 한마디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맨 처음 보이는 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더 붙어 살기, 나누며 살기, 어울려 살기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처음 만들 때 적어둔 것이다. 다른 단체들처럼 뚜렷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가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긴 했으나 청년들끼리만 모이기를 원치는 않았다. 청년들이 마을에서 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섞여들어 살아갔으면 했기 때문이다. 청년이라는, 나이로 구분되는, 언젠가는 지나가는 한 세대가 특별하게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거나 적어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둘러싼 여러 다른 세대들이 함께 위로하고 지지하고 때로는 서로를 통해 배워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도 시간이 나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카페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간 술에 취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저녁에 자꾸 찾아와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마침 내가 운영을 맡은 날 저녁에 문제의(?) 그 할아버지가 방문하셨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나에게 대뜸 “여긴 뭐하는 데야? 젊은 사람들만 오는 데야?”라고 물으셨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얘기에 의하면 그분은 월남전에 참여했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며, 재개발 얘기가 돌아다닐 때부터 재개발 반대싸움을 해왔던 절대 빈민이며, 현재는 근처 대학의 경비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락 없는

얘기를 듣는 내내, 나와 같이 있던 청년 두 명은 은근한 경계태세로 내 뒤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당신 얘기를 하다가 카페에 비치되어 있는 리플릿들을 보더니(세월호나 성소수자 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곳의 소개 자료들이 있었다) “흠, 이건 괜찮네. 이건 너무 과격해. 이런 건 좋고.”라며 품평을 하던 할아버지는 불쑥 자신이 일하는 대학교 기숙사 앞에 가면 학생들이 멸평한 책을 갖다 버리는데 좀 가져다주면 어떠냐고 물어왔다. “좋죠”라는 나의 대답에 활짝 웃으시며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돈 2만 원을 꺼내 내게 주어주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음 좋겠는데, 일단은 이거 받고, 내가 다음에 오면 또 줄 테니.” 그렇게 할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깨달았다. 어쩌면 그분은 그냥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일반 카페는 아닌 것 같고, 조금은 말을 받아줄 것 같은 곳이라고 생각되어 용기 내어 들어오셨던 건 아닐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일단은 시비조로 얘기를 꺼냈을 테고, 무언가 소통할 방법을 찾고 싶었을 테고, 그래서 자신이 여전히 뭔가 도움 되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역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긴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과 간간이 서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그 도서관 역시 처음 생겼을 때 근처 주민들이 궁금한 마음을 안고 문을 두드렸고, 다양한 분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주 오는 동네 엄마들 몇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이유인즉슨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가 좀 그렇고 엄마들이 안 좋아할 거라는, 나름대로 운영을 걱정해서 하는 건의였다.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서예 교실 등을 준비하고 있던 관장님은 엄마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그래서 모두에게 불편한

그런 불편함은 꼭 나이 드신 분들과 청년, 혹은 마을에서는 주로 엄마로 통칭되는 장년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다 보니,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곳곳에 붙여놔도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매일 음식을 하는 주부들의 눈에는 도꼬마리 주방이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다. 냉장고 안에 시들여가는 파나 상한 음식 재료를 보면 혀를 차게 된다. 하지만 달리 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일 수 있다. 기본적인 규칙은 ‘자신이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깨끗이 정리해두고 가는 것’인데, 여기서 ‘깨끗이’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다.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왔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마른 수건으로 그릇을 닦아서 제자리에 뒀다 비로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잘 닦아서 건조대에 얹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의 우리는 쉽게 나의 기준을 들이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한다. 나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편안한 공간이 되려면, 모두에게 조금씩 불편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불편함을 나눠 가지는 것,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이 섞이고, 깨알 같은 메



모와 수많은 메시지로 소통하며 맞춰가는 것. 나와 다른 존재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현대의 출발이다.

서로를 알지 못할 때, 노인은 답답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존재로, 엄마들은 맨날 애들 얘기나 하는 존재로, 청년들은 게으르거나 무기력한 존재로 호명된다. 그러나 노인, 엄마, 청년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한 존재로 이해되고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힘든지를 이해하게 된다.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할아버지, 독박 육아와 가사노동에 시달리다가 숨통을 틔우고자 집에서 나와 사람들을 만나야 했던 엄마들, 불안한 주거와 학자금 대출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로 괴로웠던 청년들은 비로소 서로를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며 현대한다.

모두가 모두에게

전체 가구 수의 34.8%를 차지하는 1인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1인가구의 구성 역시 독거노인이라 불리는 60-80대만이 아니라 50대 19.7%, 40대 17.5%, 30대 17.1%, 29세 이하 12.6%로 다양하게 나타난다.¹⁾ 최근 뉴스에 따르면 50대 중년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존 4인 가족, 엄마 중심의 돌봄은 보기 힘든 풍경이 될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매일 아침 고개를 숙이고 일터로 갔다가

1) 2016년 9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현황

밤늦게 지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놀이터를 배회하며 밥 때를 놓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마을 속 어딘가에 공간이 존재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간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주민들이 좀 더 쉽게 공간의 문턱을 넘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했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았다. 출입구 쪽에 옷걸이를 걸어놓고 판매하기 시작하자 물품을 기증하겠다는 주민도, 물건을 사겠다는 주민도 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1인 가구 세입자가 많은 골목에는 늘 이사 가면서 버려지는 물건과, 싼 가격에 임시로 사용할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밥상모임을 안내하는 입간판을 만들었다. 매주 토요일에 함께 먹을 메뉴를 적어 골목에 세워두고, ‘공간활용법’을 인쇄해서 출입구에 붙여두기도 했다. 텃밭 상자를 만들어서 상추를 심어두니 할머니들이 오셔서 상추를 엉망으로 심었다며 잔소리를 하시고는 손수 다시 심어주셨다.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에 김치 한 통을 가져다주시며 잘 먹고 다니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신다.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문을 열고, 돈이 없어도 슬쩍 앉아 죽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꾸준히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면 이 공간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화가 잔뜩 난 그녀 옆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셋이 당황하고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중 한 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실수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여성분이 넘어지게 됐는데, 병원비를 받기 위해 부모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이었다. 사고를 낸 아이는 아버지와 둘만 사는데 아버지가 근무 중엔 전화를 받

지 못한다고 했다. 몸은 너무 아프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다보니 지치기도 하고, 꿈쩍도 할 수 없는 상황. 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들어온 그녀는 한숨을 돌린 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동안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기다리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볼 수 있을지를 부탁했다. 치료를 받고 돌아온 그녀가 저녁 아르바이트를 위해 먼저 자리를 뜬 뒤, 아이들에게 간단히 저녁을 먹이며 함께 아이의 아버지를 기다렸다. 바쁜 아버지를 재촉할 수 없어 울상이 되었던 아이, 혼자 살며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다치면 안 됐던,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질게 굴 수밖에 없었던 50대 여성, 혼자 자신을 기다리며 울고 있을 아이 때문에 애가 탔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모두가 길 위에서 헤매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서서히 마음을 풀 어낼 수 있었던 그 시간은 공간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불가능한 일, 마을의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공간

뜰딱충, 한남충, 맘충 같은 혐오가 쏟아지는 시대에 마을만이 안전할 리 없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청년과 장년, 노년 세대 간의 충돌이, 개인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이다.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편한 존재, 안 왔으면, 안 봤으면 하는 존재가 있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 속의 노인들처럼, 살아있기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삭제되어버린 존재들.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폐지를 줍는 할

머니와 한 평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미처 호명되지도 않는 누군가와 누군가까지. 그들에게도 필요한 편안한 공간.

‘더불어 살기, 나누며 살기, 어울려 살기를 꿈꾸는 공간’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들의 나열이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이해하고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싸워가며 익혀가다 보면 진짜 그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한걸음 나아간 듯하다가도 열 걸음쯤 후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만.) 지나가던 할머니가 텃밭상자에 심어놓은 상추를 보며 잔소리를 한다. 청소년의 날에 놀러왔던 친구가 근처 당구장에 놀러왔다가 불쑥 들어와 친구를 기다리다 간다. 혼자 사는 청년은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갑자기 길고양이를 주웠는데 어떻게 하냐며 들고 찾아오는 주민,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데 잠시 봐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격주에 한 번으로 줄어든 밥상모임에는 여전히 가끔 새로운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 나와 다른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나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너의 사정이 궁금해지고 한 번쯤 들어볼 마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오늘도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와 보라고, 내 얘기를 해 줄 테니 너의 얘기도 해보라고, 내가 혹시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해본다. 

독일 마더센터를 통해 본 돌봄과 환대의 공간



유현실

20여 년간 한살림 조합원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 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자치활동에 관심이 많다. silyu64@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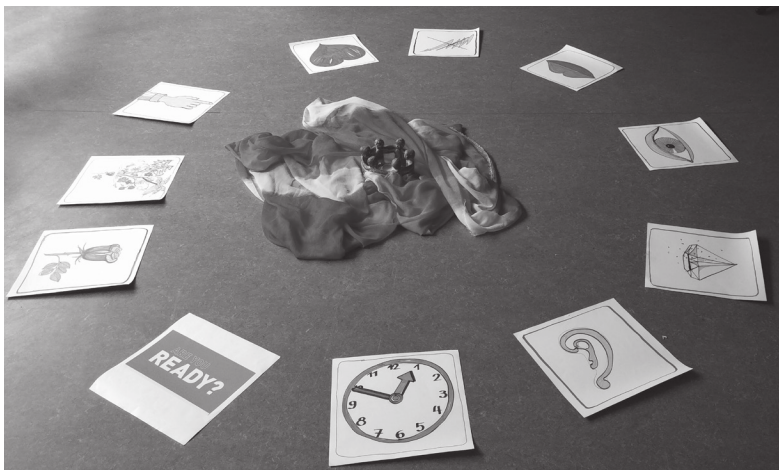
- 2017년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있었던 한살림연합 이사회 유럽연수 가운데 독일 마더센터 내용을 정리한 글.

마더센터는 30여 년 전 독일의 젊은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이 참여해 만든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1970년 독일연방이 실시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대상에서 소외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고민했다. ‘무엇을 도움 받을까?’가 아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 단순한 구조, 확장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마더센터를 기획했다. 마더센터의 ‘마더’는 여성노동 주체를 호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처음 독일에서 3개 모델로 시작되었던 마더센터는 현재 유럽, 아프리카, 북미를 포함하여 7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마더센터는 정부에 공공 공간 운영권을 요구하며 그 공간에 대한 주체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할 이유가 있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세우는 곳, 엄마를 따라 마더센터를 찾은 아이가 “오늘 내 엄마는 누구야?”라고 묻듯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돌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누구나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환경, 마더센터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재능 나눔과 돌봄이 순환되는 공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 위치한 마더센터를 찾았다. 약속한 방문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주춤하는 사이, 마중 나온 안드레아 대표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우리 일행 한 명 한 명을 맞이했다. 예기치 못한 환대에 살짝 흥분된 채로 우리는 안내된 슈트트가르트 마더센터 커뮤니티실에 자리를 잡았다.



커뮤니티실 벽면에 ‘당신에게 마더센터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 활동가들이 써놓은 글이 있었다. ‘내 삶의 일부분. 내 삶이다. 살기 위해 여기에 온다, 소비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집처럼 느끼는 좋은 곳. 오고 싶어 오고, 언제나 환영 받는 곳. 일상에서 불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곳. 관계 속에서 배움. 공동체 속에서 배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 제일 잘하는 것을 꺼낼 수 있게 도와주는 곳. 아이들이 큰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곳...’

커뮤니티실 중앙에 둥글게 배치한 그림카드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등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을 모으는 장치다. 우리를 위해 새롭게 그림을 배치했는데 중앙에 둥글게 어깨동무 하고 있는 인형이 ‘우정’이란 의미로 우리와의 만남을 상징했다. 그림 내용은 ‘다이아몬드-내 이야기 내부에서 하기, 눈-가장 중요한 것 서로 보기(깊게 바라보기), 입술-말을 항상 조심하기, 하트-감사와 축하를 잊지 않기, 검지-다른 의견 표시, 꽃다발-다양한 사람들, ...’로 설명했다. 이어 메시지 카드를 우리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소중

한 사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사랑, 우리가 함께 있는 여기가 집이다...' 내 카드는 '길 위에서 춤을!'이었다. 카드에 담긴 메시지가 나와 만나 행복감을 일으키는 순간. 그렇게 마더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담고 활동한다.

마더센터 카페 정면에는 '인내와 감사를 존중하자'라고 쓴 명패가 아랍어로 쓰여 있다. 카페는 이란, 아프가니스탄인 난민자 쉼터로 이용되며 동시에 마더센터 자원봉사자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명패를 독일어로 쓰지 않고 아랍어로 쓰는 데에는 "저것이 무슨 뜻인가요?" 물으며 더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카페는 엄마 여러 명이 시간제로 운영한다. 마침 싱글파더인 난민 출신 젊은 아빠가 아기를 데려와 돌보다 우리와 인사하는 동안 비슷한 또래 독일 아기가 이 엄마와 방문했고, 우리가 떠날 때는 아기들 넷이 함께 바닥에 뒹굴며 섞여 놀았다.

우리를 맞이한 안드레아 대표는 싱글맘으로 30년 전 마더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는 손자가 마더센터에 나온다. 30년 된 마더센터는 현재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포괄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 운영되



고 있다. 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여 어울려 사는 공간이다. 유치원 시설은 함께 돌볼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무리하지 않고 주 2회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상위층 노인을 위한 셰어링 하우스(sharing house)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공간을



을 공유한다. 야외에 마련된 작은 놀이터는 동네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 마침 몇몇 아빠들이 두세 살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톱툰이 비닐 통에 쓸어 담곤 했다. 무심한 듯 자연스레 사람들이 섞이고 연결되는 마더센터의 모습이다.

마더센터는 자발적 시민모임과 지자체 협력이 잘 조화된 운동이다. 기부문화가 잘 자리하고 있는 배경과 연금수령자의 자원 활동 또한 힘이 된다. 그러나 안드레아 대표가 들려준 슈트트가르트 마더센터의 위기 사례는 풀뿌리조직의 특성과 고민을 함께 보여준다. 이전에 공적지원금의 3배가 넘게 지원되었던 때 오히려 마더센터의 큰 위기가 왔고 권력다툼까지 생겼다. 풍요로운 지원이 아닌 적정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며 풀뿌리 자치운영 주체가 없으면 단지 지자체의 성과로 포장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지원금이 줄면 감수해야 할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보다 각각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저마다의 재능과 돌봄을 통해 경제적 이윤이 아닌 사랑의 이윤을 나누는 것,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을 찾아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 힘으로 도시 속 틈새를 채우다

주택가의 오래된 세탁공장을 개조해 만든 뽀헨 마더센터는 도시 속 틈새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500명이 방문해 이용하는 이 공간에서 자원 활동가 300명이 활동한다. 커피를 나누는 카페가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다양한 세미나가 운영되며 아이 돌봄 정보를 나눌 수 있다. 도시 내 유치원 부족에 따라 필요한 아이들 교육 지원 기능과 난민 대상 독일어 수업 지원, 아빠 역할 지원 등 마더센터에서 패밀리센터(Family center)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혼재되고 직업이나 남녀 구분 없이 섞이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간난 아기들의 놀이터와 젖먹이 엄마들 공간, 유아반, 공연장이 있으며, 돌봄 교육 과정과 치매노인 돌봄 공간이 운영된다. 마더센터 공간은 주민들에게 가족 파티 등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마침 강당에서 악기연습 중이던 시니어들. 이들은 연금수령자들로 아래층 치매노인들 앞에서 연주하며 돌봄 활동에도 참여한다. “한 지



붕 아래 한 가족”이름으로 여러 세대가 섞여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뮌헨 마더센터는 가족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고,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공간. 마더센터는 하나의 공간인 동시에 마을 내 공공 영역이 놓치는 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하며 정부를 선도하는 풀뿌리운동이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끊임없는 노력, 올바른 곳보다 편안한 곳, 이웃과의 관계를 행복지수의 기준으로 삼는 곳. 아이가 자라서 돌아오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다.

뮌헨 마더센터의 붉은 방, 노란 방, 오렌지 방, 초록보석 방 등은 환대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웃을 맞이하고 연결시켜준다. 원색의 커튼, 소파, 장식물 하나하나에서 이야기가 만 들어진다. 발가벗겨진 아기가 초록보석 방에서 오감을 만끽하며 뒹군다. 위층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코디언,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피리가 어우러진 연주가 은은히 흐르고 옆방의 작은 회의실에서는 연금수령자들이 돌봄 안내자 교육을 받느라 열기가 가득했다. 수업 중인 유아반 아이들이 창문 너머 얼굴을 내밀고, 치매노인 방의





양증맞은 종이접기 장식과 포근히 감싸주는 조명, 스탠드 위의 노랑 오리인형이 놓인 풍경. 다양한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마더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접근 방법인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기여하라.”라고 이야기한다. 아이와 손잡고 차 마시러 와서 돌봄을 나누고 자존을 확인하며 관계 맺는 곳. 이 열린 공간에서는 난민들도 함께 배우며 이웃이 되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전함 속에서 보호받으며 지역공동체 의식을 키워간다.

30년 전 지자체를 찾아가 지원요청을 할 때 “엄마들 차 마시는 모임을 지원하라고?”라며 비웃음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마더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던 초기 운동가들이 마더센터를 만들었고, 메르

켈 총리의 “내가 다 해줄게, 따라와!”라는 방식에 대해 반민주적이며 시민을 게으르게 만들고 결국 게으른 민주주의를 낳는다며 경계한 활동가들이 마더센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중요한 결정에 모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많은 자원 활동가들의 동력은 핵심 그룹인 이사회의 방향 제시와 책임감, 열정적인 모습에서 나온다.

마더센터에는 지원을 받는 유급 활동가가 1~2명 근무하지만 자원 활동가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며 자원 활동가와 유급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원 활동가가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스스로 열심인 활동과 유급 역할을 분리하여 생각할 능력과 함께 자원 활동가의 힘으로 만들어낸 마더센터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 마더센터를 상징하는 자치의 힘이다. 마더센터의 300명 자원 활동가들은 다른 곳에서도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현재 적극적으로 세대교체를 이루는 중이다.

적절한 보상을 제도화하여 운영되는 자원 활동가 참여 활동으로 저소득가구 돕기, 일상의 허드렛일 지원, 쇼핑, 이발, 점심식사, 장난감도서관, 재봉교실 수선서비스 등이 있고 언어교습, 컴퓨터 직업훈련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훈련도 제공한다.

마을 거실, 공동 공간 의미로 시작된 마더센터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가치 있는 일로 인식하고 여성의 잠재된 리더십을 개발시켜 풀뿌리 운동의 주체로 성장시켰다. 지역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줄이고 우정과 환대의 공간으로 자리하며 다양한 전문 영역과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지역과 국가 간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지역의 공유공간을 확장하는 상상

텃밭에서 쇠뜨기는 잘 자라는 풀이다. 쇠뜨기를 뽑아 던져 놓으면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리 잡는다. 동네에서, 지역에서 엄마들의 사랑방으로 출발해 서로 돌봄이 이뤄지는 안전한 공유공간으로 키워낸 마더센터는 자원 활동 중심의 풀뿌리 조직이다. 풀뿌리 조직은 서로 연결하여 만드는 힘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활동하는 한살림고양파주에서는 올해 전환마을은평과 만남을 가졌다. 한살림운동과 전환마을, 그리고 마더센터는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에서 자리하고 있다. 전환마을 운동은 지역에서 선언하고 시작하는 자립운동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하며 석유 의존에서 벗어난 생태적 삶을 창조하고 모임을 열어내면서 '전환'의 공간을 확장해가고 있다. 여성노동 주체를 호명하며 시작된 마더센터는 아기 돌봄에서 치매노인 돌봄까지 마을 한가운데 지원된 공공건물에서 자원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공유지를 만들고, 스스로 기여하며 또 도움 받는 지역 사회망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명운동을 지향하며 생협 조직으로 사업과 조합원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체를 운영한다. 지역 생협마다 마련된 조합원모임방은 조합원의 사랑방으로 이용된다. 조합원들은 그곳에서 살림을 이야기하고 먹을거리 너머 탈핵과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실천하고 성장하며 자치를 경험한다. 작년 한살림연합 이사회 학습회에서 마더센터를 접하고 지역살림운동과 모임방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육아모임과 요리모임이 있고 다양한 소모임이 열리는 곳이지만, 언제나 열려 있거나 내가 환대받는 곳으로 모두에게 기억되는 곳인지 돌아보게 된다. 올해 한살

림고양파주에서는 모임방을 조합원공간에서 지역공간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했다. 작게는 청소년 지원단체가 주말에 생리대 지원 포장을 하는 곳으로 개방되었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요리교실을 대행 하기도 했다. 시니어 모임을 궁리해보기도 하고 청소년 쉼터 역할 가능성도 의논했다. 지역의 공유공간으로 한살림 모임방이 확장되는 즐거운 상상을 시작했다. 전환마을처럼 가볍게, 마더센터처럼 풍요롭게 한살림운동 확장하기.

한살림 조합원 모임을 위해 전화로 반가운 대화를 나누고, 모임방에서 나눈 소박한 점심이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는 동료가 있다. 그 첫 기억이 깊은 믿음으로 바뀌어 자리한다. 조합원활동으로 많은 모임과 조직을 만들고 경험을 나누며 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가두는, 견고해 보이는 울타리가 있다. 그 울타리를 없애고, 내가 살고 있고, 관계 맺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조합원,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기여하는 공간, 무엇보다 한살림의 맛있는 밥상이 있는 한살림 마더센터, 현대의 공간을 궁리한다. 슈트트가르트 마더센터 벽에 분필로 적혀 있던 ‘자유롭고 즐거운 곳’이 실현되는 상상을 해본다. 

사회의 부엌과 거실을 만드는 일본의 어린이식당



© <http://kodomoshokudou-network.com>

윤영희

어린이식당 활동가. 2001년부터 일본에서 거주. 저서로는 일본 사회의 일상과 육아경험을 담은 『아날로그로 꽃피운 슬로육아』, 『마을육아』(공저)가 있다.
lindgren707@hotmail.com

아이들이 무료로 밥 먹는 식당 만들기

어린이 혼자 와도 괜찮아요.
숙제를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함께 놀면서 저녁을 먹어요.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3년 무렵부터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식당’ 운동의 홍보 문구다. 20년 넘게 지속된 불경기와 저성장시대의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빈곤층이 형성된 일본에서는, 빈곤 가정의 어린이가 전체 어린이 중 6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신新 빈곤층이 확대되는데다, 높은 이혼율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부모의 귀가가 늦어져 저녁밥을 혼자 사서 먹거나 그나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현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태어난 일본의 ‘어린이식당’ 운동은 바쁜 부모를 대신해 숙제를 봐주고,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며 밥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의 엄마 역할’을 대신하는 어린이식당은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도쿄 오타구大田区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던 곤도 씨는 어느 날 같은 동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 부모가 몸이 아프거나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바나나 하나, 빵 하나로 저녁을 때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늘 마음에 걸렸지만 누구나 그렇듯 생각만 하는 사이에 1년 반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아이가 결국 아동보호소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어린이식당에 기부할 빵을 준비 중인 동네 빵집 모습

이 일을 계기로 곤도 씨는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해 자신의 가게 한쪽에 무료로 동네 아이들에게 저녁밥을 제공하는 작은 어린이식당을 열어 운영해왔다. 이 사연이 널리 알려지며 공감한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린이식당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불과 2,3년 사이에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늘어났다. 공식 등록된 식당 수만 보더라도 처음 시작된 2013년에 21곳에서 2017년 현재 400여 곳 이상이며, 비공식적으로 활동 중인 단체도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식당을 찾는 사람은 지역의 어린이뿐 아니라 워킹맘, 싱글맘, 독거노인, 회사원 등 여러 사정으로 따뜻한 저녁을 먹기 힘든 어른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무료 또는 100엔(한화 약 1,000원), 어른은 300엔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소는 개인주택, 가게 한 코너, 주민센터의 조리실, 종교단체

등 다양하다.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만큼 주 5일 이상 문을 여는 곳부터 월 1~2회 정도만 문을 여는 곳까지 운영 방식도 확일적이지 않고 각 식당의 여건에 맞게 자유롭다. 요리법을 모아 소박한 요리책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을 식당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고, 식당이 열리는 날의 모습을 DVD로 제작해 후원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한다. 식당 수만큼 다양한 형식과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본 어린이식당의 특징이다.

최근에는 어린이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과 후원이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어린이식당네트워크’가 꾸려지면서, 식당의 실제 사례와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견학과 개선타겜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는다고 한다.¹⁾

어린이식당을 둘러싼 최근 일본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동복지 전문가나 교사, 환경단체, 비영리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활발해지고 각 신문, 방송 등 매체에 자주 보도됨으로써 대중의 인식과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2016년 8월에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어린이식당 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책, <어린이식당을 만들자!>가 NPO법인 토요시마어린이와쿠와쿠네트워크에서 출간되었다.

먹는 것을 둘러싼 아이들의 현실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었던 재일교포 3세 오미보뽁美保 감독의 <너는 착한 아이>라는 영화에는, 5시까지 집에 들어오

1) <일본어린이식당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kodomoshokudou-network.com>에서 어린이식당 견학, 워크숍 등에 대한 안내와 기초적인 운영 정보, 전국 어린이식당 현황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지 말라는 아버지의 엄포에 수업을 마치고도 운동장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아이가 나온다. 이 아이가 담임교사 앞에서 일주일 동안의 급식 메뉴를 완벽하게 외우는 장면이 있는데, 하루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끼니가 급식밖에 없어 내일은 또 뭐가 나오는지 줄줄 꿰면서 기대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교사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오미보 감독은 영화에서 이 장면을 꼭 그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부모에게 학대 받거나 방치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일상에서 경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매일 먹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식사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아주 드물고 부러운 것일 수도 있다. 일본의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밝힌 일화인데, 그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오며 아버지께 매일 받은 일정한 돈으로 스스로 세 끼 식사를 해결했다고 한다. 한 번은 사먹는 것도 귀찮아서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한 상자 사다놓고 그것만 먹고 지내다 학교 가는 길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이야기였다.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다 해도 아이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식사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만들어 먹을 능력이 부족하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 먹을 돈이 있다 해도 건강을 해치는 먹을 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어른의 판단과 돌봄이 필요한 이유다.

어린이식당은 이러한 일본 아이들의 현실에 공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간으로, 시민사회의 발명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역사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일본이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문화만큼은 역사가 오래 되었고, 그 뿌리도 깊고 튼튼한 편이다. 어린이들의 빈곤 대책과 함께 청소년들의 쉼터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와 식사’를 주제로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랑방 같은 곳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 동네에도 어린이식당이 생겼으면

‘아이들 데리고 저녁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워온 나는, 어둠과 함께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저녁 무렵마다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했다. 겉모습만 화려할 뿐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지는 키즈카페도 싫고, 배달음식은 더더욱 싫고, 울고 보채는 막내 단속하느라 눈칫밥을 먹으며 쫓기듯 나오게 되는 일반 식당도 가기 어려울 때, 맘 편히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상업적인 분위기가 덜한 그런 식당 어디 없을까?

〈심야식당〉이나 〈카모메식당〉 같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리가 없지만, 그래도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분명 있지 않을까 싶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간간이 듣던 ‘어린이식당’을 내 주변에서 접하게 된 것은 15년 넘게 이용해 오고 있던 생협단체를 통해서였다. 우리 가족이 가입해 있는 생활클럽생협은 일본의 여러 생협 중에서도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하고,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운영과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다. 평소에도 ‘먹는 것’과 연관된 활동과 모임을 꾸준히 해왔던 조합원들과 함께 어린이식당을 시작해보자는 의견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왔고 2016년 봄부터 준비를 서둘렀다.

식당을 여는 데 가장 중요한 장소는 일단 생협 사무실에 딸린 회의실과 조리실을 무료로 빌려 쓰는 조건으로 쉽게 결정되었다. 동네 가게들과 마트, 지역자치회 등에 식당 홍보와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기부 및 후원을 부탁했는데, 각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린이식당 사례가 화제가 되어서인지 시작부터 순조로웠다. 가장 먼저, 우리 생협으로 유기농 두부를 납품하는 지역의 유명한 두부회사에서 연락이 왔



생협 조합원이 가꾸는 텃밭에서 도착한 제철 채소들로 가득한 식당 조리실 풍경

다. 필요한 양을 미리 알려주면 식당이 열리는 날 준비해서 보내줬다. 게다가 동네 빵집에선 그날 다 팔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빵을 한 보따리 보내오고, 생협 조합원 중에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신선한 제철채소들을 기부해주셨다. 어떤 분들은 식당 냉장고에 고기를 몰래 넣어두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쌀이나 국수 면을 한 상자씩 기부해주시기도 했다. 식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날마다 풍성하고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한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다 차갑고 자기밖에 모른다 하더니, 아니네?!” 하며 놀라워했다. 다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게 아닐까? 누군가는 남거나 버려지는 식재료들을 잘 모으고, 또 누군가는 정성스런 요리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자원 봉사자들의 지혜와 노동력으로 메꾸어 동네 어린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밥이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와 몇 차례의 모임을 가진 뒤, 작년 5월 드디어 감격스런 오픈식을 했다. 우리 동네에도 어린이식당 1호점이 문을 연 것이다. 아무도 안 오면 이 30인분의 식사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웬걸! 예상 인원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영유아 아이를 둔 젊은 엄마, 친구들과 함께 온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동네 노인 분들... 당황스러우면서도 말할 수 없이 기뻐던 그 첫날의 감격을 떠올리면 지금도 몽클해진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부 받은 쌀과 고기, 채소로 4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풍성하고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어린이식당이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사회의 부엌과 거실이 필요한 시대

나는 너무나 지쳐 있고

미래가 오기도 전에

미래에도 지쳐 있다.

- 올리브 슈라이너

어린이식당을 시작할 무렵, 내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다. 이미 충분히 지쳐 있는데, 아직 살아 보지도 않은 미래에도 지쳐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에 힘들 때가 많았다. 지금 사회는 어쩐지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몹시 지쳐 있는 듯 보였다. 어린이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관계의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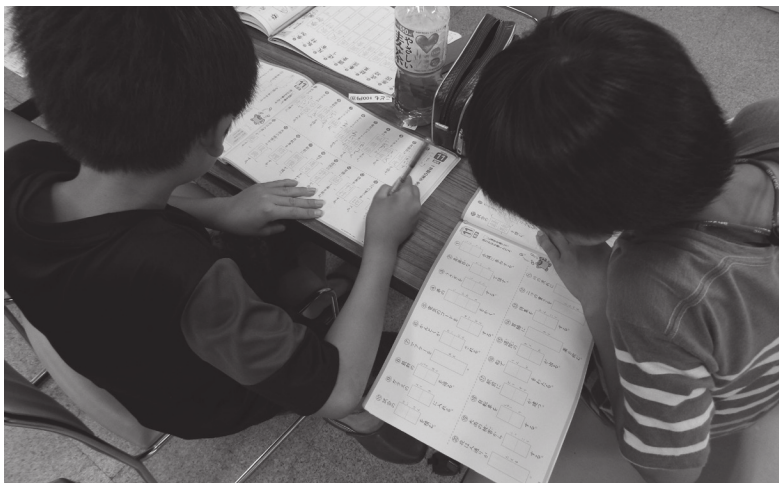


여러 곳에서 기부받은 식재료들로 한끼 식사를 준비중인 자원봉사자 분들

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집에 사는 가족들조차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기 힘들고, 이웃이나 사회와도 별다른 접점 없이 어려움이 있어도 남에게 기대지 못하며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이런 분위기가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다.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도 거절당하거나 사생활을 들킬까봐 누구에게도 힘든 사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어린이식당은, 단순히 아이들이 무료로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같은 지역의 아이와 어른이 함께 밥을 먹으며 관계를 맺어가는 의미 있는 장소다.

어린이식당은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유식품자원을 식품제조업체나 개인 기부자에게 기부 받아 소외 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푸드뱅크 서비스나 무료 배식소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화한 형태로, 음식뿐 아니라 ‘관계를 만드



저녁식사를 기다리며 숙제를 하는 아이들

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 어린이식당에 오면 낯을 가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어색해 하거나 곁돌기도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무리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친해지려 애쓰지 않는 분위기,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어린이식당이 되었으면 한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며 인사도 잘 못하던 아이들이 여러 번 만나면서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나 감동스럽다. 조리실에서 동네 생협 엄마들이 저녁밥을 만드는 동안, 몇몇 아이들은 학교 숙제를 가져와 열심히 하기도 한다. 조리실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아, 배고파요.” 아이들이 말하면, 부엌에선 “이제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하는 말이 들려온다. 따뜻하고 몽글하다.

나는 우리 어린이식당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조리팀 리더를 맡고 있다. 아이들이 우리 식당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경험해 보

있으면 하는 마음에, 비빔밥이나 불고기를 메뉴에 자주 넣는다. 한 일 관계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지만, 평범한 일본 시민과 아이들은 그저 맛있는 한국 음식이 좋고 일본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한국어와 대중문화를 궁금해 한다. 언젠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신문 칼럼에서 정치와 역사적인 문제는 차차 풀어가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인 관계만큼은 교류가 끊이지 않도록 서로 애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 역시 그런 마음이다.

때로는 거창한 외교 행사보다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든 비빔밥 한 그릇이 두 나라의 평화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누구 할 것 없이 불안하고 피곤한 이 시대를 살아낼 방법으로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어린이식당이 그런 사회의 부역, 거실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어린이식당이며, 연대하자!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잠시라도 안전하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공평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일은 우리 사회를 점점 나빠지게 하는 악순환을 막는 작은 시작이 될 지도 모른다. 시민 차원에서 시작된 일본의 어린이식당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미 정부의 복지기관과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타큐슈北九州시가 어린이식당을 열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과 식사 환경을 돌봄으로써 빈곤의 연쇄를 막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린이식당이 제공한 셈이다. 기타큐슈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어린이식당을 지원하고



텃밭채소와 빵집에서 기부받은 식재료들로 차린 한끼 식사

있다. 도쿄 근교에 위치한 우리 동네 어린이식당도 시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생협을 통해서도 활동보조금이 지급되어, 문을 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식당 운영을 위한 비용 면의 걱정은 거의 사라졌다.

2017년 9월에는 시청 주최로 <제1회 어린이식당 정보교환회>가 열렸는데, 지역의 여러 어린이식당 운영자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것은 물론, 시청 소속 보건위생 담당자들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맡아주었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얻은 수확은, 각 어린이식당 간의 교류, 그리고 시청 등 정부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어린이식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여러 매체와 대안교육 잡지 등에 어린이식당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에서 시작된 어린이식당 운동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퍼져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마을운동

과 나눔의 공간을 꿈꾸는 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연락을 해오셨다. 제주의 어느 지역에서는 소박한 형태지만 벌써 어린이식당을 만들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혼밥이란 말이 유행하는 시대지만, 사람은 그래도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며 내일을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식당 단골손님인 한 초등고학년 어린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엄마 아빠 다 늦게 퇴근해서 맨날 혼자 저녁밥 먹기 싫었는데, 여기 오니까 친구들도 많고 다 같이 먹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어린이식당은 아이들에게 이런 곳이다.

물론, 문제점이나 과제도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시작한 어린이식당이 정작 식당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을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사소하게 부딪히는 감정들로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원봉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볼 때가 가장 안타까웠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본 어린이식당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이 달라 실망하는 이들도 많았다. 다른 시민모임과 다름없이, 식당 운영 자체보다 그 속의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걸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셀 수도 없을 만큼 빈번히 깨달았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 한 끼 식사를 완벽하게 차려내는 일, 우리가 마련한 환대와 돌봄의 공간으로 늘 기대에 찬 표정으로 찾아와 주는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따뜻하고 천천히 흐르는 저녁을 모두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좋다.

고립되지 않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연습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는 일, 나와 다른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식당이란 울타리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다. 따뜻한 음식과 사람,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어린이식당. 험하고 거친



우리 동네 어린이식당에서 동네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세상 한 귀퉁이에는 이런 아름다운 연대의 공간이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세계 곳곳에 서로 다른 개성의 어린이식당이 문을 열어 다양한 음식들로 정보를 교환하며 연대하는 꿈. 상상만 해도 즐겁다. 우리 집의 작은 부엌과 거실을 벗어나 사회의 부엌과 거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보았으면! 🍳



운동의 관점으로 사회적금융을 바라보다

주세운

동작신탁 전략기획팀에서 사회적경제 융자사업 및 각종 사회적 금융 상품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신탁의 존재가치를 되살리는 길이 사회적금융에 있다고 믿는다. jusewoon@gmail.com

들어가며

사회적금융이란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금융¹⁾을 말한다. 언뜻 들으면 추상적이어서 쉽게 잡히지 않는 개념이다. 사회적금융을 기존 금융권의 사회공헌사업과 비교하면 이해가 수월하다. 금융은 수익성을 위해서라면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한 높

1) "Social finance is an approach to managing money which delivers a social dividend and an economic return,"(Wikipedia) 유사한 개념으로 임팩트금융이 있다.

은 금리를 부과하고,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산업이나 군수기업 등에 투자하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그렇게 악착같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사회공헌이라면, 사회적금융은 돈을 버는 과정 자체를 고민하는 금융이다. 대출자에게 차등적인 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나 공정무역과 같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에 융자하는 등 윤리적으로 돈을 버는 금융을 말한다.

사회적금융의 범주는 다종다양하다. 개인 대상의 ‘마이크로파이낸스’²⁾, 주식과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책임투자’³⁾,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사회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대상 융자사업 등이 사회적금융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단, 이 글의 목적이 이러한 개념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필자의 역량을 벗어난 일이기도 하고, 관련 연구자나 활동가가 아닌 이상에야 사회적금융의 각종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그리 의미 있다고 보지 않았다. 대신 이 글에서는 사회적금융이 대두된 배경과 그간의 역사, 주류 금융과의 차이점,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한국적 맥락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아무리 해외의 장밋빛 사례를 끌어온다고 해도 한국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존재한다. 이 땅의 현실을 감당한 채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유명 사례 나열보다 의미 있다고 생

2)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의 소득증대와 자활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소액대출사업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미소금융美少金融이라 쓰기도 한다.

3) 금융사가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무기,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등 사회적으로 해로운 계약이나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등 투자의 대상과 방식을 선별한 투자를 일컫는다.

4)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투자의 한 형태. 정책 과제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의 복지사업을 벌여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성과급’ 투자 방식이다.(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

각한다. 아무쪼록 아직 성글지 않은 관점이지만, 사회적금융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치기 어린 고민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의 부상과 사회적금융이라는 화두

최근 사회적금융을 주목하는 배경은 일차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부상과 큰 관련이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를 뒤덮었던 신자유주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파산한 이후, 사회적경제가 저성장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제정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어져온 사회적경제가 제한적으로나마 법적인 시민권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투자수익률이나 상환가능성의 관점으로부터 평가하는 주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대안적 금융의 필요성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물론 서울의 다람쥐회(영등포산업선교회신협회 후신)나 경기도 성남의 주민신협 등 몇몇 자조금융조직이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재 각종 법 제정으로 폭증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자본 조달과 사회적경제 특성에 걸맞은 금융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된 관 주도의 사회적금융 정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사회적금융을 위한 중간전달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사회적금융에서 중간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

중간전달체계란 사회적금융의 자금 공급자인 정부나 지자체, 혹은 시민과 기관투자자들의 기금을 자금 수요자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전달하는 중개기관을 말한다. 중개기관의 역할은 신탁을 포함한 금융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구, 사회적기업 등이 수행할 수도 있고 타 정책자금처럼 일반은행권이나 정부산하기관이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진행된 정부 주도의 사회적금융 정책은 대부분 시중은행이나 정부산하기구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⁵⁾

중간전달체계에 대한 고려가 왜 중요할까.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정부 주도로 진행된 미소금융 정책의 경험이다. 미소금융 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하던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정부 주도로 재편하여 대대적으로 펼친 정책이었다. 대기업과 은행권의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여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설립하고 저소득·저신용자에게 2~4.5%의 신용대출을 공급하였다.

정부의 미소금융 사업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가 ‘중간전달체계의 부재’였다. 정부는 근 십여 년간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진행한 민간기관의 경험을 배제한 채 대기업과 은행권이 각각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여 직접 중간전달자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주로 은행권 퇴직자 출신으로 채워진 사업담당자들에게 미소금융은 또 하나의 대출사업일 뿐이었고, 수십 년간 은행에서 체득한 바대로 연체를 관리를 위한 보수적인 심사기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마이크로크

5) 정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미소금융 등의 대부사업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서담보 대출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조성한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모태펀드)도 마찬가지이다.

레딧 사업에 있어 필수 요소인 채무자에 대한 사후 지원은 거의 유명 무실했다. 결국 정부 주도의 미소금융 사업은 소외계층의 자활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는 퇴색된 채, 심지어는 맹목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⁶⁾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만약 지금처럼 별도의 중간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기관이나 은행권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미소금융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금융에서의 금융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금융을 통해 채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금융의 본질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리금융기관과는 다른 작동원리를 가진 사회적금융만의 중간전달체계가 필수적이다. 사회적금융의 본질은 숫자화된 자금 공급이 아닌, 그러한 자금이 긍정적 영향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각종 비재무적 활동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금융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화되지 않는 비재무적 활동에 에너지를 쏟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사회적금융이라는 범주로 집행되는 기금의 크기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⁷⁾

6) 보다 자세한 평가는 다음 자료 참조. 김명록, '한국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현황과 과제', 『산업혁신연구 제32권1호』, 2016. 박창균,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응용경제 제16권2호』, 2014.

7) 이에 주목할 사례는 2013년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서울시 기금의 주요전달통로로 활용한 것이다. 물론 리스크부담에 대한 부분을 민간조직에 완전히 떠넘기는 등 세부적으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간의 정부주도 사업과는 다르게 민간 사회적금융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금집행을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의 접근법: 관계기반과 수요자 맞춤형

사회적금융은 기존 영리금융기관과 다른 작동원리를 가진다. 기존 금융은 자산이나 담보제공 유무에 따라 차등적인 금리를 부과한다. 재무역량이 취약할수록 자금 공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상환불능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 부의 부빈익빈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금융의 냉혹함이다.

반면 사회적금융의 대상은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저소득·저신용자 등 주로 재무역량이 취약한 이들이다. 주류 금융처럼 자산이나 소득, 신용등급 등 재무적 가치만 평가해서는 적절한 자금 공급도,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도 불가능하다. 사회적금융만의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주류 금융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리스크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해법은 관계성에 기반한 접근법이다. 관계금융은 소규모 공동유대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힘을 활용하는 접근법이다. 동일한 생활반경 내에 속한 구성원들의 신용도와 평판에 근거해 자금을 융통하고, 또 공동체가 부과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채무불이행의 리스크를 통제한다. 관계금융은 주류 금융이 요구하는 자산과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대안적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독창적 해법이다. 관계성에 기반한 금융은 리스크 관리가 수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융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조적으로 조성한 민간 기금의 상환율이 매우 높은 것도 이러한 관계의 힘이다.

관계성 다음으로는 수요자 맞춤형의 접근법이 있다. 아무리 저리의 대출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빚을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빚은 양날의 검이다.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 단지 저소득계층이라서, 저신용자라서 하는 대출은 현재의 삶을 유예시키기 위해 미래의 가능성을 착취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자본이 필요한 문턱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걸맞게 설계된 대출만이 사회적금융의 미션을 수행하고 상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해외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캐나다 밴시티신협Vancity의 경우 신청자의 직업별·유형별로 대출상품이 특화되어 있고 대출의 용도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가령 고학력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그러한 대출상품은 이민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대체로 소외계층이 처한 상황과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금융기관보다는 관련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동작신협에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모두들청년주거협동조합·큰바위얼굴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조합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것 또한 그러한 수요자 맞춤형의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금융의 기원, 신용협동조합운동

사회적금융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금융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사회적금융의 기원은 185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라이파이젠Raiffeisen과 쉘레텔리취Schulze-Delitzsch

의 신용협동조합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탁은 소수 부유층에게만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자본주의 초창기에 생겨났다. 주류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곤란한 가난한 농민과 영세기업의 금융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신탁은 공동유대에 기반한 신용창출이라는 대안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 신탁운동 또한 이러한 역사적 유산의 연속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유럽 전역으로, 이후 대서양을 넘어 북미로 전파된 신탁운동의 흐름이 이 땅에 도착한 것은 라이파이젠의 최초 ‘발명’으로부터 약 백년 만이었다. 1960년에 시작된 한국 신탁운동은 반세기 만에 약 680만 조합원과 73조 원의 자산이라는 자못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탁운동은 고리대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하고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했던 민간의 자발적인 협동운동이었다. 특히 시민사회에 적대적인 독재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신탁운동은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자산이기도 하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양적인 성공을 마냥 격찬할 수 없는 한국 신탁의 현재 모습이다. 1980년대 이후 외형적 성장은 거액의 담보대출 영업에 의존한 결과였고, 2003년 신용평점시스템 Credit Scoring System, CSS 도입 등은 관계금융이라는 신탁의 정체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말았다. 물론 규모화와 전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다. 문제는 변화된 조건 속에서 신탁 고유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노력의 부재였다. 신탁 고유의 목적은 대안적 신용창출이다. 아무리 조합원 복지사업이나 사회공헌 사업을 열심히 한다 한들, 은행과 똑같은 금융상품만 취급한다면 굳이 신탁이라는 이름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청년연대은행 토닥: 새로운 공동유대 창조의 실험

유사은행화 되어버린 신탁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대안적 신용창출에 대한 필요는 계속 존재해왔다. 2000년대 이후 몇몇 시민단체들이 해외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도입하여 저소득 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필요의 일환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목할 만한 실험이 2013년 출범한 ‘청년연대은행 토닥’(이하 토닥)이다.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토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상황에 놓인 현 청년세대들끼리 상호부조 할 수 있는 금융협동조합이다. 현재 약 400여 명인 토닥의 조합원들은 매달 일정액의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함으로써 최대 3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특기할 것은 창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열린 공동유대제도이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토닥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신탁모델에서 매우 드문 사례이다. 덕분에 토닥은 일반적인 금융상호부조 이외에 조합원의 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기적인 교육과 중고물품장터 등의 기획 행사, 조합원 소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신탁 모델이 이미 주어진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신용을 창출하는 데 비해, 토닥의 열린 멤버십은 신용창출의 기반이 되는 관계성 자체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토닥의 조합원들은 일종의 공통된 취향과 신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유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닥의 실험은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고유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린

신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웃사촌 개념이 희박해진 현대 도시의 삶에서 과거와 같이 생활환경의 근접성에 기반한 공동유대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공간적 공동유대에 근거한 기존 신협 모델의 재구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맥락에서 토닥이 시도하고 있는 취향과 신념의 공동체는 21세기에 신협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유대의 예시가 될지 모른다.

디지털혁신과 사회적금융의 미래

최근 정보기술을 금융과 접목한 핀테크의 바람이 거세다. 불과 2~3년 만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부터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개념의 플랫폼,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 대 개인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P2P대출 사업까지 일련의 서비스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왔다.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핀테크가 더 이상 일부 트렌드 리더들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수십 년 만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는 모 인터넷은행의 광고처럼, 그간 강고한 아성을 지켜왔던 과점체제에 핀테크는 단순한 메기효과 이상의 창조적 파괴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혁신을 마냥 반길 수 없게 만드는 소식도 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2%대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주목받은 모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상품이 실제로는 기존 은행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만을 선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뜻 보면 당연하지만, 원래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취지는 기존 은행

권에서 소외받던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였다. 간편결제 업체들이 평균 3%가 넘는 고가의 수수료를 영세 소상공인에게 징구한다는 소식도 있다. 결국 나의 편리함이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착취구조를 만들어 버린 건 아닐까. 통상 10%를 넘나드는 투자수익률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는 P2P금융⁸⁾시장도 마찬가지다. 가뜰이나 금리 일변도인 한국의 금융문화를 혁신하기는커녕 고수익고위험 일변도의 금융습관을 미래의 주류 금융소비자가 될 청년세대에게 잘못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디지털 금융혁신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심화시키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금융이라는 개념일지 모른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최근 오마이컴퍼니, 비플러스와 같은 몇몇 온라인기반 벤처기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투자상품을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국내 최초로 P2P를 사회적금융과 접목한 금융플랫폼 ‘비플러스’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기업, 유기견을 돕는 반려동물 수제간식 제조업체 등의 스토리를 4~8% 투자수익율과 함께 제시하며 금융투자자를 모집했다. 2017년 9월말 기준 총 25건에 약 7억 8천만 원의 투자를 성사시켰다. 아직은 전체 금융시장에서는 물론 누적 투자액이 1조 원을 돌파한 P2P시장 내에서도 미미한 액수이다. 하지만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반 시민 대상의 사회적 투자상품이라는 점이다.

8)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핀테크의 한 분야이다. 대출 금리는 업체에 따라 연 4%~19%로 평균 대출 금리는 연 14.80%이다. (“54개 P2P협회사 누적대출액 1조 3290억 원 돌파”, 이데일리, 2017. 9. 11.)

시민의 목소리를 금융에 부과하기

사회적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크게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중개자로 살펴본다면 한국 현실은 매우 기형적이다. 이곳은 수요자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사회적금융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개인과 기관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공급할 투자자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 몇몇 대기업에만 한정된 상황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적절한 중개기관의 부재, 즉 일반 투자자-시민들의 일상적인 저축과 투자를 사회적금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금융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운용되고 있는 펀드상품의 5개 중 1개가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이다. 시민들의 예금을 사회적 목적으로만 운용하는 사회적은행⁹⁾이 매년 20%씩 성장할 정도로 사회적금융 시장이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 한국의 현실은 이와 꽤나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를 내세운 펀드상품의 시장점유율은 1% 미만으로, 그마저도 국민연금이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거의 대부분이다. 해외에서 많은 금융협동조합이 사회적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기존 자조금융의 역할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국내 신탁, 농협 등의 현실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플러스와 같은 P2P업체의 사회적 투자 실험은 기성 금융권에서는 시도하지 않고 있는 시민대상 사회적금융 시장의

9) 고객의 예금이나 출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회적·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금융에 특화된 은행(신탁). 주로 신재생에너지나 유기농업, 마이크로파이낸스 등이 주요 대출처이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등장했으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주류 금융기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금융의 규모를 키운다는 의미 이상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회 변화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금융을 바라보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간 금리와 인접성, 혹은 편의성이라는 제한된 선택지만 존재했던 한국 금융문화에서 사회적 투자라는 실험은 돈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결국 혁신적인 1인의 아이디어나 리더십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지지하고 변화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다. 사회적금융은 그러한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실제적인 사회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아무리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란다고 해도 우리가 맡기고 투자하는 돈이 100% 수익성의 논리로만 움직인다면 결코 우리가 바라는 그 사회는 도래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윤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금융상품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금융문화로 만들어야 할 이유이다. 

노동 위기의 시대, 협동조합에서 노동과 한살림의 과제

■ 모심과살림연구소의 '한살림 노동'에 대한 연구 내용을 요약·정리한 글.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ecosociety@hansalim.or.kr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은 인간 생존과 생활의 기본 수단이자,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실현의 길이며, 공동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토대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자기를 완성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의 관계와 경험을 체득해 나간다. 따라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노동할 기회를 얻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정당하게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사회 공동체의 기본 책무여야 한다.

그런데 노동이 가지는 의미나 성격은 시대별로 계속 바뀌어 왔고, 지금에서는 노동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근대 산업화 이후 인간과 자연의 협동을 통한 노동의 신성한 의미는 퇴색되고, 자본주의화와 함께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노동이 상품화되면서 노동의 소외와 비인간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인류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균형하고 불확실한 노동의 현실을 맞고 있다. 생존과 생활을 위한 노동이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소진시키고 피로사회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노동 영역 내에서의 불균형¹⁾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노동의 기회조차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 모델 자체가 한계를 맞고 있다. 인구절벽과 소비절벽, 기술빅뱅에 따른 거대한 환경변화가 불안정한 노동자²⁾precariat를 양산시키는 물론 노동의 종말 상황까지 예고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장수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사회적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의 장기화, 고착화는 성장과 고용의 동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기계화·자동화 단계를 넘어서 인공지능을 통해 정신노동까지 대체하는 단계로 사회를 이동시키면서 ‘테크놀로지 실업’ 상황을 확대시킬 전망이다.³⁾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실업과 노후대책 없는 조기 은퇴 문제는 우울한 노

1)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도급 노동은 물론이고 넓게는 농업노동과 산업노동,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돈벌이 노동과 살림살이 노동까지 포함해서 불균형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 ‘불안¹precarius’과 ‘무산계급 노동자²proletariat’의 합성어다.

3)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에 주목해서 노동의 과학화와 인간의 기계화를 통한 근대적 노동을 넘어 탈 노동 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팀 던럽, 『노동없는 미래』, 엄성수 역, 비즈니스맵, 2016, 218쪽.)

동의 미래에 대한 전조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은 여전히 기존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적인 노동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본은 생산성을 높이고자 탈규제와 유연화, 외주화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해고 방지 같은 고용 안정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성격과 내용, 방식은 물론, 노동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조직에 의존해 노동의 안정성을 실현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의 대안 또는 대안적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자본에 고용된 노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협동적 소유와 자율노동에 바탕한 협동노동, 공동체적 자기고용노동, 생명 유지와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자립·자급노동 등 다양한 대안적 노동양식과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이 글에서는 노동의 문제를 대안적 경제모델을 지향해온 협동조합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 불안의 시대에 협동조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노동의 위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의미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협동조합과 노

4) 강수돌 교수는 실업을 유발하고 인간을 소외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죽임의 노동에서 사람과 자연, 세상을 살리는 살림의 노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손노동과 비임금노동, 협동노동의 3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강수돌, “문명의 전환과 노동의 미래”, 『모심과살림』 2호, 2013, 51-52쪽.)

동은 역사적으로 이미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초기 비인간적인 사회 현실, 그중에서도 노동시간과 노동환경, 노동조건을 포함해 당시 노동자들이 처했던 열악한 상황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초기 협동조합운동가들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가 자본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의 사회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노동자들이 출자해 소비조합을 만들고, 여기서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협동조합 자본을 조성해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노동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협동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⁵⁾ 하지만 오랜 시간 이런 꿈들은 현실화되지 못했고, 협동조합 사업과 운동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본질적으로 다뤄지지는 못했다.

시간이 흘러 협동조합에서 노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는 1980년 ICA 대회를 통해 나온 레이드로 보고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부터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관계를 역전시켜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관계를 협동조합을 통해 구축하자는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고용된 임금노동으로부터 자발성에 기반한 협동노동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색들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스페인의 몬드라곤 사례나 일본의 위커즈콜렉티브 사례는 이런 논의들에 중요한 자극이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협동조합의 상호부조와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데 대한 기대감은 2008년 글로벌

5) 협동조합운동의 이상을 담은 아르네스트 포아슨(Ernest Poisson)의 협동조합공화국 논의도 여기에 해당한다.(아르네스트 포아슨, 『협동조합공화국』, 진흥북 역, 선진문화사, 1985.)

경제위기를 맞아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협동조합 영역이 만들어 낸 실질적인 고용 성과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도 노동에 대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⁶⁾

현재 세계 고용인구 가운데 협동조합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46%로, 약 2억 7,940만 명이 협동조합과 관련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자기고용 노동을 하는 사람들(특히 농민)이 2억 5,220만 명, 협동조합에서 고용노동에 종사하는 인원 1,600만 명,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역할을 하는 1,120만 명이 여기에 포함된다.⁷⁾ 이는 2014년의 같은 조사 때보다 약 3천만 명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일반 경제 조직들과 구분되는 협동조합의 특성도 작용하였다. 협동조합은 소유와 경영에 대한 조합원의 실질적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 운영구조를 갖추으로써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당면하게 될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기반한 조직으로서, 경영적 위기 상황을 해고와 같은 인적 구조조정보다는 교육과 훈련으로 고용 기회를 새롭게 마련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협동의 힘으로 각종 기금과 공동의 적립금을 마련해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 위기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6) UN은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7가지 중 8번째로 '품위 있는 노동decent work의 증진'을 설정하고 협동조합을 중요한 역할자로 주목하고 있다.

7) Hyungsik Eum, *COOPERATIVES AND EMPLOYMENT*, second global report, CICOPA, 2017, p.12.

위한 힘이 상대적으로 크다.⁸⁾

이처럼 고용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⁹⁾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 불안의 시대에 협동조합의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화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협동조합 영역이 성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노동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일반 기업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노동관계나 노동조건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주로 고용의 양적 측면을 다룬다면 협동조합에서의 노동 문제는 고용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협동조합이 노동에 있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이 문제는 협동조합 영역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전

8) ILO·ICA,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2014, p.12.

9) 협동조합 영역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적 정책이 가져다 줄 실질적 효과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부터 협동조합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왔으며, 이것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1992년 ICA 대회에서 나온 보크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 직원의 참여 문제가 제기된 이후, 조합원 조직에서 직원의 참여 문제를 놓고 협동조합 원칙을 근본부터 흔들 것이라는 주장과 직원의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봐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일반 경제조직과 비교해서 협동조합이 갖는 독특한 운영구조와 원리가 있다. 협동조합은 출자·경영·노동 삼위일체의 협력형 자기고용 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기업의 고용노동 구조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노사관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협동조합은 내부적으로 자율성과 과정에 대한 합의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결사체 영역과 결과의 효용성 및 책임성이 중시되는 사업체 영역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들 각 영역별 노동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 유형별로도 노동이 가진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노동자 조합원이 주인으로, 출자자·운영자와 노동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구매하는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나 생산하는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의 경우는 출자자·이용자와 노동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구조를 갖는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노동의 보람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합을 떠나게 되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신규인력 채용과 훈련에 따른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높은 이직률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경험의 단절로 사

업과 조직운영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터로서 매력을 잃은 조합은 사회적 평판 하락과 함께 역량 있는 인재들의 참여를 차단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감을 줄이고 일터에서의 만족감과 자기성장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생협에서의 노동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비자 조합원이 주인인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경우 이용 조합원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조합원 주권'을 실현하는 것과 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노동자(직원)의 참여로 '노동 소외'를 해결하는 것을 동시에 균형 있게 다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관련해서 일본 생협의 노동에 대한 고민과 접근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반班과 공동구매를 연결한 생활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해 오던 일본 생협은 1980~90년대 들어 경영위기 상황을 맞아 구조개혁과 사업 합리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협노동자 직원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약화되면서 노동 조건과 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경영위기 해결 방안으로서 공동구매에서 매장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문노동 영역이 등장하면서 조합원과 직원 간의 거리감이 커지는 문제도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생협의 노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생협 직원의 노동을 임금노동으로 규정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자발적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조합원이 자본을 공동출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직접 노동을 수행하는 자주관리형 생산협동조합 형태로 워커즈를 만들어 조합원활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참고해 볼 때 생협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노동자로서의 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¹⁰⁾ 직원 스스로는 단순히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조합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해당 조합의 미션과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조합원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훈련과 학습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전문성을 길러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생협의 본질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노동 문제는 조직 내부의 과제를 넘어서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협 노동자’ 문제를 넘어서 ‘생협 노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협은 풍부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을 재조직하고 지역을 재구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조합원 생활과 긴밀히 연결된 생협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고, 생협이 조합원의 삶의 영역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따라서 생협의 노동 문제를 커뮤니티 전략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임금노동에 따른 소득으로 경제적 생존을 이어갈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외에 다양한 생계유지 수단과 기

10) 여기에는 협동조합 조직임에도 해당 사회의 노동관련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도 작용하고 있다.

반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빈곤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주거, 교육, 의료, 먹거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협동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개인의 지출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노동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사회적 유대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만큼, 노동의 재조직화는 협동의 관계를 조직하고 확장해가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¹¹⁾ 마을, 공동체, 협동의 가치에 주목한 커뮤니티 전략과 대안적 노동양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협동적 생존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돈이 없어도 노동력을 제공해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와 조합원노동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분배 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시장 밖에서 국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서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안이자 노동자들의 삶에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

한살림 노동은 어떤 특성과 과제들을 가지고 있나

많은 경우 협동조합에서 노동은 초창기 단순한 형태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형태로 분화하고 변화해 간다. 한살림 역시 초창기에는 노동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운동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적 활동으로 운영되었다.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를 포함해 당시

11) 도미니크 슈나페르,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김교신 역, 동문선, 2001.

한살림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노동으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물품을 공동으로 주문하고 소분하고 안내하고 생산지를 다녀오는 등 한살림의 조직 운영과 활동의 많은 부분을 조합원들의 자원활동이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합원 가입과 물품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이것이 사업규모 확대와 업무 전담자 채용 증대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한살림에 노동 영역이 비중 있게 자리 잡게 되었고, 사회적 기준을 고려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조합원활동과 조합원노동의 분화도 나타났다. 매장과 주문상담, 조직활동 영역에서 조합원의 노동 참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일부나마 자원활동 영역에 대한 실비 차원의 활동비도 지급되기 시작했다.¹²⁾

이처럼 한살림에서 노동의 성격이 변화되어온 데는 한살림의 조직 체계와 사업의 성격, 조합원 생활양태의 변화 등이 함께 영향을 주었다. 한살림농산에서 시작해 생활협동조합 형태를 갖추기까지 조직 형태의 변화와 맞물려 노동의 성격과 유형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생협으로의 전환에 따라 조합원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자율적 조합원활동과 조합원노동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살림 사업의 무게중심이 공동체 공급에서 개별 공급을 거쳐 매장으로 이동하면서, 공급사업 영역의 남성 실무자노동과 비교해 여성 활동가들이 주로 담당하는 매장 영역에서 조합원노동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¹³⁾ 또한 조합원의 생활양태와 욕구

12) 「한살림 생협의 노동: 한살림 생협 운동의 주체와 역할」, 조합원노동 재정리를 위한 모임 보고서, 2015.

13)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한살림 전체 사업에서 공급대비 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에 이른다.

의 변화도 한살림의 노동 영역에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용편의성에 대한 조합원 욕구 증대는 매장개장 시간 및 요일의 확대로 나타났고, 조합원의 자기결정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매장의 자주관리 노동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나아가 먹거리를 넘어선 조합원 생활의 필요들이 돌봄과 같은 새로운 노동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살림에서 노동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4년 조합원노동 정책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한살림서울을 중심으로 조합원노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살림 노동의 주요 영역을 ‘조합원노동’과 ‘실무자노동’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조합원노동은 조합의 특정 업무 영역을 조합원에게 위탁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으로, 자율성과 함께 조직적 약속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노동은 생활 경험과 감각을 가진 주부 조합원의 특성을 살리는 노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순환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논의 과정에서는 조합원노동 영역에 매장과 주문상담, 조직활동, 위키즈 등이 포함되었으나 10년 후 재논의 과정에서는 사업체 영역에서 물품을 매개로 한 소통을 조합원노동의 핵심 업무 영역으로 정리하였다.¹⁴⁾ 여기에서 현재 한살림은 자주관리매장과 돌봄 노동 등 다양한 일공동체 형태를 조합원노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모색해가고 있다.

한편, 실무자노동은 업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 및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 책무로

14) 이 과정에서 초기 조합원노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조직활동 부분은 조합원노동과 구분되어 결사체 영역에서의 상근활동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고 있다.¹⁵⁾ 초기에는 한살림운동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실무자의 역할을 설정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협 조직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임금노동의 성격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살림의 실무자들은 임금노동자인 동시에 운동의 주체로서 복합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빠른 성장과 환경 변화에 맞춰 실무자노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가 적절히 마련되고, 직원협동조합을 비롯해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노동의 영역도 적극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결국 조합원노동과 실무자노동의 개념 구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주체성을 살려서 한살림운동의 역량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한살림이 지금까지 개념적 혼란을 무릅쓰고 한살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원이나 파타타이머가 아닌 실무자나 활동가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노동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살림 안팎의 빠른 변화를 고려할 때 노동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집중해서 다뤄갈 필요가 있다. 현재와 앞으로 한살림이 다뤄가야 할 노동의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합원노동과 관련한 문제다. 조합원노동 영역은 노동 시간 측면에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노동 성격 면에서 여성들의 살림살이 경험과 상대적으로 친화성이 높으며, 노동 환경 또한 조합원 조직으로서 감정노동이 상대적으로 덜할 뿐만 아니라, 노동 내용 면에서도 사회적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 환경과 조합원 구성의 변화와 함께 조합원노동의 의미가

15) 주로 한살림 조직에서 공급과 물류, 전산, 회계, 홍보, 조직 경영 및 운영과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실생활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서 평가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한살림은 중산층 조합원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점차 다양한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¹⁶⁾ 가계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주부들의 노동 참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¹⁷⁾ 이 과정에서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 역할과 유형 등에서 다양한 노동 영역들을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긴장도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노동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과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한살림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살림에서 실무자와 활동가를 포함해 임금노동 영역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임금노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조합원 자원활동 영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조합원의 자원활동과 노동의 의미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고 노력과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보상의 문제로 다루어 대상화하는 현상도 일부 생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비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노동과 연결시켜 바라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의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도 심각한 과제다. 이런 현상은 최근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 조치와 맞물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살

16) 2014년 조사에 따르면 한살림 조합원의 소득수준은 전국 가구당 월평균 가구소득보다 평균 약 18.3%p 높게 나타났지만, 이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도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2014년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한살림연합·모심과살림연구소, 2014.)

17) 맞벌이 가족의 증가에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전제품의 보급과 주부들의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 욕구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림 매장과 물류와 가공생산지 등의 노동 영역은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받을 전망이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not for profit)’ 협동조합 조직으로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경영구조에서 급격한 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비자 조합원이 주인인 생협조직에서 직원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다루기란 더욱 간단치 않다. 한살림의 경우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조합원이 이용하는 물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생산자가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¹⁸⁾, 사회 전체가 저성장 상태에 빠진데다 소득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조합원의 물품 구매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고 생산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 협동조합 경영 자체가 지속불가능해질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살림은 노동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하나

조직의 변천에 따라 노동의 의미와 성격도 계속 변화되어오면서, 한살림에는 현재 다양한 노동 유형이 존재하고 있고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도 다양하다. 따라서 한살림의 관점에서 노동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합의와 공유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살림에서는 사업과 활동의 영역과 실무자와 활동가의 역할이 경직되게 구분되어 적용되는 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의 구분이 모호하고 중첩된 형태로 나

18) 물론 조직체계 전반에서 운영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타나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¹⁹⁾ 사실 이 부분은 한살림이 노동 문제를 논의할 당시에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²⁰⁾

관련해서 한살림에서 조합원노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리도 필요하다. 활동가를 중심으로 조합원노동을 도입한 배경에는 조합원의 정서와 생활 경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조합원과 대면하는 사업과 활동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살려 협동노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 역량을 가지고 한살림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조합원활동과 노동 영역에서 역할을 마친 후에도 한살림과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실무자노동 영역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원칙 마련과 정당한 평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의 성격에 맞는 역할 배치도 필요하다. 표준화되고 매뉴얼화된 노동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자율성과 주체성이 필요한 노동 영역은 권한과 역할의 과감한 위임을 통해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역할의 수행으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한살림의 노동 구조와 특성에 대해 조합원에게 적극 안내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19) 일부 지역 한살림에서는 실무자와 활동가의 개념 구분을 없애고 역할에 따라 재배치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20) “현재 실무자노동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합원노동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조합원노동 영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무자노동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이중구조의 고착화이다”(『한살림운동과 조합원노동의 이해』, 조합원노동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한살림, 2005)

한편, 한살림 각 지역과 역할의 특성을 고려하되 전체적으로 노동 영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조직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협동조직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야 하는 한살림에서 노동 영역 간 차이들이 커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갈등으로 내부 결속력이 저하되고 지역 및 영역을 넘나드는 노동의 이동과 순환도 어렵게 된다. 별도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계획을 가지고 경영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임금과 활동비 수준의 균형을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살림 조직의 틀을 넘어서 노동의 대안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고민과 실천을 확장시켜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의 가치를 임금 인상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어, 노동 문제를 조직 내부의 과제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살림운동 차원에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하고 한살림의 가치를 담은 생산과 소비양식을 만들고자 했던 그동안의 고민을 대안적 노동양식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그동안 한살림은 도농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의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활동을 펼쳐왔고 이를 통해 땅과 물, 자연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운동의 차원에서 대안적 협동경제 모델을 적극 만들어가면서 바람직한 노동양식에 대한 탐색과 실천도 활발히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살림이 강조해 온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활양식 창조’를 현실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밀레니얼 세대의 일과 삶

밀레니얼 세대 당사자가 말하는 노동과 삶에 대한 생각과 경험,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를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과 활동 현장에서의 소통, 변화, 혁신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글 두 편을 엮었다. 개인적 삶과 사회적 흐름을 통해 노동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대안적 노동 형태와 조직문화, 일터의 변화를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하는 글이다.

밀레니얼 세대, 나의 이야기

■ 지난 8월에 열린 인농 박재일 선생 7주기 기념 이야기마당에서 발제한 내용을 재정리한 글.

김민경

올해 창립한 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문화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끊임없이 실험하며 만들어가고 있다. 혼자 그림 그리기와 춤추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kimmingyeong@hansalim.or.kr

2년 전 어느 행사 자리에서 한살림 청년 노동자로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청년 조합원을 조직하고 싶다는 것, 즐겁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것, 그래서 서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고 나의 젊음을 한살림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뒤로 2년간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다.

특히 한살림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실무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노동(활동) 형태를 바꾸면서 노동시간이 줄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인적 삶에서는 ‘한살림’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아이러니의 시간을 겪었다. 작년 한 해 적게 벌고 적게 썼는데, 돌아보면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 텃밭도 시작하고, 밥을 자주 해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삶에서 농업살림(쌀 소비), 밥상살림(밥 짓기)을 실천할 수 있었다. 손바느질로 옷도 지었다. 읽고 싶은 책도 많이 읽고, 그림도 그리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 청년, 특히 1인 가구의 먹을거리 운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혼밥혼술 모임을 기획해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던 때에, 마침 식생활지원팀에서 식생활교육문화센터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제안을 받아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식문화뿐 아니라 노동이나 조직 문화에도 관심이 있었던 차에 옮긴 조직은 사단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 노동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다. 재미있고 또한 힘든 길이 시작되었다.

나는 87년 토끼띠다. 세대구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에 속한다. 분명 그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특성이 있겠지만 또한 한 가지 성향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세대인 것 같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즐겨워하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세대이면서 또한 SNS나 인스타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고, 자아 표현의 욕구를 가진 세대다. 한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3포세대라는 말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9시

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기보다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시선도 한편에 있을 것 같다.

밀레니얼 세대가 사무국장이 되었을 때

실제로 식생활교육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실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사무국장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다.

우선, 실무자/활동가의 호칭¹⁾을 없애고 살림꾼으로 통일했다. 주 30시간만 근무하고, 9시-10시 중 선택해 출근한다. 유급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 급여체계는 기존의 호봉제나 연봉제를 택하지 않았고, 2년차부터는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잘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자연스럽게 조직문화가 평등해진다. 단, 1년차에 한해 15만원이 적은데, 대신 다른 살림꾼들이 1년차 살림꾼의 교육과 멘토 역할을 한다. 예전 학습모임에서 들은 프랑스의 한 공동체 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순환제로 만들었다.

우리는 내규, 정책, 일의 방향성을 매주 회의에서 함께 결정한다. 평등한 의사결정구조다. 한 사람의 간사가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1) 한살림에서는 보통 조직운영과 사업, 물류 등의 직무를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하는 실무자와, 매장 및 조직활동 영역 등에서 조합원의 물품이용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가의 구분이 존재한다. (편집자 주)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작성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자기가 맡은 분야의 세세한 부분은 담당자가 정하도록 한다. 결정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 주체성이 발현되지 않는다고 본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담당자가 결정하고 책임감을 갖고 동료들은 지지해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자율성이 올라가고, 자기 일이라는 생각, 자기 전문성을 키워간다는 마인드를 갖게 된다. 긍정적 측면이다. 물론 부담도 갖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잘못했을 때는 이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피드백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휴일 근무 시 한 달 이내 쉴 수 있도록 하고, 휴가도 다 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지원하고, 배운 것을 바로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규정집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가능한 심플하게 하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내용이 있을 경우 바로 다음 회의 때 논의해서 수정한다. 그래야만 규정과 지침을 따르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고, 본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는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리더는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 각자 의견을 존중해주고, 모으고, 결정 과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맥락을 잡아서 공동의 의견을 뽑아내주는 리더를 지향한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리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감수성을 갖춘 리더를 원한다.

법인을 8개월째 운영하면서 재정과 인력에 비해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힘든 점도 있다. 돌이켜보면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요구되는 바에 맞춰 계획을 세워 왔다. 그러다보니 지쳐서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하다 보면 운동의 파급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궁금해 하고 따라서 같이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급여가 적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을 분담하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여유를 느낄 수 있게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뒷밭을 가꾸면서, 전문 농사꾼이 아니다보니 생산자 분들에게 팁을 얻거나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서 시도해본다. 실험을 해보는 거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노동자로서의 실험이다. 이런 실험은 무대를 만들어주고 지지해준 한살림대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회와 다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믿고 맡겨주는 데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늘 생각하고 아등바등하지 않는다.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작게 망한다’고 얘기한다. 두려움 없이 다양한 방식을 끌어들여서 시도해보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우리 세대는 지금 하는 일을 영원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곳, 저마다의 조직이나 팀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행복한 일터와 조직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기

서동재

한살림연합 인사지원팀 실무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화, 특히 조직과 사람, HR, 리더십, 거버넌스와 같이 조직이라는 빙하의 아랫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co_dongjae@hansalim.or.kr

당신은 누구십니까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질문을 보고 당신이 어디에 가까운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 A. 나는 정의와 평등,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위험이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개인의 삶보다 조직의 사명이 우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B. 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직을 건강하게 운영하려면 분산된 리더십이나 참여형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C. 나는 개인의 삶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새로운 방식의 조직운영을 비롯하여 아이디어와 혁신에 관심이 많다.¹⁾

당신은 어디에 가까운 편인가? 다소 거친 구분이지만 이는 최근 제

1) 프랜시스 콘로이더 외,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슬로비, 2015. 인용 및 재구성.

시된 세대를 구분하는 물음이다. A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통상적으로 1955~1964년에 출생한 50대 중반~60대 세대를 일컫는다. B는 X세대로 1965~1979년에 출생한 30대 후반~50대 초반 세대다. 마지막으로 C는 이 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밀레니얼 세대로 1980~2000년에 출생한 20대~30대 중반 세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용어는 닐 하우Neil Howe와 윌리엄 스트라우스William Strauss가 1991년 출간한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들은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태어난 첫 세대로,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기술IT에 능통하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자라왔으며 디지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기도 한다.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대학 진학률이 월등히 높아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진 세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고용 감소나 일자리 질의 저하 등을 겪었으며, 평균 소득이 낮고 대학 학자금 대출에 부담을 안고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저성장 속 높은 실업률로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출산 등을 포기하여 스스로를 ‘N포 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강력한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²⁾

이 글은 혼한 청년세대 담론에 관한 글은 아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와 조직 내 세대변화가 가져올 변화와 도전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나와 그들이 다른 존재가 아님을 느끼고 일을 함께해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였다.

2) 진저티 프로젝트, 「밀레니얼 세대의 공익활동을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동그라미재단, 2016, 4쪽.

밀레니얼 세대 너는 누구인가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중에서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 이전에 이화여대 집회가 있었다. 이화여대 사태 당시 학생들이 점거한 대학 본관에서는 민중가요가 아닌 아 이돌가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왔다.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집회문화가 광화문의 촛불로 번져 나갔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진단일 것이다. 사회 현상 속에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강력한 주체로 우리 앞에 드러났다. 밀레니얼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재미, 기술, 의미, 연결,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³⁾ 아래는 진저티 프로젝트의 「밀레니얼 프로젝트 보고서」를 참고하여 서술한 것이다.

1) #재미, #덕후⁴⁾ : 광화문광장에 ‘장수풍뎡이연구회’(곤충 연구와 관련 없음), ‘민주묘총’, ‘전전련’(전국전주연합) 깃발이 나부꼈다. 밀레니얼 세대는 진지함과 불편함보다는 재미와 유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측되는 재미없음을 일단 피하고 본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특별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 일에서도 재미 요소가 있길 바란다.

3) 진저티 프로젝트, 위 보고서. 인용 및 재구성.

4) 일본어 오타쿠(御宅)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오덕후’의 줄임말로 오타쿠는 원래 집이나 댁(당신의 높은 임말)이라는 뜻이지만 어떤 분야에 몰두해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2) #경험 #YOLO #워라벨⁵⁾ : TV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에서 한 출연자가 혼자 캠핑카를 끌고 아프리카를 여행 중인 한 여성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했더니 그 외국인 여성은 “YOLO(You Live Only Once, 인생은 한 번뿐, 현재를 즐기자!)”라고 화답했다. 미래보다 오늘,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연대는행토닥 김기민 이사장의 발언⁶⁾이 함축적으로 이 말을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논하지 말자” 밀레니얼 세대는 이처럼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

3) #기술원주민 : 이들은 슈퍼맨보다 아이언맨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테크놀로지 환경을 경험해왔다.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테크놀로지를 통해 증강된 개인들이다. 모바일, SNS와 떼어놓고 논하기 힘들다.

4) #연결 #영향력 : 이들은 접속함으로써 존재한다. 연결되길 원하지만 사회적이지 않은 신新 개인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느슨한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불어 소통과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새롭게 정의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해시태그⁷⁾를

5)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원래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HRD 용어사전)

6) 인농 박재일 선생 7주기 기념 이야기마당(2017. 8).

7) 해시태그(hashtag)는 게시물에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이다.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해시(#)을 붙여 연관된 정보를 한데 묶을 때 쓴다. SNS상에서 핵심어를 편하게 검색하는 데서 나아가 정치 도구, 광고 수단, 문화 현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통해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들은 영향력, 확산의 중요성과 변화 가능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 5) #의미 #가치 : 작년 9월에 방영된 SBS 스페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대기업에 입사해 놓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비효율적인 구조, 성장이나 의미는커녕 보여주기 위한 삶을 강요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꿈을 찾아 떠난다는 젊은이들의 퇴사 사연이 이어졌다. 켈리글로벌 산업인력지표KGWI에 따르면, 젊은 직장인 중 51%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연봉이 줄거나 직위가 낮아져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내가 나로 일할 수 있는 곳,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자 한다.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조직에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조직과 어떻게 만나는가

아마도 젊은 세대가 비영리조직을 떠나는 것은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명 그 자체 때문이 아닐까? (중략) 우리가 만난 젊은 세대 실무자는 단체의 원칙과 조직 내부의 실행 방식이 충돌하여 사명이나 정신이 흔들릴 때 특히 힘들어했다. 젊은 세대는 먼 곳이 아닌 바로 자신의 조직 안에서부터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길 원한다. 그에 반해 선배 세대 리더는 실무자와 함께 사명과 비전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는다.

— 프랜시스 쿤로이더 외,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중에서

미국의 비영리섹터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쓴 위 글에서 한국과 미국, 영리와 비영리를 연결하는 어떠한 보편성을 읽는다. 필자가 2014년에 참여한 동동프로젝트⁸⁾(활동과 노동사이)에서 만난 시민사회 섹터의 다양한 활동가들도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청년들이 지속가능하게 활동과 노동을 하려면 무엇보다 민주적인 조직 문화와 주체성을 담보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 노동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뭘 기대하냐, 그렇다고 했을 때 전 두 종류인 거 같아요. 자발성이랑 그리고 내가 협동을 해서 노동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발성에 근저한 노동이고 협동 노동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시민사회 섹터에 뛰어들다구요”⁹⁾

오늘날 영리와 비영리를 막론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일’을 힘겹게 하는 것의 기원은 무엇일까? 아마도 1930년대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 Frederick Winslow Taylor의 경영방식이 주류가 되고 나서부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테일러는 잘 알려진 것처럼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로 공장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 도구들을 제안했다. 그의 방법은 생산 시스템의 모든 작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불필요한 작업은 제거하고, 노동자들에게 각각의 작업을 자세하고 구체적

8) ‘활동과 노동사이’의 줄임말로, 2014년 사회적 섹터(시민단체,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비영리 영역)의 조직문화, 의사결정구조, 인력양성, 비전수립, 성과측정 등을 주제로 활동가들의 현황을 인터뷰를 통해 인식하고 공감을 확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더 플랜B(nowplanb.kr)에서 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다.

9) 이영룡·명수민, 「한국 청년세대의 사회적 노동 경험」, 청년허브, 2014, 105쪽.

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테일러 이후 노동자들은 똑같은 삽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업무실적을 ‘관리’하는 일에 불을 지핌으로써 산업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 테일러의 아이디어와 경쟁한 인물은 바로 엘턴 메이오Elton Mayo인데, 그는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의 호손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호손 연구Hawthorne studies를 진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연구에서 메이오는 직원들이 회사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상사가 자신들의 이익과 성공에 관심 있다고 느끼는지 아닌지가 생산성과 사기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다. 메이오의 발견은 인간관계 운동을 태동시켰으며, 관리자의 역할을 ‘직무 기준을 측정하고 시행하는 것’에서 ‘그러한 기준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¹⁰⁾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 XY이론으로 유명한 맥그리거D. McGregor, 매뉴얼노동자와 대비되는 지식노동자의 탄생을 알린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라고 할 수 있다. 테일러의 조직은 기계에 비유할 수 있다. 목표지향적 경영 스타일을 반영하여 상급자가 전략을 설정하면 하급자에게는 그 전략을 수행할 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안타깝게도 비영리섹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많은 조직에 여전히 테일러의 망령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단지 기계의 작은 부품으로만 존재하기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길 원한다. 이들은 공유가치에 근거한 의사결정, 피드백, 전 구성원의 높은 참여도를 지향한다.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아우르는 균형과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 계급과 상관없는 권한 부여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10) 데이비드 버커스, 『경영의 이동』, 한국경제신문사, 2016. 168쪽.

“우리에게는 수백 년 동안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서 제조업 경영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회사를 경영하는 법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제조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립자

최근 기존 경영 도구들의 기본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품으며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¹¹⁾’조차 과감히 없애는 흐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직원 채용을 팀에 위임한다거나, 관리자를 대폭 줄인다거나, 실적 평가를 폐지하거나, 고객보다 조직구성원을 중요시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실험들은 4차 산업혁명과 맥락을 같이하며 경영의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재고하는 움직임들이다. 혁신이 필요한 곳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람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조직일수록 변화적응적인 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머지않아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인해 비영리 영역에서 리더십 전환에 따른 혼란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들려온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보자.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고용하는 인구가 전체 고용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지금¹²⁾, 협동조합다운 경영을 통해서 밀레니얼 세대와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우리 무엇부터 할 수 있는가?

11) 특정한 사업, 활동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낸 운영방식을 뜻한다.

12) 156개 국에서 2억 7940만 명이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고용인구의 9.46%에 해당한다. (Hyungsik Eum, COOPERATIVES AND EMPLOYMENT, second global report, CICOPA, 2017.)

우리에게 ‘소소한’ 대화가 필요해

요즘 젊은것들은 버릇이 없다. - BC 1700 수메르 점토판

밀레니얼 세대가 예의가 없고, 힘든 일을 싫어하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충성심이 낮고, 보상에 관심이 많고, 의존적이라는 생각이 수강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힘든 일을 싫어한다’는 것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에 해당되는 수강생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흥미롭다. (중략) 하지만 솔직해지자. 예전에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순응했다는 건 진짜 사실일까? (중략)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힘든 일을 언제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 유정식¹³⁾

유정식은 밀레니얼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의 평가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선배 세대들은 조직과 자신 사이에 일체감을 느끼는 ‘조직몰입’이 성공 방정식의 중요한 변수라고 느끼는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경력에 훨씬 무게중심을 둔다고 말한다. 따라서 조직의 전략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상사와 경영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지시를 내리더라도 묵묵히 따르는 게 조직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군대식 사고방식이라면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의 경력에 몰입하는 건 뒤바뀐 놓기 불가능한 거대한 방향이니 그 경력몰입의 흐름을 조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즉, 경력몰입의 장을 조직이 열어주고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함

13) 유정식. infuture.kr/1626, 2017. 인용 및 재구성.

으로써 조직과 개인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조직과 밀레니얼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전제는 또 있다. 조직의 변화 적응 역량(Adaptive Capacity¹⁴⁾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발달과 더불어 사회상이 다변화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조직의 역량과 여기에 참여하는 조직 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변화 적응 역량이라고 한다.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할 역량 부족으로 직면한 현실 사이의 격차를 우리는 어떠한 문화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 대부분의 조직 규칙은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에 조직 구성원들이 맞춘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변혁적인 리더십¹⁵⁾이 필요한 시대에 미래 지향적인 조직은 ‘조직 분위기’에 개인의 감정을 맞추기를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보다 ‘조직이 구성원 개개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후배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청취하기를 제안한다. 그래야 미래 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고, 비로소 ‘선배’로서의 ‘면(권위)’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배들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선배들의 ‘미래지향적 전략’일 수 있다

14) 로널드 A.하이페츠 외, 『어댑티브 리더십』, 슬로워크, 2017, 92쪽.

15) 변혁적 리더십은 베버(Weber, T.)가 처음 논의를 한 후에 번스(Burns, J. M., 바스(Bass, B. M.)에 의해 행동리더십모델로 정립되었다. 이는 거래적 리더(transactional leader)와 대비되는 리더 모델이다. 거래적 리더는 하위자에게 각자의 책임과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각자의 행동에 어떤 대가가 돌아갈 것인지 합의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와 달리 변혁적 리더는 주어진 목적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하위자의 인식수준을 제고하고, 하위자가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서 자신과 집단,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하위자의 욕구수준을 매슬로우(Maslow, A. H.)가 제시하였던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하위자를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끔 돕는다. 즉,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기대되었던 성과”만을 하위자로부터 얻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하위자로부터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HRD 용어사전)

는 것이다.¹⁶⁾ 자포스의 CEO인 토니 셰이는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하기보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펼치고 스스로 문화를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축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협업하기 좋은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런 ‘느낌’을 자체적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아주 소소한 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묻기보다 “무엇을 시도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다면 상대의 자율성과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확장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 묻기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느꼈니?”라고 묻는다면 앞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꿈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앞서 밀레니얼 세대는 이러하다는 입장을 소개하였지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 독자들 가운데에도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보며 자신 또한 저런 측면이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들 또한 모두 한때 청년이었고, 누군가의 후배였고, 지금도 밀레니얼 세대의 여러 측면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밀레니얼 세대 역시 동시대인으로서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들을 공유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16) 최인수 외, 『2017 대한민국 트렌드』 (“조직 문화 VS 감정 : 지금,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국경제신문사, 2016. 224쪽.

사람들이므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션, 우리가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밀레니얼 세대 실무자, 활동가들의 일의 의미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더불어 ‘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와 같이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일과 사람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언젠가부터 비영리조직조차 세부적인 업무활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관리해왔다. 이제는 우리가 닿고자 하는 미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개개인의 일에 대해서, 학습과 성장에 대해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렵기에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해야만 더 나아질 수 있기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답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러했듯이.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중에서 

IMF 이후 한국 사회적경제의 성찰

김정원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연구위원장, 다른미래협동조합 이사

■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2017년 4차 포럼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보통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조직은 대부분 정부 제도에 의해 인증 혹은 인정받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경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이들 조직을 사회적경제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사회적경제현장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라벨을 붙여주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회적경제이고자 하는 현장, 그래서 자기 전략과 기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전략적 현장’을 찾아냄으로써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그 전에 우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조직화되어온 과정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김정원의 최근 논문인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화 특성에 대한 분석’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조직되어 온 과정을 경로의존성과 결정적 국면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김정은은 196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를 구사회적경제 시기로, 97년 이후에서 현재까지를 신사회적경제 시기로 구분한다. 사회적경제를 신구新舊로 구분하는 방식은 캐나다에서 시작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신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통해 기존 조직 중심의 오래된 사회적경제와 달리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운동을 비롯해 사회운동과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는 사회적경제를 사회 변화의 새로운 담론과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으로 재구성하는 결정적 국면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의 존재, 발전주의의 자장,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착근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 등 남아 있는 과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90년대 말,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알아가다

1998년 가을 자활지원사업에 실무자로 참여하면서 이 영역에 몸담게 됐다. 당시에는 사회적경제라고 하지 않고 주로 '제3섹터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일정하게 있었지만 지금과는 달리 자활지원센터 활동의 틀이 규격화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지역의 건설일용노동직 쉼터나 저소득층 여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설명하고 같이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통장 만들어서 다달이 적립하고 그만두겠다는 분들께 돌려주는 등 여러 일들을 했다. 당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동네에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대보름이나 대동제를 복원해서 2년 정도 운영하기도 했다. 이후에 주민들에게 넘겨줬는데 지금은 성격이 다소 바뀌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동네 신문도 만들어서 1년 정도 운영했다. 마트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해서 기사 쓰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의 지역아동센터 형태를 초기 2-3년 정도 집중적으로 했다.

처음 생각했던 사회적경제와 간극을 보이는 지금의 사회적경제, 어디에서 어긋난 것일까?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의 개념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여러 연구자분들의 도움도 있었다. 작은 몰랐지만 이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이고 이런 활동들이 정착되고 확산되면 상당히 다른 사회가 될 거라는 꿈을 가졌었다. 지역의 많은 토래 활동가들이 그랬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우리가 가졌던 사회적경제

에 대한 꿈에 비추어 지금 작동 방식은 상당히 거리가 있게 흘러가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어지는 해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었다. 자활센터장으로 일할 때는 공무원들과 종종 싸우기도 했다. 물론 우리 활동이 항상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개입하는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다.

지난 활동에 대한 성찰로부터 다시 시작

최근 3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지나간 역사와 개인적으로 가졌던 고민들을 다시 정리할 기회를 가졌다. 첫 번째로 쓴 논문은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담론이 형성되는 데 있어 하나의 출처라 할 수 있는 도시빈민운동을 찾아서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많은 충격과 반성이 있었다. 우리가 활동했던 과거에 대한 아쉬움도 들었다. 왜 도시빈민운동에서 90년대 노동자협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경제 담론과 연결되는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주민 주체라든가 공동체가 어떠한 맥락에서 도출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무조건 공동체는 좋은 것, 주민 주체는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활동해온 데 대한 반성이었다.

열악한 조건에도 선전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협동조합운동

90년대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때 또 한 번 반성을 했다. 그전에는 90년대 노동자협동조합운

동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큰 고민 없이, 남들이 실패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본 것이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심지어 그 운동을 경험하신 분들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물론 90년대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그 조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다른 맥락에서 보니, 자조적인 얘기가 아니라 노동자협동조합이 그 정도만 돼도 당시 시대 상황과 그들의 경험과 업종 특성을 봤을 때 오히려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다는 생각이다. 그런 관점으로 지나간 역사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경로의존성 개념으로 본 사회적경제와 국가

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 불리는 조직들의 활동이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의 기획 속에 편입되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이 문제의식을 풀기 위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차용했다. 결과적으로 60년대부터 역사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경로의존성은 일정한 경로가 형성되면 그 경로 안에서 제약을 받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뜻한다. 그 속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주 대응 방식들을 돌아보았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등장하고 확산된 시기가 90년대 이후이다. 물론 그전에 사회적경제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결정적 국면의 시점을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상황이라고 보았다.

첫째, 그 시기 사회적경제 담론이 등장했다. 그전에는 개별적인 활

동들, 예컨대 생협, 공동육아, 노동자협동조합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의 틀로서 기획되지 않았다.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라는 담론으로 재구성되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그 이전의 사회적경제라 할 수 있는 집단들(스스로 사회적경제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념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전제할 때), 예컨대 농협, 수협 등은 주로 국가의 기획에 의해 발전주의라는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보조 기구로서 등장하고 존재해왔다. 반면, 80년대 후반부터 그 맥아가 형성되어 9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라고 부르는 활동들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활동들조차 관련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국가에 의해 규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설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실천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제도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사회적경제로 규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가령, 레츠LETS 활동이나 공정무역 등이 그렇다.

국가의 발전주의적 통치방식이 적용되는 중간지원조직

또한 국가의 강한 영향력의 증거로서 요 근래 많이 이야기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다. 논문을 쓰면서 만난 분들 중 한 분은 중간지원조직을 ‘마름’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나는 대행통치라고 썼다. 이는 개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아니라 전반적 작동의 매커니즘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발전주의적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다. 최근 전북의 한 도시에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몇 년 까지 사회적기업 몇 개, 마을기업 몇 개를 만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소위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으로는 현장에서 역량 있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현장의 토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유한 달 까, 불안정 상태가 유지된다.

중간지원조직이 그 지역사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반영하면서 작동하기보다는 짜여진, 혹은 이미지로서 좋게 보이는 활동 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뿌리 내리 고 튼튼해지려면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힘이 강해져서 나름 정치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 중 그런 활 동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곳들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몇몇 사 례가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정 부나 지방정부의 재원을 둘러싸고 서로 경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90년대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라고 보았다.

국가의 발전주의 정책에 동원되었던 사회적경제 조직

그렇다면 한국에서 국가란 어떤 존재일까.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 해 역할 한 것은 1960년대 이후였다고 본다. 그때부터 경제발전 정책 이 형성되고, 농협과 수협 등이 만들어지고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 로 생기기 시작했다. 국가가 하나의 통치기구로서 본격적으로 자리매 김한 것이다. 통치기구로서의 국가는 발전주의를 목표로 내걸었고 발

전주익은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합의 속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발전주의적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운영하는가가 국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국가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듯 농협, 수협 등을 만들어 한편으로는 재정을 통할하는 출처로서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 국민들(농민, 노동자 등)을 동원하는 체계로서 또한 활용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힘이 강해지고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그런 태도에 일정한 변화는 있었다. 하지만 이미 깊게 뿌리 내린 국가의 작동 방식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국가와의 결합을 통해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경우 한편에서는 60년대 이후 저항의 조직화가 진행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 더 많은 부분에서 저항의 조직화보다는 국가와의 결합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 크게 진행된다. 가령, 70년대 소비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정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된다. 사회복지 기관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를 제대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집행력을 투입하기보다는 돈을 쥐서 관리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취해왔다. 선별적 관리다. 그러다 보니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기관들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한다. 돈을 넣으면 넣은 만큼 나온다는, 소위 자판기 방식이다. 다시 말해 국가와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속된 표현으로 ‘뜯어먹어야

할 대상'이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서 우리 기관이, 우리 조직이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결정적 국면이 있었지만 경로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적경제

이런 경향은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도 나타나지 않는가. 2010년쯤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일한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활동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거군요.”라고 묻기에 맞다고 했다. 그 이전의 분위기는, 가령 어떻게 하면 정부와 가까워지고 제안서를 잘 써서 지원을 받아낼 것인가에 주로 관심이 가 있었는데 그 강의에서는 기대와 동떨어진 얘기를 한 거다.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기 전에는(2007년 이전), 우리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관련 정보에도 빨라서 지역에 그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가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역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지역에서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 이미 사회적경제로 일컬어지는 각종 조직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 많은 조직들이 각자의 개별 경로를 통해 정부와 관계 맺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규범적 얘기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같이 만나서 학습하고 고민을 나누는 몇몇 그룹들은 남아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보자.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해 가져왔던 기본적 태도와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자체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변화된 게 없다. 시민사회 역시 국가에 대한 대응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해서 변화하려는 노력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게 과연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관적이다. 경로가 한 번 형성되면 오랜 기간 작동하는데, 90년대 후반에 분명 일대 전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후 형성된, 어쩌면 더 오래된 관계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변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계승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에 더 관심이 있는데, 교과서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노동운동과 한 뿌리이고, 실은 그 자체가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가령 조선노동공제회와 같이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은 조합 형태로 등장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은 국가의 강한 억압 속에서 자리매김해왔던 탓에 저항성을 갖지만 한계가 보인다. 예컨대 임금상승을 중심에 둔 활동으로 개별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지 사회 전반의 포괄적인 전망 속에서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 진영과의 관계도 썩 좋은 것 같진 않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과 노동운동 진영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사회적경제 조직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담론과 실천을 이끌어왔던 존재였고, 정부 사업을 비롯해 몇몇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지역사회, 즉 언론이나 다른 운동 진영에서 그 사회적경제 조직을 ‘업체’라고 부른다는 것

이다. 일반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언제든 업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반 기업과 차별성 없는 존재로 불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회적경제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사회적경제라고 하는가. 교과서적으로 이해할 때 사회와 경제는 결코 분리된 게 아니다. 경제활동 자체가 사회활동이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시대는 경제활동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켰다. 특히 그 경제활동은 이윤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온갖 재앙들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에 나는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어떤 이는 환대의 경제, 즉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회적경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현실에서는 정부에 의해 호명되었을 때만이 사회적경제로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사회적경제 진영 내부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 사업을 하기보다는 경합하게 되는 모습이 일상화되었다. 다시, 무엇을 사회적경제라고 하고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들을 사회적경제의 실천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

여러 연구자들의 글을 보면 해외의 경우에 사회적경제로서의 정체성은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발전해내고 스스로 사회적경제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프랑스의 사회적경제현장도 자신들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 내부의 정체성이 정립되기도 전에 정부에서 먼저 해낸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경제에 대해 조직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고, 법적 기반들과 결부되며 정부 지원이 중심이 된다.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상적 맥락을 동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동학이 발생한 19세기 중후반은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나 사상운동이 많이 발생한 시기였다. 그런데 문제는 동학 연구자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점점이 별로 없다. 가령 『어소시에이션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보면 프랑스혁명기에 나왔던 다양한 활동가 겸 사상가들, 사회적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상적 배경 등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가령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것처럼 사상적 맥락에서 접근한 시도들을 발견하기 어렵다. 주로 신고전파경제학의 방법들을 활용해 농협이라든가 협동조합 조직들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내용들이 있을 뿐이다. 사상은 실천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천은 제대로 정립되거나 축적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사상적 맥락에서 조명하거나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어오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각계 주체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조직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기로는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닐까.

만남과 실천의 공간을 넓히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력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로 모색되는 업종별, 지역별 협의회들의 경우 지극히 업무 중심, 사업 중심이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만 만나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것이 매개가 되기도 하지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놀이터 같은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도 주로 행사가 있을 때 협력해서 진행하지만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천가, 활동가들이 일상에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편한 공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 행사나 목적을 가진 공식적인 업무로 주로 만나게 된다. 그 외에는 단절이다. 인간의 삶은 연속되는 것이고 그 연속선상에서 사회적경제라 일컬어지는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자기 조직의 생존과 성장 이외에 다른 데 관심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현장의 사례를 잘 모를 수 있다. 가령 충남 지역을 보면, 내부의 시선으로는 허점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조직 방식이 많이 있다. 천안의 우리동네협동조합처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 돈을 내서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충북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종잣돈을 내서 후속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연대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한살림이 지역자활센터와 결합해서 자활기업이 한살림생협의 물류를 담당하는 공동사업이 구축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려내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일상적인 만남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생태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국 협동조합운동

© 충남연구원

원테진

농촌을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 담론이 가진 한계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극복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중국인민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중국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아우르는 ‘삼농(三農) 문제’를 처음 제기해 중국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현재 중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생태농업(CSA)운동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운동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작 『백년의 급진』, 『여덟 번의 위기』가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다.

- 2017년 9월 26일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공동주최 강연 “생태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국 협동조합운동 현황 및 과제”의 내용을 정리한 글. (통역:김유익)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현재 읽기

나는 중국에서 농민, 학생, 시민사회와 함께 여러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동기는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난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철저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의 큰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인식이 없다면 번죽을 올리는 여러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본주의 위기에서, 특히 동북아 한중일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 과잉의 문제다. 알려져 있듯 서방에서 생산력 과잉이 대공황을 불러왔고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생산력 과잉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거의 멸살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원주민이다. 즉 외부에서 온 식민 정복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 외부인들이 만든 제도와 경험에 근거하고 그것을 복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 한중일 3국의 많은 학자들이 서구에서 만든 대규모 제도화된 농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모델은 앵글로색슨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인 북미, 중남미,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업을 상기해보면 농장주는 원래 그 대륙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백인이다. 원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도 없었고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들을 살육했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그곳에 백인들이 농장을 만들었다. 그런 기반 위에 등장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은 아시아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행할 수 있는 농업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모델은 북미, 남미, 중미, 오스트레

일리아, 아프리카에 이른다.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이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완전히 식민화되지 않은 곳은 아시아와 유럽이다.

유럽의 경우 식민화하면서 원래 그곳에 살던 인구 중 상당수가 이민을 떠났다. 내부에 인구와 자원에 대한 긴장도가 다소 낮아졌고, 지금 유럽에는 중소형 농장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시아의 경우는 이민 나가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원과 인구에 대한 긴장감이 있고 결과적으로 소농 형태를 계속 유지해왔다.

유럽의 경우 여전히 중소형 농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쟁에서 앵글로색슨 모델과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많은 보조를 해준다. 농산물 가격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자유경쟁체제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유럽 농장을 경영하는 주체들은 60% 정도가 일반 시민들이다. 즉, 원래 농민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겸업 형태로, 다른 일반 산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소득과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을 함께 자기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이 점을 아시아 모델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에 이미 유럽의 농업은 이처럼 시민들이 경영하는 농업, 즉 시민농업 형태가 됐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생태 보호 운동과 깊은 연관을 맺게 되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그 영향으로부터 녹색당을 포함한 세력들이 연정을 통해서 집권하고 법률적으로 농업을 보호하면서 지금에 이르는 것이고, 아직도 세계 자유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일의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참고하는 이론은 대부분 미국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다. 그런 바탕에서는 자유무역이나 세계화 globalization를 신봉하고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써 경쟁체제에 집어넣어 다루게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시아의 소농들은 세계의 식량

농산물 경쟁체제에서 경쟁할 수가 없다.

아시아가 앵글로색슨 모델의 식민화를 피할 수 있었던 데는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한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식민지 침략을 하려면 굉장한 먼 길을 돌아와야 한다. 당시 항해 기술로는 상당한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문명이 단절 없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문명권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미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완전히 식민화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없었다. 식민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은 곳 가운데 유럽은 식민종주국이었고 아시아는 식민지 침략으로 나아가지 않은 원주민 대륙이다.

아시아에도 필리핀처럼 예외적으로 식민화된 국가가 있었다. 400년 식민 역사를 겪은 필리핀에서는 대농장 제도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장주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백인들이고, 원주민들은 반노예상태의 농장 노동자로 살아간다.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들이지 회고해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서구 중심 담론에 의지해 논의를 진행해온 데 대한 성찰과 함께, 실질적인 실천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의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위기와 농촌 경제의 현실

지금 우리가 처한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은 3대 자본의 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농업의 위기를 가져온다. 농업은 자원경제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과잉된 자본이 이미 악성 경쟁 상태에 빠졌고, 그 자본은 농촌으로 들어온다. 농촌의 자원을 농촌으로 들어온 자본이 점유하

면서 그것을 이용해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때 사람과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약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농촌의 자원을 자본화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자연환경 오염과 먹거리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자본과잉 상태에서 자본이 농촌·농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때문이다. 정부가 통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원이 자본화되는 상황에서 얻는 수익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금융경제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초 단위 또는 0.1초 단위로 수익을 계산하는 금융경제와 달리 농업은 연 단위의 시간을 두고 움직인다. 금융자본이 이익을 독점하고 더 발전할수록 수익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게다가 금융 영역 종사자들의 수는 매우 적다. 소수가 부를 독점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10% 사람들이 64%의 부를, 홍콩에서는 75.5%의 부를 독점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불안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의 GDP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뿐 아니라 중국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세에 있고 개인 부채율은 상승하고 있다. 경제 하락이 의미하는 것은 실업이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중국에도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위기를 겪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동서의 양극화가 심하다. 동부연안에 자본과 인구, 제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하다.

경제가 하락하면 회복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를 진행하는데 오염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 오염에 동반되는 것이 식품안전 문제다. 이 문제는 또한 농업생산 과잉과 연결되어 있다. 사실 농업생산

과잉이 농업에 의한 오염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화, 공업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전략이 생태문명 건설이다. 1990년대에도 3농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시대착오적이라거나 세계화라는 조류에 반대한다는 비난이 많았던 반면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도시화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시장화, 세계화(globalization)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성진화(城镇化)¹⁾라고 하는데, 이는 영어로 표현한다면 도시화(urbanization)보다는 (영어단로는 없는 표현이지만) 마을화(townization)에 가깝다. 독일 예를 들면, 100만 명이상이 사는 도시가 세 개밖에 없다. 대부분 10만 명 이하로, 우리로 치면 군면 단위 정도 규모다. 이 정도를 인구 밀집지라고 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밀집한 곳은 아니다. 도시화 대신에 이런 식의 방향을 추구하며 성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성진화를 통해서 지방과 농촌 문화를 이용해 농민



1) 일반적인 도시화와 구분해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어로, 대도시(성)는 물론 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진)으로의 인구 이동까지 포함하고 있다.(편집자 주)

들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독일의 옛 농촌 마을에서는 중세의 집들을 그대로 보존하며 심지어 집에 전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옛날 삶의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농촌에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관농업 사례도 있다. 다양한 농산물과 화훼 작물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도시민들이 여행을 오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원래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다원적 요소를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유럽 시골마을에 있는 4성급 호텔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호화로운 호텔과 달리 강철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예전 농촌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생태문명과 신농촌 건설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중국 정부는 2001년부터 생태문명 건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산업화·현대화 과정을 거쳐 생태문명화로 21세기에 진입한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생태문명의 의미는 다양성이다. 그 밑에는 지역화^{localization}가 있고, 경제가 사회와 함께 가야 하며 인류가 자연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앞의 공업화시대에 생성된 이익집단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생태문명 건설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3농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고 그 구체적인 전략 중 하나가 신농

촌 건설이다.

3농 문제가 폭발적으로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세계화의 대가가 3농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농촌 재정 지출 액수를 보면, 3농 위기가 가중되던 초기에는 별다른 투자액이 없었다. 당시 농민들에 전가된 부담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회 혼란이 있었고 농민들의 항의 시위 같은 사회 불안 현상도 많이 발생했다. 2005년, 중국 정부가 신농촌 건설 전략을 내세우면서 급격하게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투자액이 1조 인민폐를 넘어선다. 그러한 투자의 결과 농촌의 토지 가치는 20배 이상 늘었다.

이는 중국이라는 엄청난게 큰 초대형 국가에 한해 가능한 일이었다. 투자를 통해 내륙과 주변국가로 생산성 과잉의 자본을 계속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 같은 섬이나 반도 국가처럼 거품이 쉽게 붕괴하지 않고 확장이 가능했다. 일종의 게임 같은 것이다. 농촌 내륙에 투자함으로써 실물 자산이 증가했고, 따라서 금융자산도 함께 증가한다. 면적이나 자원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이라면 이런 게임을 지속할 수가 없다. 중국의 경우 내륙으로 자본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일대일로-²⁾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건너서 유럽까지, 대륙을 넘어서는 규모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금융자본이 늘어나고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런 게임을 벌일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는

2) 60여 개 국 44억 명에 달하는 싼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일대-¹⁾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잇는 육상 싼실크로드라면, 일로-²⁾는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양 싼실크로드를 말한다. (편집자 주)

미국 정도다. 계속 개발하는 한편 계속 통화를 찍어내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국가부채 경계를 설정했을 때 금액이 4조 달러였는데 현재 14조로 늘었다. 무한히 통화가 늘어나고 동시에 부채를 늘려 나가는 것인데, 이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채권의 가장 많은 소유자가 한중일 3국으로, 중국-일본-한국 순이다.

현재의 금융 게임, 자본 게임 상황은 한편으로 유기농업, 생태농업, 협동조합 부문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중일 3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한 역사가 있다. 이게 앞의 다른 모델들과의 차이다. 한중일의 농민들은 토지가 없는 적빈계급이 아니라 토지를 개혁해서 균분한 이후에 등장한 소자강계급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태농업과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의 주요 세력은 이들 농민과 중산층 소비자들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산층들의 귀농귀촌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중산층 패닉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로 표시되는 경제력이 세계적인 대규모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위기를 모면하면서 또한 먹을거리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민들과 연대하며 자기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 그 배경 중 하나는 식품안전의 위기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금융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신경제운동 안에는 커뮤니티를 부활시키고 그 안에서 도시농업 등의 형태로 농업을 살리는 움직임이 있고, 유럽의 전환마을 운동 또한 도시 중산층들이 자신의 건강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런 움직임들은 대개 세계적인 경

제 위기 이후에 위기감을 느낀 중산층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1996-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아시아에서 일어난 대안화폐 운동이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의 신경제운동에서 보듯 위기를 경험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귀납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최근 실시한 토지개혁의 특징은 기존 토지 소유권 제도를 수정해 도시민들이 귀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자본, 중산층 화이트칼라, 도시의 노동자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민과 농민이 연합해 새롭게 창업하도록 지방·중앙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정책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시진핑은 ‘아름다운 농촌 마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1,2,3차 산업의 종합을 통해서 농촌의 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즉 레저와 여행, 교육과 문화, 역사와 전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책임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협동조합과 생태농업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회복

중국의 협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시작해 도시민들과 결합해서 발전시켜나간 것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과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3농 문제 해결의 열쇠는 첫째, 농민들의 조직화와 연대다. 농민들의 권익 또한 연대, 특히 조합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태농업을 통한 안전 보장이다. 또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 즉 농민들의 연대, 농업의 생태화, 농촌 환경의 보호를 통해



공동체대학과 농민 훈련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과 공제 자금

새로운 3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는 농민들의 생산자협동조합을 도와 주는 것이었다. 그때 내세웠던 구호가 ‘농민들의 생계가 근본이 되게 하고, 서로 협조·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다원화된 문화가 근본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 기본 원칙은 현지 자원에 기반한 권익 보호, 사회 다원적인 협력의 극대화, 생태화 실현을 통한 안전의 지속가능성 확보였다.

2003년에 농민학교 겸 커뮤니티학교를 만들고 지역의 생산자협동조합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다. 그런 모토하에 여러 지역에서 농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지원했다.



10여 년 전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중점을 둔 것은 농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었다. 농민들의 수요와 욕구에서 출발해 문화활동이나 농촌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를 협동조합 형태를 통해 강화시키는 등의 활동을 했다.

농민 고령화 또한 향촌건설운동(鄉村建設運動)에서 긴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마찬가지로 농촌 마을에서 노인회 등 노인들이 조직화하고 연대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을 노인들과 여러 문화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혼자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같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문화활동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다. 가령 그런 활동을 통해 연대하게 되면 조합을 만들도록 권하는 식이다.

농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이 직접 내려와 농민들과 연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200여 개 대학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을 교육하고 각 농촌에 내려가서 농민들과 연대하도록 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오염이나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는 생태건축이나 농법들을 보급하고 확산시켰다.

농촌의 농민들, 생산자들로부터 시작해 2003년부터 유기농을 확산하고 2005년부터는 도시의 소비자들과 만나는 움직임으로 확장했다.

나아가 소비자들을 함께 참여시키면서 2008년부터 CSA공동체지원농업³⁾을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이 움직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고학력 청년들을 포함해 많은 젊은이들이 직접 농촌에 가서 농장 또는 창업을 하거나 농업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의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그를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8년에는 처음으로 북경 근교에 시민농장을 만들었다. 시민들이 와서 농사에 참여하

며, 실제로 농장 관리도 맡고 있다. 채소를 수확해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얻는 수입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각지에서 이런 연구와 실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발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시 소비자들과 농촌 생산자들을 연결시키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현재 중국에 생산자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은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들도록 권고했을 때
농민들이 가입하는 모습



생산자협동조합을 통해서 유기농을 확산시키는
당시 유기농 실험실 모습

3) 원테젠 교수는 이것을 '사회생태농업'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편집자 주)



2016년 열린 제8회 CSA 대회

데 이 조합들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가깝다. 따라서 도시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산물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정신에 의거해 생산된 생산물들임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구분해 알려내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다. 하나의 대안으로 3년 전부터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PGS참여형 인증 활동이다. 것처럼 국가표준이나 제3자 인증이 아닌 소비자나 여러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인증하는 방식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SA 농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명도를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증을 택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참여해 믿고 이용하고 있다. CSA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확산시키려 한다. 매년 개최되는 CSA 대회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후 방향은 이처럼 시민들, 모든 사회 성원들이 참여하는 농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민농장의 사례처럼 ‘사회화된 생태농업’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이 협력하면서 다양한 경영 모델을 만들어가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직전까지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신농촌 건설, 생태문명 건설이 자본을 위주로, 자본이 농촌에 들어가서 진행시키는 방식이었고 그 과정에서 농업생산 과잉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들이 귀농귀촌해서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적 농업의 문제가 백 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동안 많은 모순이 쌓이고 이익집단이 생겨났고, 이들이 쉽게 자기들의 이익을 양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금씩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확산해가는 동시에 사회 변화 흐름에 발맞춰 사상과 실천을 만들어간다면 점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이웃나라 대만이 궁금하다 대만 사회, 농업과 먹거리운동

허남혁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싼 글로벌한 관계와 로컬에서의 대만에 관심을 쏟으며 연구하고 있다.
hurnh@naver.com

몇 년 전부터 해외여행지로 대만타이완이 부상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인이 많이 찾은 해외여행 도시에 타이페이가 방콕을 누르고 3위에 올랐다(1위 오사카, 2위 도쿄). 망고빙수, 평리수, 대만 카스테라, 우육면, 풍등, 스린 야시장이 대만 여행을 상징하는 아이템들이다. 하지만 대안농업과 먹거리운동에 있어서는 대만을 주목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만 쳐다봤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만이 학교급식에서 GMO 식재료를 법률로 금지시켰다는 소식에 고무되어 우리 먹거리운동에서 대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탈핵 선언을 우리보다 먼저 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 글은 대안농업과 먹거리운동에 관심 많은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대만을 소개한다.

대만은 어떤 나라인가

경제와 농업, 먹거리

인구 2,350만 명, 면적 36,197km² 이니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와 부산, 울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약간 더 큰 면적에 수도권 인구가 살고 있는 셈이다. 평지와 산의 비중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높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서 3천 미터급 산이 즐비하다. 언어는 중국 본토와 같다. 단, 간체자를 쓰는 중국과 달리 획수를 줄이지 않은 번체자를 쓴다.



1인당 GDP(명목)가 한국(27위, 29,115달러)보다 약간 아래(33위, 24,028달러)라고 해서 우리보다 못산다고 짐작하면 큰 오산이다. 물가수준을 보정한 1인당 실질 GDP는 우리(30위, 37,740달러)보다는 한참 위(18위, 48,095달러)로 독일과 비슷하며 일본(27위, 41,275달러)보다도 위에 있다.

북위 25도 정도의 아열대 지역이라 겨울에도 눈과 얼음을 볼 수 없고 우리나라 봄·가을 수준이다. 봄·여름·가을은 항상 우리나라 한 여름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비가 두 배 더 많이 내린다.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등 열대과일의 천국이고, 벼를 3모작까지 재배한다. 하지만 생산액으로 최대 농업생산물은 돼지고기이다. 그리고 닭고기, 쌀, 계란, 차 등이 주요 생산물이다. 식량자급률은 34% 수준으로, 한국의 칼로리 식량자급률이 40% 선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나 일본(38%)과 큰 차이는 없다. 밀, 콩, 옥수수, 유지류를 수

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1헥타르로, 우리나라의 1.54헥타르보다 작다(일본은 2.35헥타르). GDP(명목) 대비 농업 비중은 1.3%로 우리나라 2.7%의 절반 수준이고 일본(1.2%)과 비슷하다.

역사 - 일제 식민지배, 국민당 정부, 미국의 원조

대만에 원래 살던 원주민은 중국인이 아니라 6천 년 전쯤 남태평양에서 건너온 폴리네시아 종족으로, 하와이나 이스터섬 원주민과 동일한 계통이다. 중국 남부(북건성)의 중국인이 16세기말 명나라의 해안선 봉쇄정책이 풀리면서 대만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즈음 중국, 일본과의 교역로를 찾던 네덜란드가 대만을 먼저 점령한다.¹⁾ 네덜란드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고 중국인들을 데려와 설탕을 생산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자칫 필리핀의 운명처럼 서구의 식민지배가 영속될 뻔했던 대만은, 해양세력 정성공(鄭成功)이 1662년 네덜란드를 물리친 뒤 왕국(1662-1683)을 세우고 이후 청나라에 다시 넘어가면서 청의 한 지역(타이완성)으로 귀속된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 대가로 대만을 넘겨받으면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우리보다 앞선 대만의 일본 식민지배 역사는 50년에 달한다. 일본에게 조선은 쌀이 거의 유일한 주 생산품 및 수탈품이었다면, 대만은 사탕수수와 쌀을 절반씩 생산했으며 임산물(편백, 장뇌유) 또한 주 품목이었다(1939년 사탕수수 생산량 세계 7위). 일본에게 대만은 조선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은 식민지였고, 서

1) 중국 교역창구를 갖고 싶어 한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이 1557년 명나라에게서 할양받은 마카오를 빼앗는 게 여의치 않자, 동인도회사를 앞세워 1624년 대만 남부(타이난)를 차지했다. 대만은 포르모사(Formosa)로 불렸다. 1653년 난파, 제주도에 불시착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직원 하멜은 실은 대만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이었다.

구에 일본 식민지배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전시장이었다. 그런 이유로 조선에 비해 지배가 혹독하지 않았고, 그래서 식민지배 시기에 대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나쁘지 않은 시절이었다는 기억이 매우 강하다. 이는 대만 사회가 단일민족인 우리와는 달리 지배와 피지배층이 매우 여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민지배 이전에 단일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1945년 2차대전 종전과 미 군정의 지배, 그리고 미국의 원조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 단,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면서 한국전쟁을 겪었다면, 대만은 1949년 모택동이 중국을 차지하면서 국민당 주석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신, 국민당 정부를 세웠다는 것이 차이다.²⁾ 1945년 이후 새로 들어온 중국 본토인은 외성인, 그 이전 수백년에 걸쳐 유입된 이주민은 본성인이라 부른다. 즉, 대만에는 외성인(14%)-본성인(84%)-원주민(2%)의 복잡한 지배·피지배 구조가 존재한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48년 중국 본토에서 설립, 49년 대만으로 옮겨온 중국 농촌부흥 연합위원회(JCRR)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우리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JCRR은 대만의 농지개혁, 농촌개발, 농업 근대화를 이끌면서,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1979년까지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지속하였고, 이후에는 행정원 농업위원회(COA)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2) 1949년 시작된 국민당 일당독재와 계엄령은 각각 1996년과 1987년에서야 끝날 만큼, 국민당의 독재와 철권통치는 우리나라 군사독재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다. 장개석(장제스)의 독재는 75년 사망 이후 아들까지 이어져 88년까지 계속됐고, 96년부터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해지면서 야당 민진당은 2000년이 되어서야 천수이볜 총통(2000~2008)으로 집권에 성공한다. 2016년 민진당은 여성 차이잉원 총통을 다시 당선시킨다.



영화 <워리어스 레인보우>³⁾



영화 <비정성시>⁴⁾

쓰위 사건 - 암담한 미래, 하지만 진보적인 사회정책

대만은 OECD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는 한국이 출산율 세계 최저 1위이지만, 전 세계 국가로는 싱가포르(0.82명), 마카오(0.94명), 대만(1.12명), 홍콩(1.19명), 한국(1.25명) 순이다(2016). 그만큼 아이 낳아 키우기 만만치 않은 경제 여건과 암담한 그 나라의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다(그래도 자살률은 우리보다 낮다). 무엇보다 독립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양안관계), 그로 인해 외교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의 불안정한 지위가 큰 문제다. 대만 국민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3) 대만에서는 우리처럼 규모가 큰 대일항쟁은 별로 없었으나 하나를 꼽자면 1930년 대만의 한 원주민 종족이 반란을 일으켜 일본 군인 수백 명을 몰살시키자 일본이 원주민을 다시 몰살한 우서(霧社) 사건이 있다. 2012년 오우삼 감독이 <워리어스 레인보우>라는 영화로 만들었다.

4) 대만에서 본성인에게 외성인은 일본인보다 더 악랄한 지배자일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화된 것이 외성인이 본성인을 최대 3만명 학살한 1947년 2.28사건이다. 이 사건은 5.18 광주항쟁에 비견된다. <비정성시>는 이 시기를 다룬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수상작이다.

지난 2015년 말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쑤위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국기를 흔들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쑤위에게 대만 독립주의자 아니냐는 혐의가 씌워지며 중국·대만 양쪽에서 파장이 일고 외교관계가 경색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했다. 10대 소녀 쑤위는 과연 중국인인가, 대만인인가. 1996년 조사에서 자신이 ‘대만인이면서 중국인이다’고 답한 사람이 49.3%로 다수였고, ‘대만인이지만 중국인이 아니다’는 24.1%, ‘중국인이지만 대만인이 아니다’는 17.6%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대만인이지만 중국인이 아니다’가 59.0%로 크게 늘어 다수가 되었고, ‘대만인이면서 중국인이다’는 33.7%로, ‘중국인이지만 대만인이 아니다’는 3.3%로 크게 줄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대만 독자노선을 내세운 민진당의 2016년 집권을 가능케 했다.

민진당 시대의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대만 최고법원은 아시아 최초로 2017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이는 9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만 여성운동의 결과로 본다.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고, 차이잉원 정부는 2016년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에 35세 트랜스젠더인 천재 해커 오드리 탕을 임명한다. 또한 공약이었던 2025년까지 원전 순차적 가동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핵 선언을 실천에 옮긴다. 오랫동안 사회운동 세력과 함께 장외투쟁을 해왔던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진보적 정책들을 도입한 결과다. 2017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만의 정책을 따라가는 형국이다.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대만의 사회운동과 사회정책에 급거 관심을 갖고 학습하고 있는 중이다. 환경교육, 생태교통, 마을만들기 등 최근 중요해지는 사회혁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지방자치와 마을만들기 - 읍·면·동장을 선거로 직접 뽑는다

대만의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도(광역시) - 시·군(기초) - 읍·면·동과 같은 수준으로서, 시市·현縣(광역시) - 구區·향鄉·진鎭(기초) - 리里·촌村이 있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의 읍·면·동장과 같은 수준인 이장과 촌장을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별도로 대만에는 주민의 대표자치조직인 커뮤니티지역공동체, 社區 조직들이 존재한다. 대만 정부는 문화부 주관으로 1990년대부터 지역공동체 만들기社區營造를 통한 문화사회 창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농촌재생 프로그램을 지역공동체 조직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향토산업

대만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변변한 대기업이 없어도 중소기업과 향토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나라다. 그래서 경제구조가 우리보다 건전하고, 지방이나 농촌 지역 또한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지역의 농회(농민조직+농협)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내는 농산가공품도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다. 단위 농협 수준에서 만들어낸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음료, 과자류, 아이스크림을 지역 농회에서 직접 또는 지역업체 위탁가공을 통해 만들어낸다. 이런 가공품들은 관광지에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특산물 판매 매장들에서 판로를 갖게 된다.

오키나와처럼 사탕수수가 여전히 재배되고 이를 이용해 비정제당(흑당)을 생산할 수 있어서 흑당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류가 생산된

다. 이는 우리가 대만, 또는 사탕수수·사탕무를 동시에 생산하는 일
본을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다.

대만의 농업과 먹거리운동

돼지의 섬 - 대만 양돈업의 흥망성쇠

중국인들이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을 생산하고 소비할 정도로 전통적
으로 중국인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며, 대만인도 마찬가지다. 미국 원
조곡물과 함께 양돈업이 급성장하였고, 1970년대 우리나라처럼 일본
수출이 급증했다. 1996년 말까지 대만 양돈업은 연간 1천만 두를 키
우고 1,430만 두를 도축하는(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숫자) 세계 15
위의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수출국이었다.

그런데 1997년 3월 터진 구제역 사태가 대만 양돈업을 몰락시켰다.
수출길이 막히고 살처분이 이루어졌다. 소농들은 탈농했다. 이후 대
만 양돈업은 국내 수요만을 위한 생산이 되었고, 생산량은 거의 절반
으로 줄었다. 영국의 광우병 사태만큼이나 대만의 구제역 사태는 축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를 일찍부터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했
다. 대만 축산업(돼지, 닭)의 한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사료업체
와 농민 간의 계약생산(수직계열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대만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해 독자적인 사료배합시설을 지원
했기 때문에 굳이 사료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이다.

농협

대만에서는 농민들의 지역별 회원조직인 농회農會(farmers' association)가 우리의 농협과 같다. 품목농협이 아니라 일본, 한국처럼 종합농협이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은 우리와 같지만, 우리는 해방 후에 농협(농업협동조합)으로 정리된 반면, 대만에서는 농회 조직이 계속 유지되었다. 전국 농회 - 시·현 농회 - 향·진 농회로 나뉜다.

한국 농협과의 차이점은 농민들의 회원조직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과 출자금 제도가 없다는 점, 2013년에야 만들어진 전국농회가 우리처럼 단위농협을 좌지우지하지도 전국적인 금융기관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대만에도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농회超市(농회수페)는 있다. 한국의 수협과 같은 조직은 어회魚會이다.

생협

대만에는 생협조직이 대만 주부연맹 생활소비합작사合作社=협동조합⁵⁾ 하나밖에 없다. 1993년 공동구매 조직으로 출발, 2001년 정식 생협으로 출범했다. 전국 점포수 51개, 조합원 수 71,700명, 직원 수 500명, 출자금 140억 원 규모이며(2017. 7), 농지면적 600헥타르, 농민 150명, 가공생산자 200명, 공급품목 수는 700개에 달한다(2017. 1).



대만주부연맹생활소비합작사

전국의 유기농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

5) <http://www.hucc-coop.tw>

자들의 공동구매를 강조하며, GMO 반대운동과 학교급식 운동의 핵심에 서 있다. 핵심 이념은 “환경자원 사랑, 국내농업 지원, 공동구매 노력, 녹색생활 실천, 협동조합정신 발휘”이다.

학교급식

대만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 들어 학교급식(학교오찬學校午餐)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1992년 학교위생법 제정).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교실배식 중심이며 급식 형태는 학교직영 중심으로, 학교 단위로 식재료를 입찰로 구매하는 방식이 다수다.

2010년대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유기농 및 로컬푸드 우선구매를 명시하는 학교급식 자치조례를 제정하였거나, 학교급식 로컬푸드 확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유기농, 로컬푸드 식재료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보공개와 인터넷 강국답게 국가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있다(교육위원회 학교급식 식재료정보 플랫폼⁶⁾). 사용 식재료를 학교 단위·날짜별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원산지, 생산자, 인증, 영양성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학교위생법〉을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지역 우량농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15년 12월 재차 개정하여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들, 특히 GMO 사용금지 성과를 가져온 대만 학교급식 운동의 배경에는 환경운동단체인 주부연맹 환경보호기금회(재단)⁷⁾와 자매단체인 주부연맹 생활소비합작사가 급식운동에 주력한 밑바탕

6) <https://fatraceschool.moe.gov.tw>

7) <http://www.huf.org.tw>

○ 타이난시 학교급식조례(2012)

－ 제2조 3. 농업국의 역할 : 농민들의 지역농산품 표시를 장려하고, 지역식재료(로컬푸드)를 확대 추진한다.

○ 타이중시 학교급식조례(2016)

－ 제4조 학교급식 제공의 원칙 4. 지역식재료의 비중을 제고하고, 국가 농업기관이 인증한 지역 우수농업산품을 우선구매한다.

○ 이란현 : 2010년부터 학교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확대계획學校午餐在地食材推廣計畫을 시행하고, 2014년 <유기농업 촉진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 유기농 식재료 구매를 확대

－ 제9조 주관기관은 녹색구매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산 유기농산품을 구매하도록 지도한다.

－ 2015년 9월 <이란현 음식건강권 자치조례> 제정·공포 : 건강한 음식 환경, 안심할 수 있는 음식, 영양필요 충족, 음식문화 전승을 달성하여 현민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1)환경친화적 농업, 지산지소, 식량 자급률 달성 관련 2)음식문화 전승과 식농교육 관련 3)가정, 지역, 학교 및 공공·민간부문에서의 음식건강교육 관련 4)식품안전 관리 관련 5)환경교육 및 식품제조환경 감시 관련 6)음식건강 장려시책 관련 사항을 관장하며, “음식건강추진위원회” 결성

이 컸다. 이는 200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선풍적 인기로 힘입어 시작한 식농교육 워크숍부터 시작해 점차 다양한 급식 관련 의제들을 제기하게 되었고, 2010년 이후부터 지자체들의 로컬푸드, 유기농 식재료 사용 등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GMO 문제도 2014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장·현장(광역) 후보자들에게 GMO 사용금지 선언을 차례로 받아내면서 마침내 전국 의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⁸⁾ 대만 학교급식운동과 GMO 반대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온라인 기반이라는 점이다. 정보 수집 및 발신 기능에 충실한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에서의 서명운동 등에 충실하면서 오프라인 강연회 등을 곁들였다.

식생활교육 - 식농교육

우리나라에서 그랬듯이 대만에서도 일본의 식육기본법(2005)을 벤치마킹해 식생활교육법을 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대만 농업위원회(농림부)는 식농교육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하게 기울인다. 식농食農교육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의 식생활교육 개념보다 좀 더 명시적으로 농과 식의 관계성을 교육의 핵심요소로 둔다(식농교육 = 음식교육 + 농업교육). 우리 식생활교육 3대 가치가 건강, 환경, 배려라면, 대만 식농교육의 핵심 가치는 지역(지산지소), 환경(녹색소비), 건강(건강음식), 농업(친근토지)이다.

8) 학교급식운동 관련 온라인 정보포털 <學校午餐22> (<http://www.schoollunch.tw>). Non-GMO 학교급식운동 관련 온라인 정보포털 <校園午餐搞非基> (<https://nogmolunch.wordpress.com>).



농업위원회의 식농교육 포스터 - 지산지소, 녹색소비, 건강음식, 친근토지

유기농업

대만은 유기농 국가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유기농업을 시작해 유기농 면적은 전체 농지 대비 0.81%(한국은 1.04% - 2015 국제통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농민시장이나 일반 매장들에서 유기농 인증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유기농 전문 매장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농민시장과 농민직판장, 로컬푸드

대만에는 농민이 직접 자신의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이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형태로 더 활성화되어 있다.⁹⁾ 타이페이 시내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소농

9) 최신 목록 <http://blog.xuite.net/im918260/twblog/333145745>



 **小農耕作**
Peasant Farming

 **綠色消費**
Green Consume

 **糧食自主**
Food Sovereignty

 **在地農業**
Local Economic

소농회복 그룹에서 운영하는 彎腰農夫市集의 슬로건 - 소농경작, 녹색소비, 식량자주, 지역농업

이 판매하는 소규모 농민시장¹⁰⁾부터 상당히 큰 규모의 농민시장¹¹⁾까지 여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농민의 판로 다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가능해진 결과이다.

일본의 농민직매소를 벤치마킹한 농민직판장 역시 최근 들어 많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상케 하는 농회의 직판장들은 소규모 무인판매대나 하나로마트 같은 농민수퍼 내의 직판코너, 그리고 로컬푸드 식당과 가공시설까지 복합시킨 복합직판장 등이 있다.

대만에서도 일본에서 가져온 지산지소地產地消, 그리고 로컬푸드의 번역어인 재지식재在地食材 같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지역에서의 농민직판이나 학교급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용어들이 대만산 식재료를 선택하고 소비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대만이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소농을 강조하는 추세도 보인다.

10) 소농회복을 도모하는 그룹(<http://www.smallfarming.org.tw>)에서 운영하는 彎腰農夫市集(<http://bowtoland.blogspot.kr>)과, 田裡有腳印시장(<https://www.facebook.com/footprints.market>) 등이 있다.

11) 신베이시 농회가 운영하는 희망광장 농민시장(<http://www.ehope.org.tw>)과 타이베이시 농회가 운영하는 엑스포 농민시장(<http://www.expofarmersmarket.gov.taipei>)이 대표적이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카놀라유, 간장, 두부
: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 눈에 가장 잘 띄게 표시하고 있다.

GMO 반대운동과 표시제

GMO 아님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의 슈퍼나 마트 어디에서든 비유전자조작非基改造, non-GMO 표시가 붙은 식용유, 간장, 두부, 두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는 노점이나 야시장 몇몇 상인들도 팻말에 “비유전자조작”을 표기했다. 그만큼 GMO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GMO 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 중 한 명인 구오후아런郭華仁은 대만국립대학 농학과의 종자학 전공 퇴임교수로, GMO 자료사이트를 운영한다.¹²⁾

채식

대만은 우리보다 고기 소비량이 더 많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과 종교(불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채식주의자도 많은 편이다. 그래서 대만 곳곳에서 소식素食이라고 쓴 식당 간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12) <http://gmo.agron.ntu.edu.tw>

곳이 바로 채식 식당이다.¹³⁾ 또한 이런 식당들은 많은 부분 유기농 식재료와 연결된다.

문화 및 역사재생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근대화 시대의 농협창고나 양곡창고, 도심의 공장 등을 그대로 둔 채 재생하여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농촌 사례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순천(청춘창고), 담양(담빛예술창고), 제주(느영나영 마을카페), 김제(동김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정도가 손꼽힌다. 이 분야에서는 대만이 수적·질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다. 대만의 주요 쌀 생산지로 유명한宜蘭宜蘭시 기차역 앞 일제시대 미곡검사소 건물은 지자체가 재생해 작가 황춘밍黃春明이 운영하는 문화활동 공간 겸 카페로 사용된다. 황춘밍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시기에 유명했던 영화와 연극 〈칠수와 만수〉의 원작자로, 지자체에서 활동 공간을 위탁해 준 것이다. 또 다른 작은 간이 기차역 앞의 일제시대 미곡창고는 지금 쌀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다. 일제시대 임산물 수탈을 위해 놓였던 철도역 공간은 임업문화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문화창의공원들은 각각 일제시대 양조장(화산1914 창의회화원구), 담배공장(송산문창원구), 설탕공장(당부문화원구)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현대적 감각을 살려 리모델링한 것이다. 그곳에 각종 카페, 바, 공방, 전시 공간, 공연 공간 등을 입점시켜 현대문화예술 및 디자인산업(문화창조산업)의 활성화와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 공간이나 판매 제품 역시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갖는 아이템이 많다. 농업이나 음식이 문화·

13) 대만 내 녹색먹거리 지도 <https://goo.gl/udRcR2>

역사적 스토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휴양농업과 관광공장

대만은 2000년대 들어 수입개방에 직면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 공간을 통해 국민에게 여가·휴양을 제공하는 목적에서 휴양농업(휴한농업休閑農業)¹⁴⁾을 본격적으로 장려했다. 휴양농업 범주에는 숙박과 식사, 체험의 제공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조되는 치유농업이나 교육농장 등 유럽의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 포함된다. 현재 휴양농장 300여 곳, 휴양농업지구 75개 소가 조성되어 있다.

관광공장觀光工廠¹⁵⁾은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개념인데, 말 그대로 공장을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제품 생산과정을 이해·체험하고 생산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사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관광공장은 농업이나 음식과 관련된다. 공장 수준이 아닌 소규모 공방이나 주방 수준도 포함된다. 가령, 쌀 도정시설(RPC)이나 양조장도 관람과 판매의 장소가 되고, 지역의 식품가공업체들도 상당수가 관광공장 형태로 개방된다. 지자체마다 관광공장협회가 결성되어 있고, 추천 관광공장을 소개하는 종합 안내 팸플릿이 제공된다.

쌀

27만 헥타르의 논에서 연간 160만 톤가량의 쌀을 생산한다(한국은 78만 헥타르에서 400만 톤 수준). 대만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우리와 같은 자포니카쌀을 생산하고 먹는다. 대만에서도 쌀은 사회적·문

14) <http://www.taiwanfarm.org.tw>

15) <http://taiwanplace21.org.t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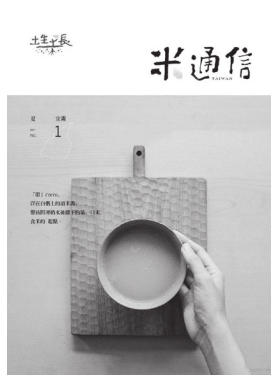


현대무용 <rice>

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만의 저명한 무용가 린화이민이 2013년 만든 <쌀rice>이라는 현대무용 작품은, 90년대부터 화학농법을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면서 유명해진 대만 타이둥현 츠샹향池上鄉에서 무용수들과 직접 농사지으면서 자연과 벼의 순환성에 영감을 얻어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일본에서 지역별로 먹거리를 부록으로 주는 잡지 <타베루 통신>¹⁶⁾에서 영감을 얻어 최근 대만에서 <쌀 통신米通信>¹⁷⁾이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생산자, 품종, 요리법 등 쌀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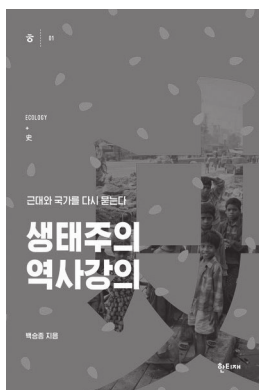


<쌀 통신> 표지

16) 다카하시 히로유키, 『우리는 시골 농부를 스타로 만든다: <다베루 통신>의 도전』, 염혜은 역, 마루비, 2016.

17) <https://www.facebook.com/taiwanricepress>

생태주의 시선에서 역사를 다시 쓴다면



생태주의 역사강의
백승종 씀, 한티재, 2017

강태원

대구의 역사교사로 대구역사교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히로시마 역사 교사들과 한일공통의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공통역사교재를 편찬하였다.
kangtown@chol.com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역사’ 하면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왕조사 중심의 흐름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한국사의 흐름은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

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나를 비롯해 현장의 역사 교사들에게도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 활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바른 역사 교육인가? 현재 우리의 역사 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역사 교과서는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쓰여야 하는가? 나아가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수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등이 내 고민의 주요 지점이었다.

이들 고민과 관련하여 최근에 역사 수업을 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삼국의 발전’ 단원을 가르칠 때 나는 교과서에 서술된 삼국의 발전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찾아보게 했다. 학생들은 대체로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 체제의 정비, 율령 반포, 영토 확장, 불교의 수용 등을 꼽았다. 우리 교과서에서 삼국의 발전은 곧 왕권 강화와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만약 여러분이 일반 백성이었다면 율령 반포, 영토 확장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영토 확장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령 반포는 신분제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선 발전이 아니라고 말했다. 물론 여기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발전은 ‘더 나은 것으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고대 이후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했다는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질적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특히 경제사는 토지제도의 변화, 생산 기술의 발달, 상업과 수공업의 변화 등으로 생산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회 구성원 각자의 입장에서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가령 농업의 발전이라면 농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나아진 면 또한 있었을 텐데 이러한 관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동학농민운동’ 수업에서는 한 여학생이 당시 여성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여성의 관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연구한 논문이나 글을 본 적이 없었다. 분명 인구의 절반은 여성일 텐데 역사 교과서에는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만큼 여성의 시각도 다뤄지지 않는다.

물론 사료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알려지지 못한 때문이라 할 수도 있지만 꼭 그 이유에서만은 아닌 것 같다. 그 보다는 이런 시각 자체를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현장의 역사 교사가 만나는 당황스런 상황의 원인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해 준 책이 『생태주의 역사강의』였다. 이 책은 백승종 교수가 격월간 『녹색평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물론 다양한 사료와 엄격한 논증의 연구서는 아니지만,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마치 높은 산 위에 올라 탁 트인 시야로 역사의 사방을 보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근대 역사학을 넘어

우선 저자는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갖고 있는 일직선적인 진보사관, 국민 국가 중심의 역사 서술의 기원이 랑케로 시작되는 실증주의 중심의 근대 역사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근대 역사학을 대표하는 랑케는 역사학이 실증적 과학임을 주장하고 근대 국가를 이성의 집합적 상징으로 미화하였다. 그는

근대 국가가 인간사회에 자유와 평등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랑케의 이론은 근대 국민 국가의 정치적 이념을 합리화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 그 결과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전쟁과 대립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둘째 직선적인 진보사관을 맹신한다는 점이다. 과학 만능이 신화를 펴뜨리고 산업화를 적극 찬양했다. 그리고 공업화야말로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라 선전했다. 그리고 경제 지상주의에 편승하여 무한 경쟁을 정당화하고 부추겼다.”

물론 우리 역사 교과서가 갖고 있는 시각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근대 역사학에서만 찾는다면 랑케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분명 근대 역사학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랑케 이후 역사 관련 연구자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생태주의라는, 근대 역사학과는 다른 역사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책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인 생태주의는 노르웨이 철학자 네스가 주창하였고, 이후 환경주의 학자들에 의해 계승된 개념이다. 여기서 생태주의란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대등한 고유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생명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태계는 유기적이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과 각종 사물이 실상은 상호 불가분의 유기체들이다”라는 말에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개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인간의 편의와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파괴해 왔다. 이 같은 인간 중심적 사고의 기원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

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아마 성경의 이러한 가치관이 근대 산업혁명 이후 서양인들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그렇다면 생태주의 시각에서 역사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근대 역사학의 틀에서 벗어나 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근대 역사학은 일직선적인 발전사관으로 인해 국가 혹은 소수의 지배 권력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시민들은 타자화되어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한다. 설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나 중앙의 집권세력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 역사관은 현재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역사의 다수를 차지했던 일반 백성이나 여성에 대한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령 삼국 통일 전쟁에서도 이름 없이 죽어갔던 여러 신분의 사람들, 고구려인이나 백제인 같은 패자를 배려하는 시각은 없다. 저자는 근대 역사학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 중심의 역사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실명의 개인, 억압된 젠더, 그리고 소규모 공동체를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끌어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평범한 시민 가족의 역사, 마을 공동체의 경험을 역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생태주의 역사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근대 국민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꾀한다. 명백한 지향은 일체의 폭력과 전쟁을 근원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이다. 생태주의에서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대가 한층 강화된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생태주의 사회는 경제 지상주의를 거부하고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

셋째,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자 한다.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무너

뜨리고 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또한 개인과 단체의 독립과 자립을 꿈꾸면서도 연대와 협력을 여러 층위에서 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마디로 생태적 전환은 인간의 탐욕에 의한 생태계 착취를 중단하려는 시도이다. 그리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평화를 선사하고 생태적 존재로서 본성의 회복을 촉구한다.

요컨대 생태주의 역사관이란 ‘모든 존재가 그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 의지하며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갑오동학농민혁명과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후쿠시마의 비극, 민주정치의 역사와 그리스 사태, 유럽의 브렉시트 등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생태주의 시선에서 본 역사의 장면들

먼저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견해는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과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지주-전호제를 조선 후기의 중심적인 생산관계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필자는 당시 사회를 소농 사회로 본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와 성격에 대해서도 소농과 평민 지식인이 연대한 투쟁이라 규정한다.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병갑 같은 봉건 관료의 침탈보다는 조정의 무분별한 무역 개방 정책에서 찾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운동의 목표에 대해서 만민의 평등과 더불어 가진 사람과 없어서 못사는 사람이 서로 도와 사는 경제 공동체를 추구했으며, 일체의 차별이 해소되는 사회를 지향했다고 설명한다. 겉보기에 동학은 일개의 종교 운동이지만 실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 개혁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동학농민운동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

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의 시각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익히 배워온 갑오동학농민운동과 차이를 갖는다.

하지만 조선 후기 사회를 과연 소농 사회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미야지마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소농 사회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리거나 간에 기본적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행하는 소농의 존재가 지배적인 사회를 지칭한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소농 사회는 조선 후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양반이나 서민 지주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한 조선 후기의 소농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소농과 평민 지식인의 연대라는 인식도 생소하다. 여기서 말하는 평민 지식인이란 신분상 평민으로서 학문의 소양을 갖춘 사람인지 아니면 몰락한 양반으로 평민화된 지식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운동과는 전혀 다른 시각임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이다. 당시 시대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은 일바적인 시각이다. 즉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지도자로 보는 긍정적 평가와, 독선과 아집, 지역감정 조장,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하고 장기 집권하려던 독재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독재자였다는 시각이다. 반면 생태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본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명확하다. “박정희는 시민사회가 바라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였고, 오랜 자치의 전통을 사실상 말살하였다. 중앙에 대한 지방의 종속을 강요하였고, 강대국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청국가의 소임을 자청하였다. 게다가 남의 나

라 전쟁에 끼어들어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였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또 정경 유착으로 재벌구조를 만들어 장차 한국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그는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였으며 선불리 핵폭탄의 개발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박정희의 삶은 생태적 가치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저자의 시각은 현 역사 교과서에서의 평가와도 다르다. 나 역시 전체적인 틀에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에는 동의하지만, 한편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박정희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박정희 시대에 대통령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지만, 그가 행한 정책이 가능했던 데는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도 한몫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개인과 시대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외에 이명박 정권에 의해 추진된 4대강 개발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인간 중심의 자연 약탈을 통한 경제성장과 과잉 산업개발이 낳은 재앙으로 보고 있다. 공업 중심의 발전 사관은 과거와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이다. 이러한 시각과 사고로는 더 이상 인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기에 새로운 역사에 대한 시각이 요청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생태주의 역사관이라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저자의 인식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이후 역사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와 역사 교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는다. 생태주의나 녹색 담론은 공업화, 도시화 등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생각했을 뿐, 역사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흔치 않았다. 그런데 생태주의적 관점이란 저자의 역사적 시각은 현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현재 역사 교과서를 어떤 시각과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역사교육 연구자와 현장 교사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변화하는 지역, 변화를 만드는 지역



로컬지향의 시대 - 마을이 우리를 구한다

마쓰나가 게이코 씀, 이혁재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17

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오랫동안 농촌에서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다.
01048446865@naver.com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 혁신학교로 유명해진 초등학교 주변에는 살
만한 집이 없어서 새로운 집이 들어선 지 오래되었고 면소재지에 나
서면 어렵지 않게 젊은 친구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조그만 장터를 열더니 최근에는 동네 깊은 오지에서 청년 영화제를 열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덩달아 아이들도 많아졌는지 읍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가 늘었고 입학 전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내년에 읍내 고등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로 전환된다고 한다. 불 켜진 집이 몇 개 없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느 날 동네 한구석에 불쑥 생동맞은 아파트가 올라갔고 아예 군청이 나서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일하게 되어 전북 완주군 고산면으로 이사한 것이 2012년 3월인데, 5년 사이 동네가 많이 변했다.

이러한 현상은 내가 살고 있는 시골 동네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7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귀농귀촌 가구는 336,312가구로 2015년 317,409가구에 비해 늘었으며 인구수로는 50만에 육박했다고 한다. 또한 우리 동네에서 보듯 2016년의 두드러진 현상은 농촌으로 들어오는 30대와 40대 젊은 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귀농귀촌이 전 세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1기생으로 귀농학교를 다닌 후 『이래서 나는 농사를 선택했다』라는 귀농 관련 인터뷰 책을 쓰면서 별난 인간으로 취급받았던 나로서는 전국귀농운동본부에 있는지도 몰랐던 농정당국이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점에는 귀농과 관련한 책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의 무대가 된 ‘지역’

『로컬 지향의 시대 - 마을이 우리를 구한다』는 한국이 10년 뒤를 쫓아간다는 일본이 미리 겪은 유사한 현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마쓰나가 게이코松永 桂子は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의 전문가로, 새로운 개념으로 농촌과 지역을 변화시킨 사례와 대도시를 떠나 농촌과 지역에서 다른 삶을 시작한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 원인과 미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원인은 우리와 유사하다. 가장 큰 계기는 ‘퇴직’이지만 여유로운 삶, 슬로우 라이프,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주 원인이라한다. 저자는 또한 정보화의 진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느슨하게 뭉쳐있는 SNS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된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카페를 시작으로 다양한 상점가를 만들어낸 시마네현의 고쓰시, 비즈니스 플랜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창업을 유도해 성공을 거둔 사쿠라에정, 섬 유학제도를 통해 인구를 늘린 리토섬의 아마정, 대도시 IT업체의 위성사무소를 오래된 가옥에 유치한 그린베레가 활동하는 도쿠시마현의 가미아마정,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연대하여 시너지를 창출한 오사카의 신일본테크, 디자인 프로젝트로 지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히가시오사카, 마을 브랜드로 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킨 시코쿠 에히메현의 이마바리, 자기산업에 술, 메밀국수, 된장을 접목시켜 농업까지 활성화한 나가사키의 하사미 도자기, 장인대학이라는 인재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을 일으킨 효고현 고베시, 맛을 주제로 인구를 유치해 A급 맛자랑 마을을 만든 시마네현 오난정, 폐기물 재활용으로 계층 간 화합을 도모한 시즈오카의 이케다정 등 지역을 살린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다. 저

자는 이러한 사례를 자기경영이라는 젊은 층의 새로운 성향, 재조명 되는 자영업, 새로운 분업과 협업, 지역의 가치를 중심에 둔 디자인과 브랜드, 이윤의 경제가 아닌 가치의 경제라는 주제로 나누어 친절히 설명한다. 또한 유럽 사례인 이탈리아 토리노시와 독일 작센주의 이야기를 곁들인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저성장과 불황을 겪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과 관련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른바 단카이세대(2차대전 이후 태어난 세대)가 누렸던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며 고용 안정화에 기여한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 단기적 수익에 매달리지 않는 장기거래 관행, 다양한 경제 주체 간의 신뢰관계 등 다른 선진국이 부러워한 일본형 자본주의의 미덕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저자는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지난 경험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어제는 다른 모델을 만들어가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생산하는 인간에서 소비하고 창조하는 인간¹⁾으로, 익명의 사회에서 얼굴이 보이는 사회로, 종적 연계에서 평등한 횡적 연대로, 개인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강력한 귀속에서 느슨한 동질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를 평론가 아마자키 마사카즈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다.

“과거 국가가 국민에게 귀속과 충성을 요구하고 공동의 목적을 내세우며 개인적 감정을 옥죄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감정의 조직

1) 책에서 저자는 “포스트 산업화 시대의 개인은 목적지향적인 ‘생산적 인간’에서 시간의 변화와 과정을 중시하는 ‘소비적 인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소비하는 자아’를 “과정 자체를 즐기고 과정을 추구하고 과정을 연구”하며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한다.(편집자 주)

방식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즉 집단에 감정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여러 조직에 소속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야마자키는 이를 ‘유연한 개인주의’라 불렀는데 이 유연한 개인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이라는 것이다. 즉, 지역은 목적 지향적 집단은 아니지만 개인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동시에 일정한 귀속감을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야마자키의 유연한 개인주의가 일본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이전과 다른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 이제 경제적 지표만으로 풍요로움을 측정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면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로컬 지향’이라고 칭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화폐적 발전모델 이후를 준비하자

나는 요즘 경제적이라는 말을 ‘화폐적’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한다.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용어로 쓰이지만 실상은 들어간 돈에 비해 산출되는 돈이 더 많은 경우에 적용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 비용과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단순히 더 많은 화폐가 생겼을 때 쓰는 용어이다. 이제까지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화폐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

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것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함으로써 경제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다. 즉, 경쟁력이 있는 핸드폰을 수출하여 돈을 벌고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은 수입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적 국가발전, 즉 경제성장은 그 옳고 그름과 실효성을 떠나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구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선진국의 과거 300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6%였고 이 절반은 인구증가 덕분이었다고 분석하면서 인구감소 현상을 고려하면 3~4%의 경제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그 추세가 같고, 저자도 메이지 근대화 이후 약 150년간 일본은 인구증가와 함께 GDP 증가가 일어났다고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1~2%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을 만들고 지원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을 만들어도 그 기업은 돈을 벌지 모르나 그만큼의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드릭 로르동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세계의 석학 30명의 논문을 모은 책 『르몽드 인문학』 중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라는 글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수주 상황이고 기업의 수주상황을 결정짓는 것은 경기, 즉 돈의 흐름이라 불리는 지표들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저자 또한 일본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비율 증가를 제시하며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지 않으며 기업과 사회의 이익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세 번째 이유는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던, 경제활

동을 뒷받침하는 자원들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명한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그의 책 『상상 오디세이』에서 식량Food, 에너지Energy, 그리고 물Water이 앞으로 부족해질 자원인데 흥미롭게도 이 세 영어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FEW거의 없다’가 되어 FEW가 few한 시대가 될 것이라 했다. 저자 또한 에너지와 자원의 문제는 일본이 직면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역시 자원의 한계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뒷다리를 잡을 것이다.

국가의 경제성장 모델, 즉 화폐적 발전모델은 국가의 전략산업과 연결된 공간, 즉 산업단지나 도시를 개발하면서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곳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만들어졌고 그 성과는 사회 전반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대기업의 소유물로 귀속되었다. 또한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지역과 개인을 동원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매개로 외부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를 개발하면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였다. 부모들은 논밭을 팔아 자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게 했고, 그들은 전공과 특기를 개발하여 노동자와 일꾼으로 동원되었다. 그러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결과로 오랜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이 쉽지 않아 국가가 지역과 개인을 위해 제공해줄 수 있는 대안이 별반 없어 보인다. 엮힌 데 뚫힌 격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지역경제의 대도시 종속화 및 파편화,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는 물, 에너지, 식량 공급체계의 취약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구조의 개편 등 지역사회와 개인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로컬지향의 시대 - 마을이 우리를 구한다』는 이러한 지역과 개인의 위기에 대해 비판주의와 낙관주의 사이를 오갈 것이 아니라 새로

운 사회의 태동을 감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얼굴이 보이는 소비’로 불리는 사회적경제의 확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느슨한 커뮤니티의 등장, 규모의 경제가 아닌 범위의 경제로의 이행, 클라우드 펀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투자의 확대 등 이미 우리 주변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특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에게도 희망의 징후가 보인다.

하지만 무작정 희망을 가지기에는 부족했다. 저자가 제시한 많은 사례들은 사례일 뿐이다. 우리도 많은 사례를 만들어왔고 농업과 지역을 담당하는 당국은 그 사례를 해법이라며 제시했지만 그저 특수한 해법이었다. 몇몇 개의 성공사례가 아니라 우리 농촌과 지역을 폐쇄하게 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농촌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를 이 책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허름한 지역사회의 건물을 빌려 창업에 성공한 젊은 이들이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귀농인이 용자를 통해 토지를 구입하고 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자발적 농노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답은 없었다. 예산을 지금처럼 쓰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정책을 바꾸고 무엇으로 지방정부를 움직이게 할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책에 그 모든 해답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이제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본능을 찾고 본능을 받아줄 수 있는 곳

농촌을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농사는 수천 년을 지속해온 것이고 누구나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농촌에서 농사와 관련된 일을 찾아내면 평생 할 수 있다는 말로 희망을 주고자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동영상에서 인공지능이 농사를 짓고 로봇이 농부를 대체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농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농촌을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해야 할지도 통 잡히지 않아 혼란에 빠졌었다. 그런데 생태건축 강좌를 운영하는 친구가 스스로 집을 짓지도 않으면서 찾아오는 많은 수강생들을 보며 사람에게에는 ‘건축본능’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맞다! 우리에게에는 본능이 있다. 경작본능, 목축본능, 요리본능, 공작본능, 가무본능... 본능으로 하는 일은 아마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중간고사를 마친 막내 아이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하루 밤 놀았다. 토요일 아침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일정을 이야기한다. 어떤 놈은 읍내 마당의 컨테이너에서 있는 음악 밴드 모임에 가고 어떤 놈은 오후에 청소년 센터에서 지도하는 연극 연습을 한다. 어떤 놈은 프레이그라운드라는 집짓기 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놈은 학부모가 도와주는 권투를 하러 간다.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동네 보통 아이들이고, 학교가 큰돈을 받으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렇게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본능을 찾아가고 있다.

내 본능은 무엇일까. 얼마 전부터 요리공부를 시작해 이제는 집에서 식사준비를 도맡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읍내에 청년들이 만든 공유부엌 ‘모여라 땡땡땡’에서 불금심야식당을 운영해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면 동네에서 일정한 양만 만들어 다 팔면 문을 닫는 조그만 식당을 하면 어떨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요리 실력으로 서울 종로 바닥에서 창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왜? 동네이니까. 본능을 찾고 본능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이다. 저자가 이야기한 유연한 개인주의를 허용하면서 느슨한 귀속감, 따뜻한 연대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지역이다. 맞다! 저자가 제시하지 않은 해법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지역사회의 집단적 경험과 지혜가 그 해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이 되어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받아 보세요!

《오늘의 교육》은 교육공동체 벗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교육전문지입니다.

(홀수 달에, 1년 6회 발행)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에서는 그동안 '교육 불가능',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논의를 이어 왔고 마을교육공동체나 학생 인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현안들을 다루며,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교육적 가능성과 실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 학교, 도서관, 단체 등 기관은 정기구독 가능 (1년 72,000원)
- 개인은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구독 가능하고
교육공동체 벗의 여러 활동에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